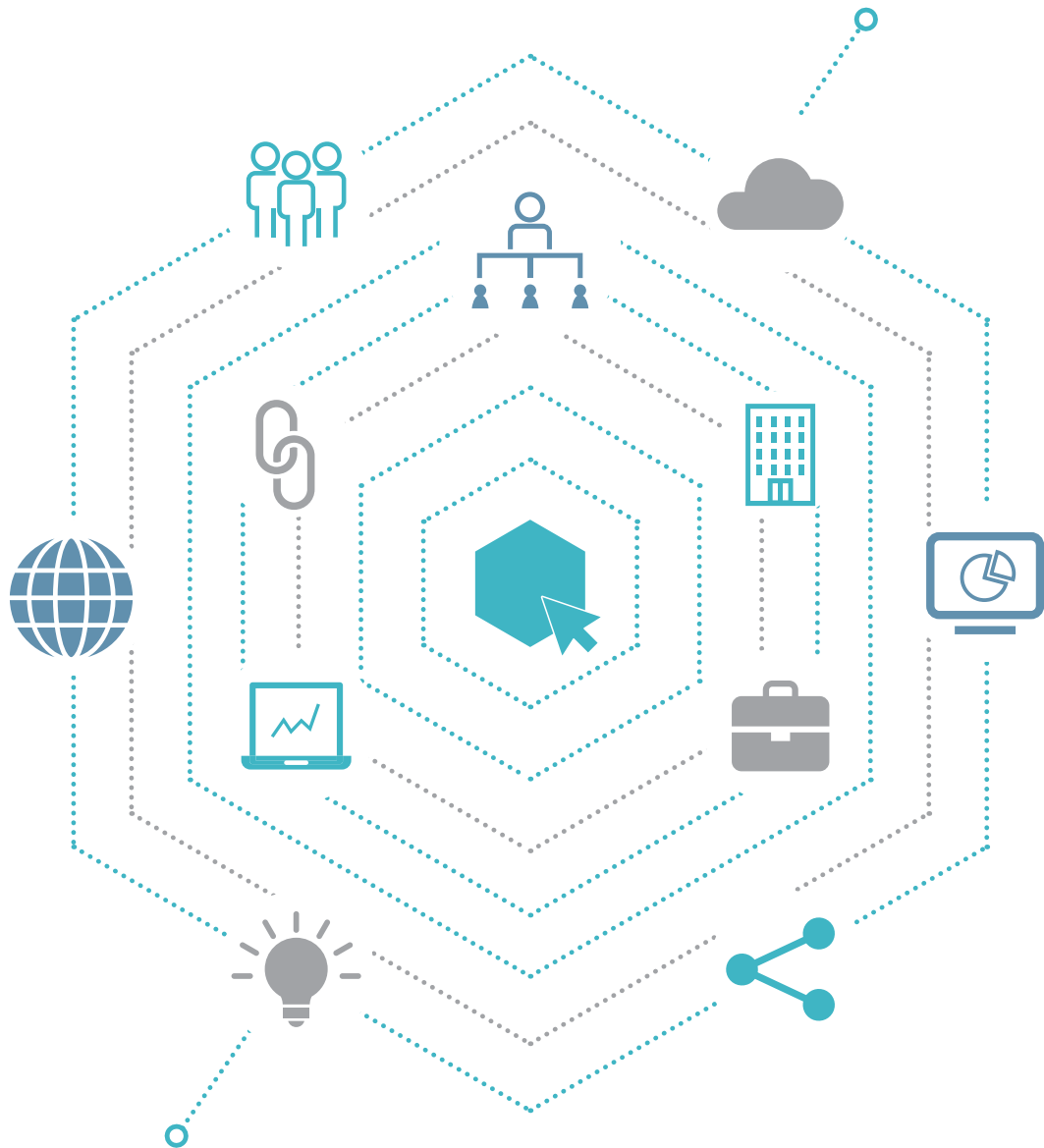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연구 (2차)

2018.12



제 출 문

국무조정실장 귀하

본 보고서를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연구(2차)」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12.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안 성 호

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책임자 김은주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윤수재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현경 (University of York)
연구참여자 진선백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정유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3
1. 연구 배경	3
2. 연구목적 및 범위	4
제2절 연구의 방법	4
1. 단계별 추진방안	4
2. 본 연구의 기대효과	5
제2장 전문가 만족도 조사 설계	7
제1절 전문가 정책만족도 모형 설계	9
1. 정책만족도 모형 설계: 품질-만족 복합모형	9
2. 정책만족도 측정기준 및 가중치	11
제2절 정책만족도 조사 설계	12
제3장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결과	13
제1절 2018년 ODA 전문가 정책만족도 조사결과 요약	15
1. 조사개요	15
2. 조사내용	15
3. 응답자 특성	16

4.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점수	18
5.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결과 주요 내용 요약	19
제2절 ODA 체계·통합·효율성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33
1. ODA 정책 체계성에 대한 만족도	33
2. ODA 정책 통합성에 대한 만족도	39
3. ODA 정책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	48
4. ODA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	54
5. ODA 정책 및 전반적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	74
6. 국제개발협력 일반적 사안에 대한 전문가 인식	78
제4장 ODA 정책개선에 대한 시사점	99
제1절 ODA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101
1. ODA의 가치, 비전, 철학에 대한 의견	101
2. 참여기관의 역할과 협업에 대한 의견	102
3. 시행기관에 대한 의견	103
4. 사업의 기획 및 발굴 단계	104
5. 사업의 집행 및 평가 단계	104
6. 기타 의견	105
제2절 전문가 집단토론회 결과	106
1. 최근 정부의 ODA 추진체계 개편에 대한 기대 및 전망	106

2. ODA 관련 DB 통합관리에 대한 기대 및 주의사항	107
3.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및 중점분야 선정에 대한 의견 및 개선방안	108
4. 일자리 창출과 국제개발협력 생태계에 대한 의견 및 개선방안	108
제5장 결 론	111
제1절 요약	11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14
제3절 정책제언	115
1. 평가결과 공유 및 환류체계 내실 운영	115
2. 국내외 이해관계자 협력과 정책조정을 위한 기능 및 인력 강화	116
3. 정책목표, 중점분야, 적정규모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 반영	117
4. ODA를 통한 청년, 중장년, 퇴직자 경력개발 기회 제공	118
5. 전문가 만족도 조사 향후 개선사항	120
참고문헌	122

■ 표목차

표 1-1 ODA 관련 국정과제 개요	3
표 2-1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모형설계	11
표 3-1 조사개요	15
표 3-2 조사내용	16
표 3-3 응답자 특성	17
표 3-4 2018년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100점 환산 점수	19
표 3-5 2017년 ODA 전문가 만족도 모형 및 100점 환산 점수	19
표 3-6 응답자 특성별 ODA 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인지도	20
표 3-7 항목별 문항	21
표 3-8 응답자 특성별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원조 과제 각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	24
표 3-9 응답자 특성별 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한 만족도	26
표 3-10 응답자 특성별 정부 성과에 대한 만족도	28
표 3-11 응답자 특성별 전년 대비 과제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한 만족도	30
표 3-12 응답자 특성별 개발원조 과제 기대 수준	32
표 3-13 응답자 특성별 ODA 비전·전략 제시에 대한 만족도	34
표 3-14 응답자 특성별 총괄기관, 시행기관, 사업수행자 간의 권한과 책임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	36
표 3-15 응답자 특성별 기획, 집행, 사업 관리 등 단계별 과정의 체계화에 대한 만족도	38
표 3-16 응답자 특성별 유무상 원조 연계성 강화를 위한 사업간 연계 활성화에 대한 만족도	40
표 3-17 응답자 특성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협력 강화 노력에 대한 만족도	43
표 3-18 응답자 특성별 정부 외 민간기업, NGO와 협업 활성화 노력에 대한 만족도	45
표 3-19 응답자 특성별 글로벌 수준의 다양한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한 만족도	47
표 3-20 응답자 특성별 수원국의 수요 기여를 위한 자원배분 원칙 설정에 대한 만족도	49
표 3-21 응답자 특성별 정부부처 및 시행기관의 유사 중복 사업간 조정 노력에 대한 만족도	51
표 3-22 응답자 특성별 ODA 사업관리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	53
표 3-23 응답자 특성별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이 국가협력전략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맞게 발굴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55
표 3-24 응답자 특성별 사업선정을 위한 사전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57
표 3-25 응답자 특성별 사업별로 예산규모를 객관·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의견	59
표 3-26 응답자 특성별 정부부처와 시행기관들이 집행을 위한 협력관계를 잘 구축하고 있는지 의견	61

표 3-27	응답자 특성별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업을 집행하는지에 대한 의견	63
표 3-28	응답자 특성별 정부가 수원국과 상호책임성을 갖추도록 ODA 사업관리 체계를 갖춰 집행하는지에 대한 의견	65
표 3-29	응답자 특성별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와 평가를 위한 계획과 방법이 잘 안내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67
표 3-30	응답자 특성별 성과점검 결과가 국민들에게 잘 공유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69
표 3-31	응답자 특성별 성과점검 결과가 차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잘 반영되는지에 대한 의견	71
표 3-32	응답자 특성별 국가협력전략과 수원국의 발전전략이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73
표 3-33	응답자 특성별 정부의 ODA 정책과 관련 활동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의견	75
표 3-34	응답자 특성별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 활동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의견	77
표 3-35	응답자 특성별 공적개발원조가 필요한 이유 [복수응답 기준]	79
표 3-36	응답자 특성별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최우선 고려 목표 [복수응답 기준]	81
표 3-37	응답자 특성별 공적개발원조의 향후 적정 규모	83
표 3-38	응답자 특성별 공적개발원조를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85
표 3-39	응답자 특성별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87
표 3-40	응답자 특성별 공적개발원조의 최적 분야 [복수응답 기준]	89
표 3-41	응답자 특성별 공적개발원조의 수원국 실질적 도움 정도	91
표 3-42	응답자 특성별 공적개발원조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93
표 3-43	응답자 특성별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적 수행기관	95
표 3-44	응답자 특성별 공적개발원조 활동 저해 요인 [복수응답 기준]	97

그림목차

그림 2-1 2018년 ODA 전문가 만족도 모형	12
그림 3-1 국정과제에 대한 인지도	19
그림 3-2 항목별 평가 종합 (7점 만점)	23
그림 3-3 정부의 노력 과정에 대한 만족도	25
그림 3-4 정부의 과제 성과에 대한 만족도	27
그림 3-5 전년대비 과제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한 만족도	29
그림 3-6 개발원조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 수준	31
그림 3-7 SDGs 달성에 기여하는 비전·전략 제시에 대한 만족도	33
그림 3-8 총괄기관, 시행기관, 사업수행자 간의 권한과 책임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	35
그림 3-9 기획, 집행, 사업 관리 등 단계별 과정의 체계화에 대한 만족도	37
그림 3-10 유무상 원조 연계성 강화를 위한 사업간 연계 활성화에 대한 만족도	39
그림 3-11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협력 강화 노력에 대한 만족도	42
그림 3-12 정부 외 민간기업, NGO와 협업 활성화 노력에 대한 만족도	44
그림 3-13 글로벌 수준의 다양한 협력 강화 노력에 대한 만족도	46
그림 3-14 수원국의 수요 기여를 위한 자원배분 원칙 설정에 대한 만족도	48
그림 3-15 정부부처 및 시행기관의 유사 중복 사업간 조정 노력에 대한 만족도	50
그림 3-16 ODA 사업관리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	52
그림 3-17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이 국가협력전략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맞게 발굴되고 있는 지에 대한 의견	54
그림 3-18 사업선정을 위한 사전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56
그림 3-19 정부가 사업별로 예산규모를 객관·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의견	58
그림 3-20 집행을 위한 협력관계를 잘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60
그림 3-21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가 파트너십을 형성해 집행하는지에 대한 의견	62
그림 3-22 수원국과 상호책임성을 갖추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갖춰 집행하는지에 대한 의견	64
그림 3-23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와 평가를 위한 계획과 방법이 잘 안내되고 있는지 의견	66
그림 3-24 성과점검 결과가 국민들에게 잘 공유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68
그림 3-25 성과점검 결과가 차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잘 반영되는지에 대한 의견	70
그림 3-26 국가협력전략과 수원국의 발전전략은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72
그림 3-27 정부의 ODA 정책과 관련 활동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만족도	74
그림 3-28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 활동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의견	76
그림 3-29 공적개발원조가 필요한 이유	78
그림 3-30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최우선 고려 목표	80

그림 3-31 공적개발원조의 향후 적정 규모	82
그림 3-32 공적개발원조의 축소 의향 이유	84
그림 3-33 공적개발원조의 확대 의향 이유	86
그림 3-34 공적개발원조의 최적 분야	88
그림 3-35 공적개발원조의 수원국 실질적 도움 정도	90
그림 3-36 공적개발원조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92
그림 3-37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적 수행기관	94
그림 3-38 공적개발원조 활동 저해 요인	96

제1장 서론

- | 제1절 연구의 배경
- | 제2절 연구의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 배경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국정과제의 추진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정과제 중 99번 과제로 “국익을 증진하는 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를 제안하고 세부적 실천과제로서 “체계적, 통합적, 효율적 개발원조”를 달성하겠다고 제안하였다(표 1-1 참조). 문재인 정부는 국내외의 많은 현안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임기 2년차인 2018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가시적 성과로서 2018년 6월에 통합평가제도 개편안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으로 의결하였고(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8), 2018년 12월에 ODA 추진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다(국무조정실, 2018).

| 표 1-1 | ODA 관련 국정과제 개요

<p>[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99-4] (체계·통합·효율적 개발원조) (과제목표)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협력 추진체계 강화</p> <p>(과제내용) 유·무상간 전략적 연계,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 및 연계성 강화를 통해 국익을 증진하는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이행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총리실) 및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외교부) 등 적극 활용</p> <p>(기대효과) 효율적 원조사업 수행 등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 강화 및 국익 제고</p>
--

한편 정부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과제추진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ODA와 관련된 국정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ODA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 점수를 도출한다. 또한 국정과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연구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ODA와 관련된 국정과제의 성과지표로 선정된 '전문가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설계하고 설문조사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둘째, ODA 전문가로부터 ODA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ODA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조사 실시

- 정책만족도 조사 설계
-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설문지 구성
- 만족도 조사 결과 실시 및 결과분석

둘째, ODA 체계성·통합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 도출

- ODA 정책의 효과와 한계 파악 및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 제시

제2절 연구의 방법

1. 단계별 추진방안

첫째, 전문가 만족도 조사 설문을 설계한다. 전년도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정책만족도 조사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설계를 실시한 바 있다(국무조정실·한국행정연구원, 2017). 이를 바탕으로 하되 선행연구 중 정부업무평가 전문가 만족도 조사, 국무조정실이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ODA 국민 인식조사」 설문 등을 참고하여 조사를 설계한다.

둘째,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설문조사 표본을 추출한다. 전문가 표본은 소속기관 별, 분야별로 고려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 ODA 중점협력분야 등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을 설정한다.

셋째, 전문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사업체를 선정하여 설문조사 실시한다.

정부업무평가 조사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선정하고, 과학적 표본추출 절차를 관리하며, 나아가 설문조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넷째, 설문조사 기초분석을 실시한다. 표본 대표성 검정, 데이터(응답) 신뢰성 검토(log file 분석) 등을 통해 조사결과를 확인한다. 만족도 점수 조사결과에 대한 기초분석 및 응답자 특성별 분석을 실시한다.

다섯째, ODA의 체계성, 통합성,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업무에 활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2. 본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진다.

첫째, 연례 조사를 안정적으로 실시하여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관련 업무를 지원하며 ODA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책만족도 조사의 기본 요건을 갖추도록 조사를 과학적으로 엄정하게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둘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개선안을 도출한다. ODA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대안을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청취하고, 향후 정책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하여 정책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ODA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민과 분야별 전문가들과 소통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

전문가 만족도 조사 설계

- | 제1절 전문가 정책만족도 모형 설계
- | 제2절 정책만족도 조사 설계



■ 제2장 전문가 만족도 조사 설계

제1절 전문가 정책만족도 모형 설계

1. 정책만족도 모형 설계: 품질-만족 복합모형

정책만족도를 측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서비스의 궁극적인 대상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2017년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당시 설계한 정책만족도 모형을 준용한다(국무조정실·한국행정연구원, 2017). 이를 통해 조사의 안정성을 높이고,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

2017년 전문가 만족도 조사를 설계할 때 고려한 것은 크게 4가지 쟁점인데, 첫째, 평가주체에 따른 구분, 둘째, 평가대상에 대한 고려, 셋째, 측정대상에 따른 모형 구성, 넷째, 측정목적에 따른 모형 설계 등이었다.

첫째, 정책만족도 조사에 대한 이론적 논의 중 평가주체에 대한 논의는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를 고객으로 볼 것인가 시민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정부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최초로 도입되었을 때는 신공공관리(NPM) 이론에 따라 고객만족도 조사를 주로 실시하였으나(이광희, 2016), 공공성의 관점에서 시민주도형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기도 하였다(이석환,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히 국민을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고객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공공의 가치를 함께 창출해 나가는 동반자로 보고자 한다. 본 조사를 통해 제안된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주관식 응답과 ODA 일반에 대한 인식조사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ODA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만족도 조사를 설계한다.

둘째, 평가대상과 관련된 쟁점은 행정서비스에 대해 평가할 것인가, 정책에 대해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주로 사회복지 분야나 행정민원서비스와 같이 직접적인 수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에 반해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일반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대한 응답률도 낮고 만족도 자체도 낮게 조사된다(박중훈, 2010). 특히 ODA

분야는 정책이 전달되는 최종적인 지역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 현안에 비해서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책이나 사업의 대상이 국내 거주 국민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향하기 때문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ODA 분야 정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를 설계하였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보다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ODA 전문가들이 정책 자체에 대해 만족도를 평가하는 모형으로 설계하였다.

셋째,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할 때 그 과정을 평가할 것인지, 최종적인 결과를 평가할 것인지 역시 쟁점이 될 수 있다.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주로 실시하는 경영학 분야에서는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모형과 최종적인 소비경험, 즉 결과에 초점을 두는 모형으로 구분된다(이유재, 2000).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의 경우 양자를 대립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99년 이후 실시되어 온 주요 정책 만족도, 2013년 이후 실시된 국정과제 만족도 등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항목만족도를 묻고, 정책효과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도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해 왔다. 따라서 ODA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역시 국정과제가 추구하는 목표에 맞게 항목 만족도를 질문하고, 체감만족도를 질문하여 정책과정과 정책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설계하였다.

넷째, 전문가 만족도 조사를 통해 만족도를 측정할 때 조사목적에 따라 성과평가를 우선하는 경우 전반적인 체감만족도를 중심으로 물어볼 수 있고, 정책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이광희, 2016).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ODA 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부터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동시에 가진다. 따라서 품질-만족으로 구성된 복합모형을 설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전반적인 만족도로부터 성과를 평가하고, 품질에 대한 항목과 상세한 조사 내용을 통해서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 표 2-1 |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모형설계

쟁점	기존 연구 논의 내용	본 연구의 모형설계
평가주체 : 국민 vs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을 정책 및 행정서비스 최종 수요자인 고객으로 간주하고 국민대상 조사 실시 시민을 평가의 주체로 보는 경우는 성과평가의 목적을 시민과 공공부문과의 상호소통에 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을 평가의 주체로 보되, 본 연구는 전문가 조사로 실시 고객중심의 성과관리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정부 정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
평가대상 : 행정서비스 vs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적 수혜자를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경험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일반국민들은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아 정책만족도 조사는 활성화 되지는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만족도에 대해 평가 해외에서 주로 시행되는 ODA 사업,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정책의 특성 상 '정책만족도'로 조사하되, 전문가 대상 실시
과정 vs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학에서는 과정과 결과 측정 모형을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정책만족도 조사에는 과정 및 결과를 모두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정-결과 모두 평가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항목만족도를 통해서, 전반적 만족도는 체감만족도를 통해서 평가
품질 vs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야 만족도가 높아짐. 따라서 기본의 행정만족도 조사 시 품질과 만족 복합모형으로 평가해 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질-만족 복합 모형 정책의 품질에 대해서는 항목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전반적인 성과는 체감만족도 항목을 통해서 해석

2. 정책만족도 측정기준 및 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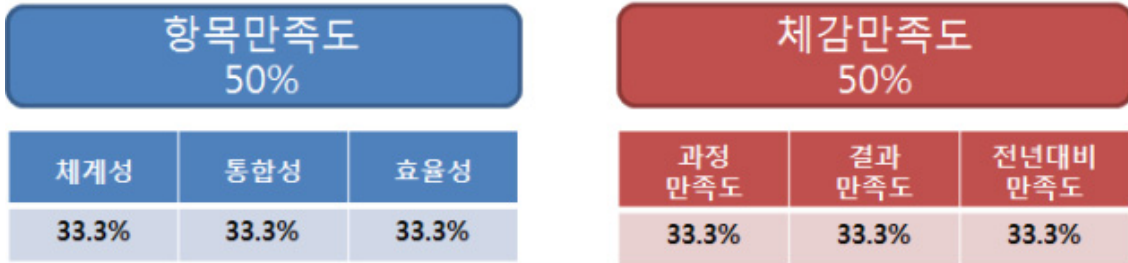
본 조사는 국정과제만족도 조사의 모형을 준용하여 정책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한 항목만족도와 전반적인 만족도를 물어보는 체감만족도로 구성한다. 항목만족도는 체계성, 통합성, 효율성이 ODA 관련 국정과제의 주요 목표인 만큼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전문가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한 뒤 산술평균으로 평점을 산출한다.

또한 체감만족도는 전년도 조사와 동일하게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다. 과제 추진 노력에 대한 만족도와 추진 결과에 대한 만족도 2개 항목을 모두 질문한다. 다만 전년도 조사에서는 임기 1년차인 만큼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기대를 질문하였다. 그러나 올해는 임기 2년차이므로 전년 대비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질문하여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한다.

항목별 가중치는 전년도와 조사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비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항목만족도에 50% 가중치를, 체감만족도에 50%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여 100점 만점 점

수로 환산하여 평점을 산출한다.

| 그림 2-1 | 2018년 ODA 전문가 만족도 모형



제2절 정책만족도 조사 설계

첫째, 표본의 구성은 ODA에 대한 전문가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소속기관별로는 학계, ODA 실무자,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기관별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ODA 실시의 기반이 되는 국가협력전략 시 중점분야별(예: 교육, 보건, 공공행정, 지역개발, 산업에너지, 교통, 통신(ICT), 물관리 등)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하고자 노력하였다. 표본 수집 시 분야별, 소속기관별 유의할당 방식으로 추출한다.

둘째, 설문조사 문항은 체계성, 통합성, 효율성에 대한 각각의 문항을 개발하여 항목별 만족도를 질문한다. 체계성에 대해서는 ODA 전략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3개 문항을 개발하였고, 통합성에 대해서는 유무상 연계 및 시민사회,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고려하여 4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끝으로 효율성에 대해서는 최소비용으로 최대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성과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등 3개 문항을 개발하여 항목별로 질문하였다. 또한 정책개선방향에 대한 주관식 문항을 통해 정책제언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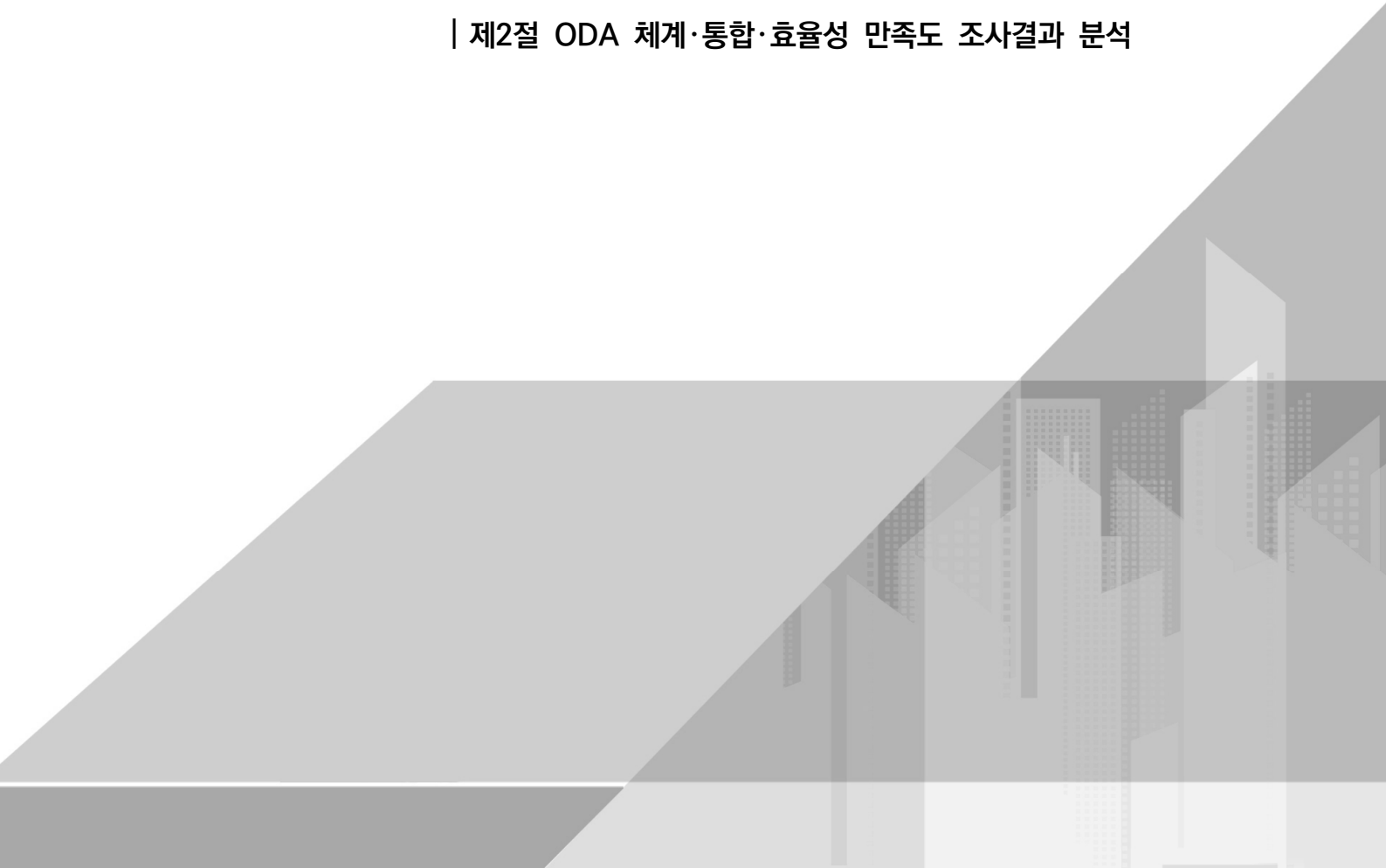
셋째, 설문조사 방법은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면대면 조사,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등이 있으나 조사비용, 조사 소요 시간, 표본 추출의 장·단점을 비교해볼 때,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으로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단, 전문가 중에서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응답을 독려하는 전화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3장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결과

| 제1절 2018년 ODA 전문가 정책만족도 조사결과 요약

| 제2절 ODA 체계·통합·효율성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제3장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결과

제1절 2018년 ODA 전문가 정책만족도 조사결과 요약

1. 조사개요

2018년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는 공적개발원조(ODA)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문가로 총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전문가들은 학계(대학 및 연구원), 공공부문(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국제기구), 민간부문(사업수행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표본을 수집하였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년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로 10일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 표 3-1 | 조사개요

조사대상	공적개발원조(ODA)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문가 (학계 및 연구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국제기구, 사업수행 민간기관·시민단체 등)
응답자 수	250명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Online Survey)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기간	2018년 11월 14일 ~ 2018년 11월 23일
주관기관	국무조정실·한국행정연구원
조사기관	닐슨컴퍼니코리아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다음 <표 3-2>와 같다. 응답자 특성에 대한 문항을 질문하기 위해 소속기관 유형, 종사 기간 및 분야 등을 질문하였고, ODA 사업 인지도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ODA 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항목 만족도를 체계성, 통합성, 효율성으로 분류하여 각 항목별로 질문하고, 전반적인 만족도 및 기대 수준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주관식 문항으로 전반적인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ODA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ODA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을 조사하기 위

해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인식, 정책 추진의 신뢰, 공적개발원조의 필요성, 최우선 고려 목표, 적정 규모, 최적 분야, 성과, 효율적 수행기관, 활동 저해 요인 등을 질문하였다. 상세한 질문 내용은 다음 <표 3-2>와 같다.

| 표 3-2 | 조사내용

부문	항목
응답자 선정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 유형 ■ 공적개발원조 종사 기간
공적개발원조 사업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개발원조 사업 인지도
공적개발원조 사업 평가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통합·효율적 개발원조 과제 항목별 만족도 ■ 체계·통합·효율적 개발원조 과제 전반적 만족도 ■ 체계·통합·효율적 개발원조 과제 기대 수준 ■ 체계·통합·효율적 개발원조 과제 개선방향
공적개발원조 사업 인식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인식 ■ 정부 정책 추진의 신뢰 수준 ■ 공적개발원조가 필요한 이유 ■ 공적개발원조의 최우선 고려 목표 ■ 공적개발원조의 적정 규모 및 확대·축소 의향 이유 ■ 공적개발원조의 최적 분야 ■ 공적개발원조의 수원국 도움 정도 및 비도움 의향 이유 ■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적 수행기관 ■ 공적개발원조 활동 저해 요인
응답자 배경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개발원조 종사 분야 ■ 성별, 연령, 최종학력

3. 응답자 특성

응답자는 총 250명으로서 표본 수집 시 1차 기준이었던 소속기관 유형별로 응답자 특성을 구분해 보면, 학계부문(대학 및 연구원)이 108명(43.2%), 공공부문(정부부처, 공공기관, 국제기구)이 97명(38.8%), 민간부문(시민단체, 민간기관)이 40명(16.0%), 기타 5명(2.0%)이었다.

종사 분야로 살펴보면 교육 33명(13.2%), 보건의료 20명(8.0%), 공공행정 및 거버넌스 50명(20.0%), 농촌개발 21명(8.4%), 교통인프라 6명(2.4%), 정보통신 및 IT기술 14명(5.6%), 과학기술 11명(4.4%), 환경 및 기후변화 17명(6.8%), 성평등, 취약계층 및 인권 보호 11명(4.4%), 난민지원 및 긴급구호 1명(0.4%) 등이 응답하였다. 그밖에 개발협력사업 일반 56명(22.4%)과 기타 10명(4.0%)도 조사에 참여하였다.

ODA에 종사한 기간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3년 미만인 52명(20.8%), 3-4년 41명(16.4%), 5-9년 77명(30.8%), 10-14년 32명(12.8%), 15-19년 17명(6.8%), 20명 이상이 31명(12.4%)으로 10년 이상 종사자가 80명(32.0%)에 달했다.

응답자 특성의 상세 내용은 <표 3-3>에서 제시하였다.

| 표 3-3 |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250	100.0
소속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43.2
	공공부문	97	38.8
	민간부문	40	16.0
	기타	5	2.0
소속기관 세분유형별	학계	61	24.4
	국책연구원	47	18.8
	정부부처	45	18.0
	공공기관	43	17.2
	국제기구	9	3.6
	시민단체	22	8.8
	민간기관	18	7.2
	기타	5	2.0
종사 분야	교육	33	13.2
	보건의료	20	8.0
	공공행정·거버넌스	50	20.0
	농촌개발	21	8.4
	교통인프라	6	2.4
	정보통신·IT기술	14	5.6
	과학기술	11	4.4
	환경·기후변화	17	6.8
	성평등·취약계층·인권보호	11	4.4
	난민지원·긴급구호	1	0.4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22.4
	기타	10	4.0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5년 미만		41	16.4
10년 미만		77	30.8
15년 미만		32	12.8
20년 미만		17	6.8
20년 이상		31	12.4

	구분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성	162	64.8
	여성	88	35.2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17.6
	석사 졸업	85	34.0
	박사 졸업	121	48.4

4.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점수

전문가 정책만족도 모형은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국정과제만족도 조사의 모형을 준용하여 항목만족도와 체감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첫째, 항목만족도는 ODA 관련 국정과제의 주요 목표인 체계성, 통합성, 효율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질문하여 산술평균으로 평점을 산출하였다. 둘째, 체감만족도는 전문가 만족도 조사라는 특성에서 기존의 대국민 대상 체감만족도 조사와는 달리 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결과에 대한 만족도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임기 2년차 국정과제 평가라는 점에서 전년대비 만족도 항목을 체감만족도에 포함시켰다.

최종점수 도출을 위해서 전년도 모형에 준하여 항목만족도에 50% 가중치를, 체감만족도에 50% 가중치를 부여하되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하여 평점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항목만족도와 체감만족도를 가중치 부여하여 합산한 최종 ODA 전문가 만족도 점수는 63.0점으로 산출되었다.

〈표 3-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항목만족도에 있어서 체계성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65.5점, 통합성은 65.0점, 효율성은 62.2점으로 평점이 산출되면서 각 항목이 전년도 대비 점수가 상승하였다. 체감만족도는 과정만족도가 61.9점, 결과만족도가 60.2점, 전년대비 만족도가 63.4점으로 산출된 것으로 나타나 각 항목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전년도 결과는 〈표 3-5〉 참조).

또한 신설된 전년대비 체감만족도가 다른 체감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올해는 문재인정부 2년차에 추진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 전문가들이 작년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표 3-4 | 2018년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100점 환산 점수

항목만족도			체감만족도		
가중치 50%			가중치 50%		
체계성	통합성	효율성	과정만족도	결과만족도	전년대비 만족도
65.5	65.0	62.2	61.9	60.2	63.4
총 점					
63.0 점					

| 표 3-5 | 2017년 ODA 전문가 만족도 모형 및 100점 환산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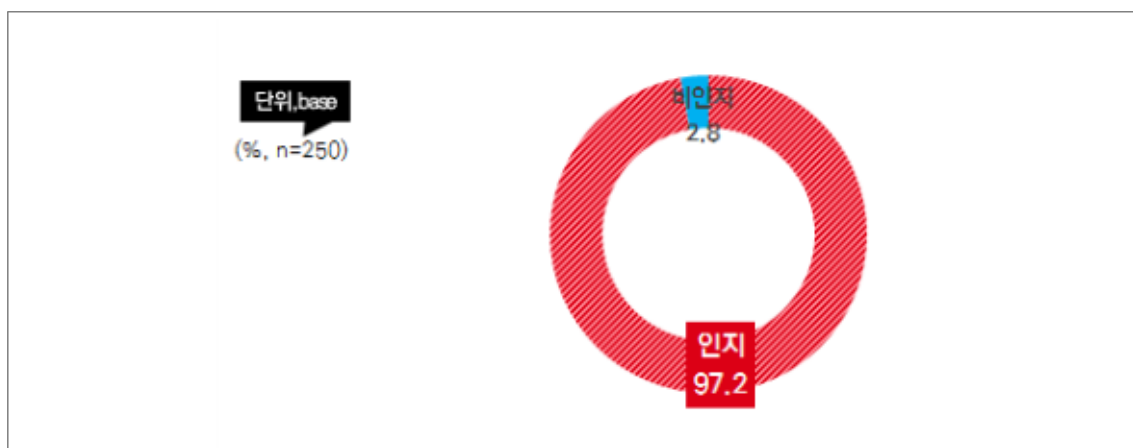
항목만족도			체감만족도		
가중치 50%			가중치 50%		
체계성	통합성	효율성	노력만족도	결과만족도	기대*
62.2	61.9	60.2	61.7	60.3	66.7
총 점					
62.2 점					

* 임기 1년차인 2017년에는 국정과제에 대한 기대를 체감만족도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시킴

5.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결과 주요 내용 요약

1) 국정과제에 대한 인지도

| 그림 3-1 | 국정과제에 대한 인지도



Q. 선생님께서는 ODA 관련 국정과제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ODA 관련 국정과제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인지'한다는 응답이 97.2% 인 반면, '비인지'한다는 응답은 2.8%로 나타났다.

응답자 소속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구부문 전문가 중 95.4%, 모든 공공부문 전문가, 민간부문 전문가 중 95%가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국정과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모든 유형에서 100%에 육박하는 인지도가 나타났다. 한편 종사 기간별로 살펴보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들의 ‘인지’ 비율은 100%인 반면, 3년 미만 종사한 전문가들의 ‘인지’ 비율은 94.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오래 종사한 전문가일수록 높은 인지도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표 3-6 | 응답자 특성별 ODA 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인지도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처음 들어본다	인지	비인지
전체		250	35.2	51.2	10.8	2.8	97.2	2.8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30.6	50.9	13.9	4.6	95.4	4.6
	공공부문	97	46.4	46.4	7.2	0.0	100.0	0.0
	민간부문	40	25.0	60.0	10.0	5.0	95.0	5.0
	기타	5	0.0	80.0	20.0	0.0	100.0	0.0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32.8	47.5	16.4	3.3	96.7	3.3
	국책연구원	47	27.7	55.3	10.6	6.4	93.6	6.4
	정부부처	45	51.1	40.0	8.9	0.0	100.0	0.0
	공공기관	43	46.5	51.2	2.3	0.0	100.0	0.0
	국제기구	9	22.2	55.6	22.2	0.0	100.0	0.0
	시민단체	22	27.3	54.5	13.6	4.5	95.5	4.5
	민간기관	18	22.2	66.7	5.6	5.6	94.4	5.6
	기타	5	0.0	80.0	20.0	0.0	100.0	0.0
종사 분야	교육	33	27.3	48.5	18.2	6.1	93.9	6.1
	보건의료	20	20.0	60.0	15.0	5.0	95.0	5.0
	공공행정·거버넌스	50	42.0	42.0	16.0	0.0	100.0	0.0
	농촌개발	21	23.8	61.9	9.5	4.8	95.2	4.8
	교통인프라	6	50.0	50.0	0.0	0.0	100.0	0.0
	정보통신·IT기술	14	57.1	42.9	0.0	0.0	100.0	0.0
	과학기술	11	27.3	63.6	9.1	0.0	100.0	0.0
	환경·기후변화	17	47.1	47.1	5.9	0.0	100.0	0.0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36.4	45.5	9.1	9.1	90.9	9.1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100.0	0.0	0.0	100.0	0.0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35.7	53.6	7.1	3.6	96.4	3.6
	기타	10	30.0	60.0	10.0	0.0	100.0	0.0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처음 들어본다	인지	비인지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28.8	46.2	19.2	5.8	94.2	5.8
	5년 미만	41	36.6	48.8	12.2	2.4	97.6	2.4
	10년 미만	77	33.8	51.9	10.4	3.9	96.1	3.9
	15년 미만	32	31.3	65.6	3.1	0.0	100.0	0.0
	20년 미만	17	41.2	47.1	11.8	0.0	100.0	0.0
	20년 이상	31	48.4	48.4	3.2	0.0	100.0	0.0
성별	남성	162	40.1	45.1	10.5	4.3	95.7	4.3
	여성	88	26.1	62.5	11.4	0.0	100.0	0.0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22.7	61.4	15.9	0.0	100.0	0.0
	석사 졸업	85	43.5	45.9	8.2	2.4	97.6	2.4
	박사 졸업	121	33.9	51.2	10.7	4.1	95.9	4.1

2) 항목만족도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원조 과제 항목별 만족도를 7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체계성 항목은 3가지, 통합성 항목은 4가지, 효율성 항목은 3가지로 하여 총 10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이 7점 척도로 응답한 내용에 대해 매우 불만족, 상당히 불만족, 약간 불만족까지(1-3점) 불만족으로 보고, 약간 만족, 상당히 만족, 매우 만족까지(5-7점) 만족으로 분류하여 세 가지 항목으로 재분류하여 만족 비율을 분석하였다.

| 표 3-7 | 항목별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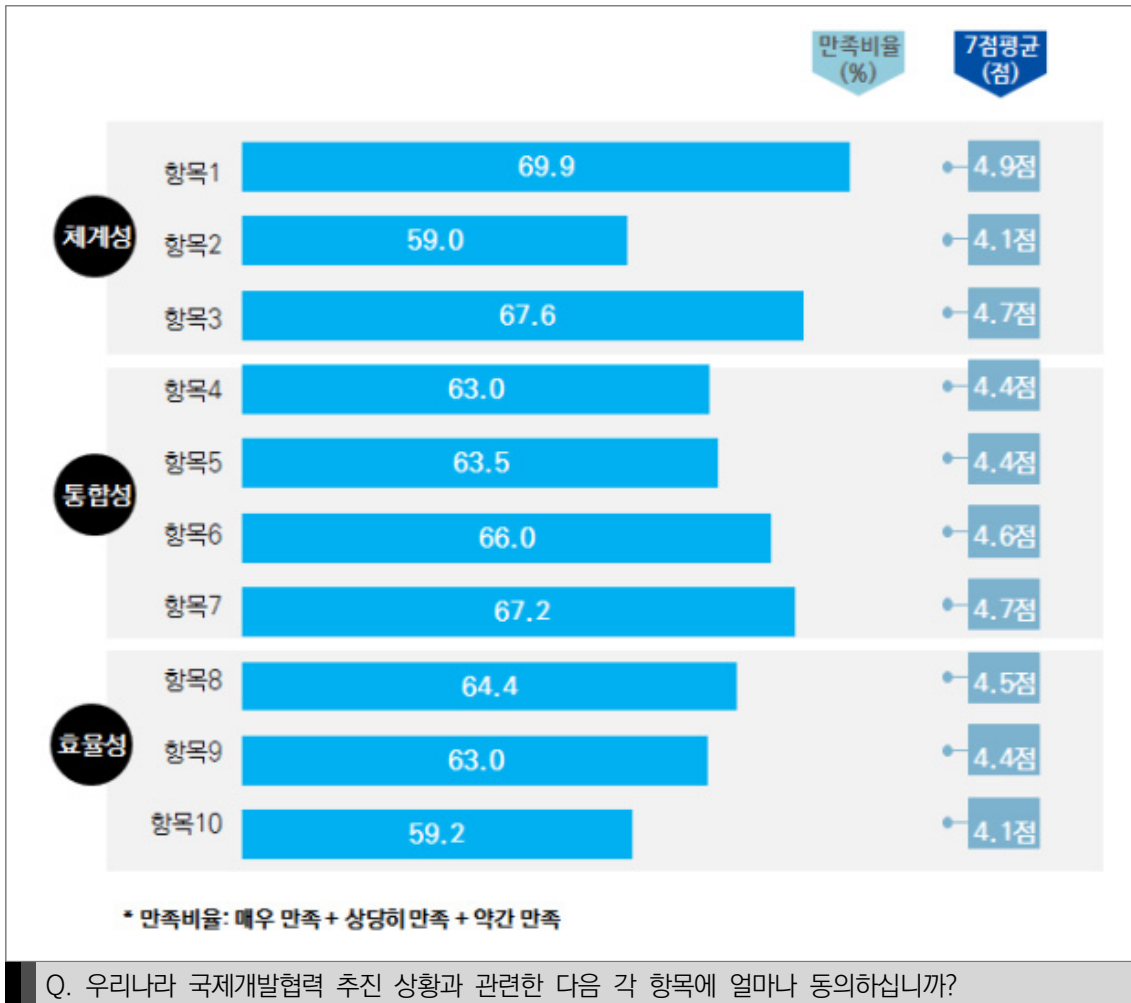
체계성
1) 정부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도록 ODA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 ODA 총괄기관(국무조정실), 주무기관(기획재정부, 외교부), 시행기관(KOICA, EDCF, 기타 정부부처), 사업수행자 간에 권한과 책임이 적절히 설정되어 있다.
3) 정부는 ODA 기획, 집행, 사업 관리 등 단계별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합성
4) 정부는 유무상 원조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사업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있다.
5) 정부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정부는 정부 외 민간기업, NGO와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7) 정부는 국제기구, 타 공여기관 등 글로벌 수준에서 다양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효율성
8) 정부는 수원국의 수요에 기여하도록 자원배분 원칙을 설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9) 정부는 정부부처 및 시행기관의 유사중복 사업간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 정부는 비용대비 원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ODA 사업을 잘 관리하고 있다.

우선 체계성 항목에서는 정부의 ODA 전략이 SDGs 달성에 기여하도록 수립되어 있다는 문항(항목 1)에 대해서 약 7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DA 기획, 집행, 사업 관리 등 단계별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항목 3)는 약 6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ODA 총괄기관, 주무기관, 시행기관 및 사업수행자 간에 권한과 책임이 적절히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항목 2)에는 59%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통합성 항목에서는 유무상 원조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사업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항목 4)에 대해서 6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정부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질문(항목 5)에 대해서는 약 64%가 만족하였다. 정부가 민간기업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문항(항목 6)에 대해서는 6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정부가 국제기구와 타 공여기관 등 글로벌 수준에서 다양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문항(항목 7)에 대해서는 약 67%가 만족한다고 하여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효율성 항목에서는 정부의 자원배분 원칙이 수원국의 수요에 기여하도록 배분적 효율성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항목 8) 약 6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부처 및 시행기관 간 유사 및 중복사업의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항목 9)에 대해서 6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비용대비 원조 효과성을 높이도록 ODA 사업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항목 10)에 대해서는 약 59%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 그림 3-2 | 항목별 평가 종합 (7점 만점)



2018년 ODA 전문가 만족도 점수는 2017년에 이루어진 조사에 비교하여 10개 세부 항목에서 모두 소폭의 상승이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조사 결과만 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10개 항목 중에서 ‘항목 2 시행기관간 권한과 책임’, ‘항목 10 원조효과성을 위한 사업 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만족 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소속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에서 다른 기관 유형과 비교하여 모든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항목 2, 항목 4, 항목 10에서 공공부문의 만족도가 연구 및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다소 큰 폭의 격차가 나타났다.

표 3-8 | 응답자 특성별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원조 과제 각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
(단위: 명, 7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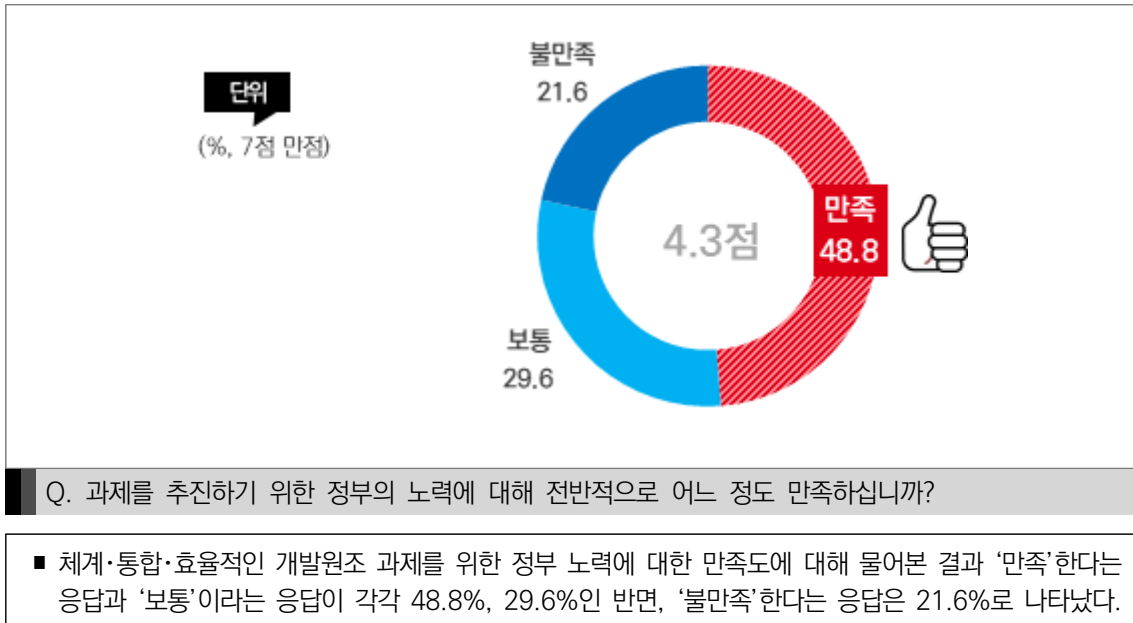
구분	(명)	체계성			통합성				효율성			
		항목1	항목2	항목3	항목4	항목5	항목6	항목7	항목8	항목9	항목10	
2017	270	4.7	3.9	4.5	4.2	4.2	4.4	4.6	4.4	4.3	4.0	
2018	250	4.9	4.1	4.7	4.4	4.4	4.6	4.7	4.5	4.4	4.1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4.8	3.8	4.5	4.0	4.1	4.4	4.5	4.3	4.0	3.8
	공공부문	97	5.2	4.6	5.1	5.0	5.0	4.9	5.1	5.0	5.0	4.7
	민간부문	40	4.5	3.9	4.6	4.1	4.2	4.7	4.6	4.0	4.2	3.8
	기타	5	5.2	3.8	4.2	3.4	3.2	3.6	3.6	3.2	3.2	3.4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4.9	3.9	4.6	4.0	4.1	4.4	4.5	4.4	3.9	3.7
	국책연구원	47	4.6	3.7	4.4	4.1	4.2	4.3	4.5	4.2	4.1	3.9
	정부부처	45	5.4	4.9	5.4	5.3	5.3	5.1	5.3	5.3	5.5	5.0
	공공기관	43	5.1	4.4	4.8	4.8	4.7	4.7	4.9	4.8	4.6	4.5
	국제기구	9	4.8	4.3	4.9	4.9	4.7	5.0	4.9	4.7	4.7	4.3
	시민단체	22	4.3	3.9	4.4	4.1	4.2	4.5	4.3	3.8	4.1	3.6
	민간기관	18	4.7	3.9	4.9	4.0	4.2	4.9	4.9	4.3	4.4	3.9
	기타	5	5.2	3.8	4.2	3.4	3.2	3.6	3.6	3.2	3.2	3.4
종사 분야	교육	33	5.1	4.3	4.9	4.5	4.4	4.6	4.7	4.5	4.4	4.3
	보건의료	20	4.5	3.8	4.6	4.2	4.1	4.6	4.7	4.3	3.9	3.7
	공공행정·거버넌스	50	5.0	4.2	4.8	4.5	4.5	4.5	4.6	4.7	4.5	4.3
	농촌개발	21	5.3	4.2	4.6	4.3	4.5	4.7	4.8	4.7	4.3	4.3
	교통인프라	6	5.5	3.8	4.7	3.8	4.0	3.8	4.7	4.0	4.8	4.0
	정보통신·IT기술	14	5.6	4.6	5.1	4.3	4.7	4.7	5.1	4.6	4.6	4.4
	과학기술	11	4.7	4.2	4.6	4.5	4.7	4.2	4.3	4.5	4.7	4.1
	환경·기후변화	17	4.9	4.3	5.2	5.1	5.1	5.0	4.9	4.7	4.8	4.6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4.4	4.0	4.3	4.4	4.3	4.9	4.9	4.0	4.3	3.9
	난민지원·긴급구호	1	5.0	4.0	5.0	3.0	4.0	5.0	4.0	4.0	5.0	4.0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4.6	3.9	4.7	4.3	4.4	4.8	4.8	4.5	4.5	4.0
기타	10	4.7	4.1	4.6	4.4	4.0	4.0	4.3	4.1	3.7	3.5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5.0	4.5	5.0	4.9	4.6	4.7	5.0	4.8	4.8	4.5
	5년 미만	41	4.8	4.2	4.7	4.4	4.3	4.4	4.7	4.6	4.4	4.5
	10년 미만	77	4.9	4.0	4.6	4.3	4.3	4.6	4.5	4.3	4.2	4.0
	15년 미만	32	5.1	4.0	4.7	4.2	4.5	4.7	4.6	4.5	4.3	3.6
	20년 미만	17	4.4	4.3	4.7	4.1	4.5	4.8	5.0	4.3	4.5	4.4
	20년 이상	31	5.0	3.8	4.5	4.2	4.5	4.8	4.8	4.5	4.3	3.9
성별	남성	162	4.9	4.2	4.7	4.4	4.4	4.6	4.7	4.6	4.4	4.1
	여성	88	4.8	3.9	4.8	4.1	4.5	4.7	4.7	4.4	4.5	4.2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5.1	4.7	5.1	5.0	4.9	4.7	5.0	4.8	4.8	4.5
	석사 졸업	85	4.9	4.1	4.8	4.2	4.5	4.7	4.7	4.4	4.6	4.2
	박사 졸업	121	4.8	3.9	4.6	3.2	4.3	4.6	4.6	4.5	4.1	4.0

- 1) 정부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도록 ODA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2) ODA 총괄기관(국무조정실), 주무기관(기획재정부, 외교부), 시행기관(KOICA, EDCF, 기타 정부부처), 사업수행자 간에 권한과 책임이 적절히 설정되어 있다.
- 3) 정부는 ODA 기획, 집행, 사업 관리 등 단계별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4) 정부는 유무상 원조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사업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있다.
- 5) 정부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6) 정부는 정부 외 민간기업, NGO와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7) 정부는 국제기구, 타 공여기관 등 글로벌 수준에서 다양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8) 정부는 수원국의 수요에 기여하도록 자원배분 원칙을 설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9) 정부는 정부부처 및 시행기관의 유사중복 사업간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0) 정부는 비용대비 원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ODA 사업을 잘 관리하고 있다.

3) 체감만족도

(1) 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한 만족도

| 그림 3-3 | 정부의 노력 과정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 소속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구부문 전문가 중 42.6%, 공공부문 전문가 중 62.9%, 민간부문 전문가 중 35%가 정부의 노력 과정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은 연구부문 전문가 중 29.6%, 공공부문 전문가 중 9.3%, 민간부문 전문가 중 27.5%가 나타났다. 100점 만점 만족도 점수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연구부문 전문가가 57.9점, 공공부문 전문가가 68.8점, 민간부문 전문가가 56.8점으로 전년도 대비 연구부문과 민간부문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종사 기간별로 살펴보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들의 전년도 대비 '만족' 비율은 모두 상승한 반면, 10년 미만 종사한 전문가들의 '만족' 비율은 모두 하락하였다.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오래 종사한 전문가일수록 개발원조 과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 과정에 대해 2017년도와 비교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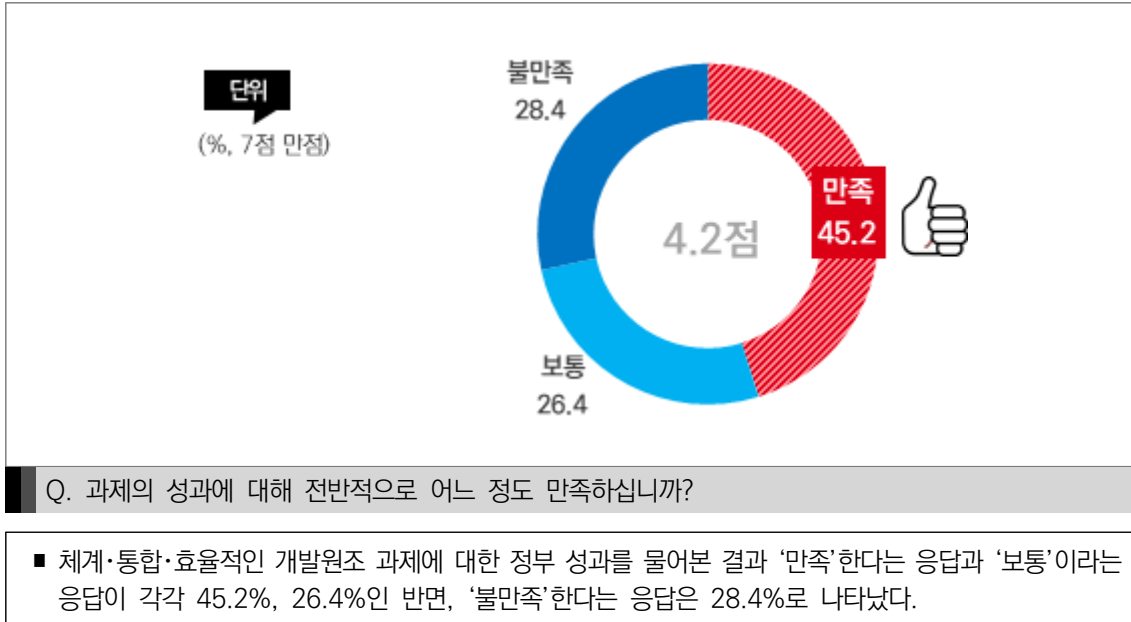
| 표 3-9 | 응답자 특성별 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접수환산				
		매우 불만족	상당히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상당히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2018	2017	전년 대비	
전체	250	0.8	9.6	11.2	29.6	34.0	12.4	2.4	21.6	29.6	48.8	61.9	61.7	0.2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0.9	14.8	13.9	27.8	35.2	5.6	1.9	29.6	27.8	42.6	57.9	60.2	-2.3
	공공부문	97	1.0	1.0	7.2	27.8	36.1	22.7	4.1	9.3	27.8	62.9	68.8	64.7	4.1
	민간부문	40	0.0	17.5	10.0	37.5	27.5	7.5	0.0	27.5	37.5	35.0	56.8	58.1	-1.3
	기타	5	0.0	0.0	40.0	40.0	20.0	0.0	0.0	40.0	40.0	20.0	54.3	64.3	-10.0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1.6	13.1	11.5	27.9	41.0	3.3	1.6	26.2	27.9	45.9	58.5	58.6	-0.1
	국책연구원	47	0.0	17.0	17.0	27.7	27.7	8.5	2.1	34.0	27.7	38.3	57.1	64.8	-7.7
	정부부처	45	2.2	0.0	2.2	28.9	31.1	26.7	8.9	4.4	28.9	66.7	71.7	67.4	4.3
	공공기관	43	0.0	2.3	14.0	25.6	37.2	20.9	0.0	16.3	25.6	58.1	65.8	62.5	3.3
	국제기구	9	0.0	0.0	0.0	33.3	55.6	11.1	0.0	0.0	33.3	66.7	68.2	65.3	2.9
	시민단체	22	0.0	27.3	9.1	31.8	31.8	0.0	0.0	36.4	31.8	31.8	52.6	58.3	-5.7
	민간기관	18	0.0	5.6	11.1	44.4	22.2	16.7	0.0	16.7	44.4	38.9	61.9	57.9	4.0
	기타	5	0.0	0.0	40.0	40.0	20.0	0.0	0.0	40.0	40.0	20.0	54.3	64.3	-10.0
종사 분야	교육	33	3.0	9.1	6.1	24.2	36.4	18.2	3.0	18.2	24.2	57.6	64.1	58.7	5.4
	보건의료	20	0.0	15.0	5.0	45.0	20.0	15.0	0.0	20.0	45.0	35.0	59.3	56.3	3.0
	공공행정·거버넌스	50	2.0	4.0	16.0	26.0	34.0	12.0	6.0	22.0	26.0	52.0	63.7	66.6	-2.9
	농촌개발	21	0.0	4.8	4.8	23.8	42.9	23.8	0.0	9.5	23.8	66.7	68.0	65.9	2.1
	교통인프라	6	0.0	33.3	0.0	0.0	50.0	16.7	0.0	33.3	0.0	66.7	59.5	75.5	-16.0
	정보통신·IT기술	14	0.0	0.0	21.4	21.4	28.6	28.6	0.0	21.4	21.4	57.1	66.3	60.9	5.4
	과학기술	11	0.0	18.2	18.2	9.1	45.5	0.0	9.1	36.4	9.1	54.5	59.7	66.7	-7.0
	환경·기후변화	17	0.0	5.9	0.0	29.4	47.1	17.6	0.0	5.9	29.4	64.7	67.2	58.8	8.4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0.0	18.2	18.2	27.3	36.4	0.0	0.0	36.4	27.3	36.4	54.5	57.1	-2.6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71.4	64.3	7.1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0.0	12.5	10.7	44.6	26.8	5.4	0.0	23.2	44.6	32.1	57.4	60.1	-2.7
	기타	10	0.0	10.0	30.0	20.0	30.0	0.0	10.0	40.0	20.0	40.0	58.6	64.3	-5.7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1.9	1.9	5.8	36.5	32.7	15.4	5.8	9.6	36.5	53.8	66.5	64.5	2.0
	5년 미만	41	0.0	12.2	17.1	17.1	31.7	17.1	4.9	29.3	17.1	53.7	62.7	65.9	-3.2
	10년 미만	77	1.3	13.0	15.6	27.3	29.9	13.0	0.0	29.9	27.3	42.9	58.6	61.5	-2.9
	15년 미만	32	0.0	6.3	3.1	37.5	43.8	9.4	0.0	9.4	37.5	53.1	63.8	58.7	5.1
	20년 미만	17	0.0	17.6	5.9	29.4	41.2	5.9	0.0	23.5	29.4	47.1	58.8	51.4	7.4
	20년 이상	31	0.0	9.7	12.9	32.3	35.5	6.5	3.2	22.6	32.3	45.2	60.8	57.7	3.1
성별	남성	162	1.2	9.9	9.3	27.8	36.4	13.6	1.9	20.4	27.8	51.9	62.3	62.3	0.0
	여성	88	0.0	9.1	14.8	33.0	29.5	10.2	3.4	23.9	33.0	43.2	61.0	60.7	0.3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2.3	6.8	11.4	25.0	27.3	22.7	4.5	20.5	25.0	54.5	64.9	66.5	-1.6
	석사 졸업	85	0.0	5.9	10.6	35.3	37.6	9.4	1.2	16.5	35.3	48.2	62.5	60.4	2.1
	박사 졸업	121	.8	13.2	11.6	27.3	33.9	10.7	2.5	25.6	27.3	47.1	60.3	61.0	-0.7

(2) 과제 성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그림 3-4 | 정부의 과제 성과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 소속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구부문 전문가 중 34.3%, 공공부문 전문가 중 62.9%, 민간부문 전문가 중 35%가 정부 성과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연구부문 전문가 중 36.1%, 공공부문 전문가 중 14.4%, 민간부문 전문가 중 40%가 정부 성과에 대하여 불만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만족도와 불만족도 비율 모두 연구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문가와 공공부문 전문가 간 다소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100점 만점 만족도 점수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연구부문 전문가가 56.2점, 공공부문 전문가가 67.4점, 민간부문 전문가가 54.3점을 부여하였다.

종사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 보건의료, 정보통신·IT기술, 환경·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전문가 만족도 점수가 증가한 반면 나머지 분야에서는 하락하였다. 성평등·취약·인권보호, 난민지원 및 긴급구호, 개발협력사업 일반, 기타 분야에서는 올해 평균 점수(61.9점)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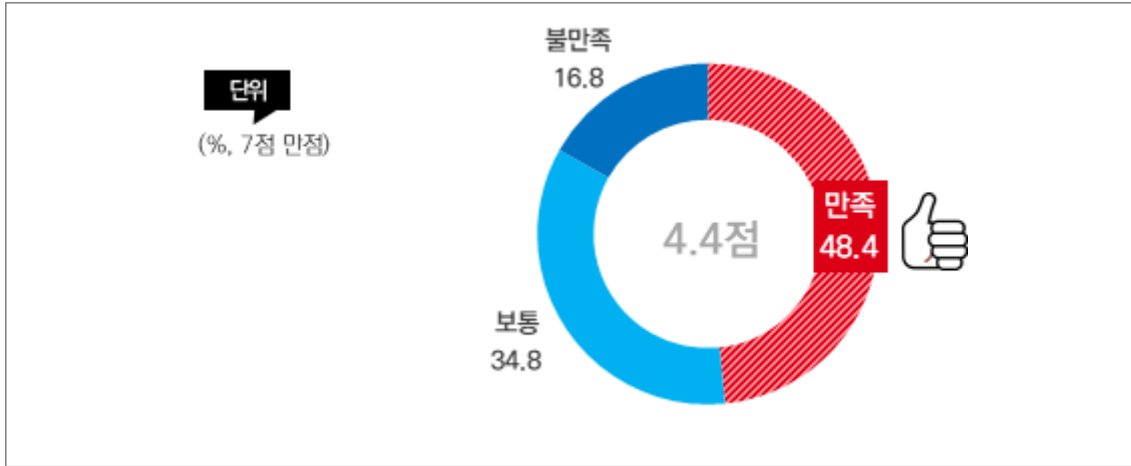
| 표 3-10 | 응답자 특성별 정부 성과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점수환산			
		매우 불만족	상당히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상당히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2018	2017	전년 대비	
전체	250	0.8	8.4	19.2	26.4	32.8	10.0	2.4	28.4	26.4	45.2	60.2	60.3	-0.1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0.9	11.1	24.1	29.6	27.8	4.6	1.9	36.1	29.6	34.3	56.2	59.3	-3.1
	공공부문	97	1.0	1.0	12.4	22.7	40.2	18.6	4.1	14.4	22.7	62.9	67.4	63.2	4.2
	민간부문	40	0.0	20.0	20.0	25.0	30.0	5.0	0.0	40.0	25.0	35.0	54.3	55.8	-1.5
	기타	5	0.0	0.0	40.0	40.0	20.0	0.0	0.0	40.0	40.0	20.0	54.3	57.2	-2.9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1.6	8.2	21.3	34.4	31.1	3.3	0.0	31.1	34.4	34.4	56.4	58.5	-2.1
	국책연구원	47	0.0	14.9	27.7	23.4	23.4	6.4	4.3	42.6	23.4	34.0	55.9	61.9	-6.0
	정부부처	45	2.2	0.0	6.7	28.9	28.9	24.4	8.9	8.9	28.9	62.2	70.1	65.6	4.5
	공공기관	43	0.0	2.3	18.6	16.3	46.5	16.3	0.0	20.9	16.3	62.8	65.1	63.1	2.0
	국제기구	9	0.0	0.0	11.1	22.2	66.7	0.0	0.0	11.1	22.2	66.7	65.1	57.1	8.0
	시민단체	22	0.0	27.3	22.7	22.7	27.3	0.0	0.0	50.0	22.7	27.3	50.0	56.0	-6.0
	민간기관	18	0.0	11.1	16.7	27.8	33.3	11.1	0.0	27.8	27.8	44.4	59.5	55.6	3.9
	기타	5	0.0	0.0	40.0	40.0	20.0	0.0	0.0	40.0	40.0	20.0	54.3	57.2	-2.9
종사 분야	교육	33	0.0	6.1	18.2	24.2	33.3	15.2	3.0	24.2	24.2	51.5	63.2	58.3	4.9
	보건의료	20	0.0	5.0	10.0	40.0	30.0	15.0	0.0	15.0	40.0	45.0	62.8	56.7	6.1
	공공행정·거버넌스	50	2.0	4.0	24.0	28.0	22.0	14.0	6.0	30.0	28.0	42.0	61.4	64.6	-3.2
	농촌개발	21	4.8	0.0	19.0	19.0	42.9	14.3	0.0	23.8	19.0	57.1	62.6	63.6	-1.0
	교통인프라	6	0.0	0.0	16.7	16.7	66.7	0.0	0.0	16.7	16.7	66.7	64.3	67.3	-3.0
	정보통신·IT기술	14	0.0	7.1	7.1	28.6	42.9	14.3	0.0	14.3	28.6	57.1	64.3	60.0	4.3
	과학기술	11	0.0	9.1	27.3	9.1	45.5	0.0	9.1	36.4	9.1	54.5	61.0	63.5	-2.5
	환경·기후변화	17	0.0	0.0	23.5	11.8	41.2	23.5	0.0	23.5	11.8	64.7	66.4	58.0	8.4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0.0	18.2	18.2	27.3	36.4	0.0	0.0	36.4	27.3	36.4	54.5	57.1	-2.6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57.1	57.2	-0.1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0.0	16.1	17.9	32.1	32.1	1.8	0.0	33.9	32.1	33.9	55.1	59.0	-3.9
	기타	10	0.0	30.0	30.0	20.0	10.0	0.0	10.0	60.0	20.0	20.0	50.0	57.1	-7.1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1.9	3.8	11.5	28.8	36.5	13.5	3.8	17.3	28.8	53.8	64.3	63.8	0.5
	5년 미만	41	0.0	4.9	29.3	17.1	26.8	14.6	7.3	34.1	17.1	48.8	62.7	61.4	1.3
	10년 미만	77	1.3	9.1	20.8	24.7	33.8	10.4	0.0	31.2	24.7	44.2	58.8	61.7	-2.9
	15년 미만	32	0.0	9.4	25.0	25.0	34.4	6.3	0.0	34.4	25.0	40.6	57.6	54.1	3.5
	20년 미만	17	0.0	11.8	11.8	29.4	47.1	0.0	0.0	23.5	29.4	47.1	58.8	55.0	3.8
	20년 이상	31	0.0	16.1	12.9	38.7	22.6	6.5	3.2	29.0	38.7	32.3	57.1	58.4	-1.3
성별	남성	162	1.2	9.3	16.0	27.2	33.3	10.5	2.5	26.5	27.2	46.3	60.5	61.2	-0.7
	여성	88	0.0	6.8	25.0	25.0	31.8	9.1	2.3	31.8	25.0	43.2	59.7	58.8	0.9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2.3	6.8	9.1	22.7	31.8	22.7	4.5	18.2	22.7	59.1	65.9	63.6	2.3
	석사 졸업	85	0.0	7.1	16.5	31.8	35.3	7.1	2.4	23.5	31.8	44.7	60.8	57.0	3.8
	박사 졸업	121	0.8	9.9	24.8	24.0	31.4	7.4	1.7	35.5	24.0	40.5	57.7	61.2	-3.5

(3) 전년 대비 과제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그림 3-5 | 전년대비 과제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한 만족도



Q. 전년 대비 과제의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전년 대비 과제 추진현황 및 성과를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48.4%, '보통'이라는 응답이 34.8%인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6.8%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과제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자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연구부문 전문가 중 34.3%, 공공부문 전문가 중 68%, 민간부문 전문가 중 4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소속기관 세분 유형별로 살펴본 만족도에서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국제기구에 종사하는 전문가 모두 66%를 상회하는 비율이 전년과 대비하여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반면, 학계 및 국책연구원, 시민단체는 30% 초중반대에 그치는 비율이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중에서도 공공부문(10.3%)과 연구부문(21.3%), 민간부문(22.5%)의 격차는 만족한다는 응답과 마찬가지로 2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종사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행정·거버넌스, 농촌개발, 교통인프라, 정보통신·IT기술,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만족도 비율이 50% 이상을 나타내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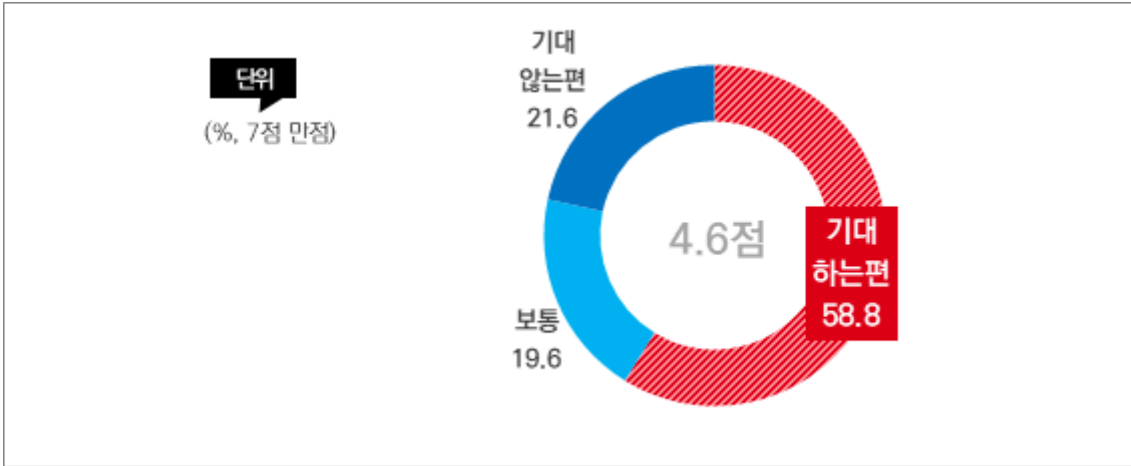
표 3-11 | 응답자 특성별 전년 대비 과제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점수 환산 2018	
		매우 불만족	상당히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상당히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250	1.6	2.8	12.4	34.8	32.0	14.4	2.0	16.8	34.8	48.4	63.4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1.9	5.6	13.9	44.4	24.1	9.3	0.9	21.3	44.4	34.3	59.2
	공공부문	97	1.0	0.0	9.3	21.6	41.2	22.7	4.1	10.3	21.6	68.0	69.5
	민간부문	40	2.5	2.5	17.5	37.5	30.0	10.0	0.0	22.5	37.5	40.0	60.0
	기타	5	0.0	0.0	0.0	60.0	40.0	0.0	0.0	0.0	60.0	40.0	62.8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1.6	6.6	14.8	41.0	27.9	8.2	0.0	23.0	41.0	36.1	58.8
	국책연구원	47	2.1	4.3	12.8	48.9	19.1	10.6	2.1	19.1	48.9	31.9	59.9
	정부부처	45	2.2	0.0	2.2	26.7	31.1	28.9	8.9	4.4	26.7	68.9	72.4
	공공기관	43	0.0	0.0	16.3	16.3	46.5	20.9	0.0	16.3	16.3	67.4	67.4
	국제기구	9	0.0	0.0	11.1	22.2	66.7	0.0	0.0	11.1	22.2	66.7	65.1
	시민단체	22	4.5	4.5	18.2	40.9	31.8	0.0	0.0	27.3	40.9	31.8	55.8
	민간기관	18	0.0	0.0	16.7	33.3	27.8	22.2	0.0	16.7	33.3	50.0	65.1
	기타	5	0.0	0.0	0.0	60.0	40.0	0.0	0.0	0.0	60.0	40.0	62.8
종사 분야	교육	33	0.0	3.0	9.1	39.4	24.2	24.2	0.0	12.1	39.4	48.5	65.3
	보건의료	20	0.0	0.0	5.0	55.0	25.0	15.0	0.0	5.0	55.0	40.0	64.3
	공공행정·거버넌스	50	4.0	0.0	16.0	28.0	28.0	18.0	6.0	20.0	28.0	52.0	64.8
	농촌개발	21	4.8	0.0	4.8	28.6	33.3	28.6	0.0	9.5	28.6	61.9	67.3
	교통인프라	6	0.0	0.0	16.7	33.3	50.0	0.0	0.0	16.7	33.3	50.0	61.9
	정보통신·IT기술	14	0.0	7.1	21.4	14.3	42.9	14.3	0.0	28.6	14.3	57.1	62.2
	과학기술	11	0.0	9.1	18.2	18.2	27.3	18.2	9.1	27.3	18.2	54.5	64.9
	환경·기후변화	17	0.0	0.0	11.8	41.2	23.5	23.5	0.0	11.8	41.2	47.1	65.5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0.0	0.0	9.1	54.5	36.4	0.0	0.0	9.1	54.5	36.4	61.0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71.4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1.8	5.4	12.5	37.5	39.3	3.6	0.0	19.6	37.5	42.9	59.7
기타	10	0.0	10.0	20.0	30.0	30.0	0.0	10.0	30.0	30.0	40.0	60.0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1.9	0.0	5.8	30.8	38.5	19.2	3.8	7.7	30.8	61.5	68.1
	5년 미만	41	0.0	0.0	17.1	36.6	24.4	17.1	4.9	17.1	36.6	46.3	65.1
	10년 미만	77	2.6	6.5	15.6	33.8	26.0	15.6	0.0	24.7	33.8	41.6	60.1
	15년 미만	32	0.0	0.0	15.6	40.6	28.1	15.6	0.0	15.6	40.6	43.8	63.4
	20년 미만	17	5.9	5.9	0.0	23.5	58.8	5.9	0.0	11.8	23.5	64.7	63.0
	20년 이상	31	0.0	3.2	12.9	41.9	35.5	3.2	3.2	16.1	41.9	41.9	61.7
성별	남성	162	2.5	3.1	11.7	30.9	34.0	16.0	1.9	17.3	30.9	51.9	63.7
	여성	88	0.0	2.3	13.6	42.0	28.4	11.4	2.3	15.9	42.0	42.0	62.8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2.3	2.3	9.1	27.3	31.8	22.7	4.5	13.6	27.3	59.1	67.2
	석사 졸업	85	0.0	1.2	11.8	35.3	42.4	8.2	1.2	12.9	35.3	51.8	64.0
	박사 졸업	121	2.5	4.1	14.0	37.2	24.8	15.7	1.7	20.7	37.2	42.1	61.6

(4) 체계·통합·효율적 개발원조 과제 기대 수준

| 그림 3-6 | 개발원조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 수준



Q. 선생님께서는 ODA 관련 현 정부의 위 과제가 얼마나 잘 추진될 것이라 기대하십니까?

- 개발원조 과제에 대한 향후 기대 수준을 물어본 결과 '기대'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58.8%, '보통'이라는 응답이 19.6%, '기대않는'편이라는 응답은 21.6%로 나타났다.

국정과제에 대한 기대수준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기대수준을 살펴봤을 때 65.1점으로 전년도의 66.7점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부문과 공공부문, 민간부문 모두 50%에 육박하거나 상회하는 비율로 향후 체계·통합·효율적 개발원조 과제에 대해 기대한다고 조사되었다. 이 중 공공부문의 향후 기대 수준과 기대하지 않는 수준은 연구부문과 민간부문의 그것과 다소 큰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속기관 세분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국제기구 전문가 중 88.9%가 기대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여 국제 사회에서 바라본 한국의 개발원조 과제 기대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사 기간별로 살펴보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3년 미만 종사한 전문가들의 '기대'하는 편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67.3%, 만족도 점수는 69.2점으로 나타난 반면 2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들의 기대 비율은 41.9%, 만족도 점수는 61.7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전문가들의 향후 기대 수준은 매우 오래 종사한 전문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3-12 | 응답자 특성별 개발원조 과제 기대 수준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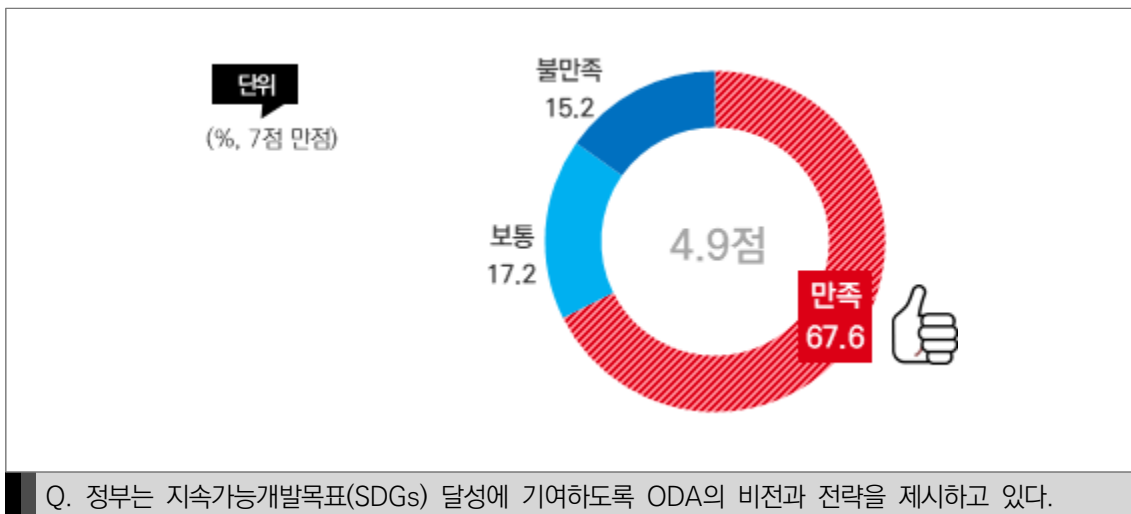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점수합산			
		전혀 기대 안함	거의 기대 안함	별로 기대 안함	보통	다소 기대	상당히 기대	매우 기대	기대 않는 편	보통	기대 하는 편	2018	2017	전년 대비	
전체	250	1.2	3.6	16.8	19.6	38.8	15.6	4.4	21.6	19.6	58.8	65.1	66.7	-1.6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1.9	4.6	21.3	23.1	37.0	11.1	0.9	27.8	23.1	49.1	60.8	65.3	-4.5
	공공부문	97	1.0	1.0	11.3	16.5	38.1	23.7	8.2	13.4	16.5	70.1	70.5	67.4	3.1
	민간부문	40	0.0	5.0	20.0	17.5	45.0	7.5	5.0	25.0	17.5	57.5	63.6	68.5	-4.9
	기타	5	0.0	20.0	0.0	20.0	40.0	20.0	0.0	20.0	20.0	60.0	62.8	67.9	-5.1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1.6	6.6	16.4	26.2	41.0	8.2	0.0	24.6	26.2	49.2	60.4	64.3	-3.9
	국책연구원	47	2.1	2.1	27.7	19.1	31.9	14.9	2.1	31.9	19.1	48.9	61.4	68.1	-6.7
	정부부처	45	0.0	0.0	6.7	15.6	44.4	17.8	15.6	6.7	15.6	77.8	74.3	69.2	5.1
	공공기관	43	2.3	2.3	18.6	18.6	23.3	32.6	2.3	23.3	18.6	58.1	66.4	66.6	-0.2
	국제기구	9	0.0	0.0	0.0	11.1	77.8	11.1	0.0	0.0	11.1	88.9	71.4	65.3	6.1
	시민단체	22	0.0	4.5	13.6	22.7	59.1	0.0	0.0	18.2	22.7	59.1	62.3	66.8	-4.5
	민간기관	18	0.0	5.6	27.8	11.1	27.8	16.7	11.1	33.3	11.1	55.6	65.1	70.7	-5.6
	기타	5	0.0	20.0	0.0	20.0	40.0	20.0	0.0	20.0	20.0	60.0	62.8	67.9	-5.1
종사 분야	교육	33	0.0	6.1	6.1	27.3	30.3	27.3	3.0	12.1	27.3	60.6	67.9	67.2	0.7
	보건의료	20	0.0	5.0	20.0	25.0	40.0	10.0	0.0	25.0	25.0	50.0	61.4	63.1	-1.7
	공공행정·거버넌스	50	2.0	2.0	16.0	20.0	36.0	14.0	10.0	20.0	20.0	60.0	66.8	69.0	-2.2
	농촌개발	21	4.8	9.5	4.8	14.3	23.8	38.1	4.8	19.0	14.3	66.7	68.0	68.2	-0.2
	교통인프라	6	0.0	0.0	33.3	0.0	66.7	0.0	0.0	33.3	0.0	66.7	61.9	77.5	-15.6
	정보통신·IT기술	14	0.0	7.1	21.4	7.1	28.6	28.6	7.1	28.6	7.1	64.3	67.3	63.8	3.5
	과학기술	11	0.0	0.0	27.3	18.2	45.5	0.0	9.1	27.3	18.2	54.5	63.6	74.6	-11.0
	환경·기후변화	17	0.0	0.0	5.9	23.5	52.9	11.8	5.9	5.9	23.5	70.6	69.7	65.5	4.2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0.0	0.0	27.3	9.1	54.5	9.1	0.0	27.3	9.1	63.6	63.6	69.6	-6.0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71.4	71.4	0.0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0.0	3.6	19.6	23.2	42.9	10.7	0.0	23.2	23.2	53.6	62.5	63.6	-1.1
	기타	10	10.0	0.0	40.0	10.0	30.0	0.0	10.0	50.0	10.0	40.0	55.7	75.0	-19.3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0.0	0.0	15.4	17.3	40.4	21.2	5.8	15.4	17.3	67.3	69.2	67.2	2.0
	5년 미만	41	0.0	2.4	17.1	19.5	36.6	17.1	7.3	19.5	19.5	61.0	67.2	69.5	-2.3
	10년 미만	77	2.6	7.8	18.2	18.2	36.4	13.0	3.9	28.6	18.2	53.2	61.8	68.6	-6.8
	15년 미만	32	0.0	3.1	9.4	21.9	43.8	18.8	3.1	12.5	21.9	65.6	67.8	63.7	4.1
	20년 미만	17	0.0	5.9	23.5	0.0	64.7	5.9	0.0	29.4	0.0	70.6	63.0	60.0	3.0
	20년 이상	31	3.2	0.0	19.4	35.5	25.8	12.9	3.2	22.6	35.5	41.9	61.7	62.1	-0.4
성별	남성	162	1.2	4.3	16.7	17.9	38.9	16.0	4.9	22.2	17.9	59.9	65.2	67.1	-1.9
	여성	88	1.1	2.3	17.0	22.7	38.6	14.8	3.4	20.5	22.7	56.8	64.8	66.0	-1.2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0.0	2.3	6.8	20.5	45.5	18.2	6.8	9.1	20.5	70.5	70.1	69.8	0.3
	석사 졸업	85	1.2	2.4	14.1	21.2	44.7	12.9	3.5	17.6	21.2	61.2	65.5	64.6	0.9
	박사 졸업	121	1.7	5.0	22.3	18.2	32.2	16.5	4.1	28.9	18.2	52.9	62.9	66.9	-4.0

제2절 ODA 체계·통합·효율성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1. ODA 정책 체계성에 대한 만족도

1) 체계성 1 : SDGs 달성에 기여하는 비전·전략 제시

| 그림 3-7 | SDGs 달성에 기여하는 비전·전략 제시에 대한 만족도



- 정부가 SDGs 달성에 기여하도록 ODA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67.6%(매우 만족 6.8% + 상당히 만족 28% + 약간 만족 32.8%)로 나타난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5.2%(매우 불만족 0.4% + 상당히 불만족 4% + 약간 불만족 10.8%)로 나타났다.

ODA 비전·전략 제시에 대한 만족도 점수(100점 만점)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3.2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응답자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전문가 중 76.3%가 SDGs 달성에 필요한 ODA의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문항에 '만족'이라고 응답을 하였으며, 연구부문이 63%, 민간부문이 55%로 나타났다. '불만족'이라는 응답의 비율 또한 공공부문(9.3%)과 연구부문(18.5%), 민간부문(22.5%) 간에 다소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민간부문은 '만족' 응답의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불만족' 응답의 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 세분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부처와 국책연구원 간의 만족도 비율과 점수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정부부처 전문가들의 '만족' 비율은 77.8%, 만족도 점수는 7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국책연구원 전문가들의 '만족' 비율은 48.9%, 만족도 점수는 6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부처 전문가들과

국책연구원 전문가들의 전년 대비 만족도 점수의 차이(정부부처 +8.0점, 국책연구원 - 6.9점)에서도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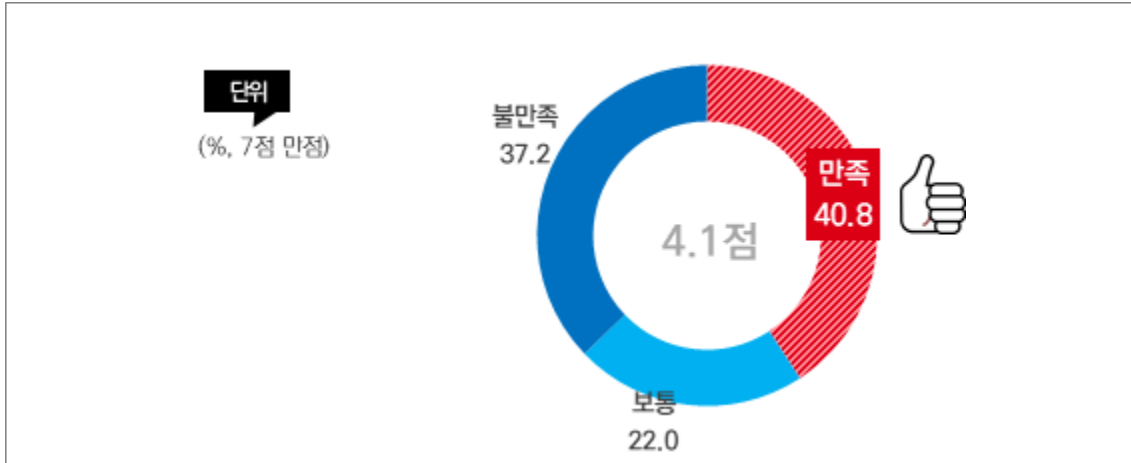
| 표 3-13 | 응답자 특성별 ODA 비전·전략 제시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점수합산			
		매우 불만족	상당히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상당히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2018	2017	전년 대비	
전체	250	0.4	4.0	10.8	17.2	32.8	28.0	6.8	15.2	17.2	67.6	69.9	66.7	3.2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0.0	5.6	13.0	18.5	31.5	26.9	4.6	18.5	18.5	63.0	67.8	66.2	1.6
	공공부문	97	1.0	1.0	7.2	14.4	30.9	34.0	11.3	9.3	14.4	76.3	74.4	69.7	4.7
	민간부문	40	0.0	7.5	15.0	22.5	35.0	17.5	2.5	22.5	22.5	55.0	63.9	61.7	2.2
	기타	5	0.0	0.0	0.0	0.0	80.0	20.0	0.0	0.0	0.0	100.0	74.3	53.6	20.7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0.0	6.6	9.8	9.8	39.3	29.5	4.9	16.4	9.8	73.8	70.0	64.3	5.7
	국책연구원	47	0.0	4.3	17.0	29.8	21.3	23.4	4.3	21.3	29.8	48.9	65.0	71.9	-6.9
	정부부처	45	0.0	2.2	4.4	15.6	26.7	35.6	15.6	6.7	15.6	77.8	76.5	68.5	8.0
	공공기관	43	2.3	0.0	9.3	14.0	27.9	37.2	9.3	11.6	14.0	74.4	73.4	70.3	3.1
	국제기구	9	0.0	0.0	11.1	11.1	66.7	11.1	0.0	11.1	11.1	77.8	68.2	70.4	-2.2
	시민단체	22	0.0	4.5	13.6	31.8	50.0	0.0	0.0	18.2	31.8	50.0	61.0	55.4	5.6
	민간기관	18	0.0	11.1	16.7	11.1	16.7	38.9	5.6	27.8	11.1	61.1	67.5	69.9	-2.4
	기타	5	0.0	0.0	0.0	0.0	80.0	20.0	0.0	0.0	0.0	100.0	74.3	53.6	20.7
종사 분야	교육	33	0.0	3.0	9.1	15.2	33.3	30.3	9.1	12.1	15.2	72.7	72.3	64.1	8.2
	보건의료	20	0.0	5.0	25.0	20.0	20.0	30.0	0.0	30.0	20.0	50.0	63.6	59.9	3.7
	공공행정·거버넌스	50	2.0	2.0	8.0	18.0	28.0	32.0	10.0	12.0	18.0	70.0	72.0	72.1	-0.1
	농촌개발	21	0.0	4.8	4.8	0.0	42.9	38.1	9.5	9.5	0.0	90.5	76.2	68.7	7.5
	교통인프라	6	0.0	0.0	0.0	0.0	50.0	50.0	0.0	0.0	0.0	100.0	78.6	77.5	1.1
	정보통신·IT기술	14	0.0	0.0	7.1	7.1	21.4	50.0	14.3	7.1	7.1	85.7	79.6	68.6	11
	과학기술	11	0.0	9.1	9.1	18.2	45.5	0.0	18.2	18.2	18.2	63.6	67.5	76.2	-8.7
	환경·기후변화	17	0.0	0.0	11.8	17.6	41.2	23.5	5.9	11.8	17.6	70.6	70.6	67.2	3.4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0.0	0.0	18.2	36.4	36.4	9.1	0.0	18.2	36.4	45.5	62.3	64.3	-2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71.4	64.3	7.1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0.0	8.9	10.7	21.4	33.9	23.2	1.8	19.6	21.4	58.9	65.3	64.7	0.6
기타	10	0.0	0.0	20.0	30.0	20.0	20.0	10.0	20.0	30.0	50.0	67.1	64.3	2.8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0.0	0.0	11.5	17.3	40.4	25.0	5.8	11.5	17.3	71.2	70.9	66.2	4.7
	5년 미만	41	0.0	2.4	19.5	12.2	34.1	24.4	7.3	22.0	12.2	65.9	68.6	70.7	-2.1
	10년 미만	77	0.0	3.9	9.1	20.8	33.8	26.0	6.5	13.0	20.8	66.2	69.7	67.6	2.1
	15년 미만	32	0.0	6.3	9.4	9.4	28.1	40.6	6.3	15.6	9.4	75.0	72.3	66.0	6.3
	20년 미만	17	0.0	23.5	5.9	11.8	29.4	23.5	5.9	29.4	11.8	58.8	63.0	57.1	5.9
	20년 이상	31	3.2	0.0	6.5	25.8	22.6	32.3	9.7	9.7	25.8	64.5	71.4	63.3	8.1
성별	남성	162	0.6	5.6	8.6	15.4	32.1	29.0	8.6	14.8	15.4	69.8	70.6	67.4	3.2
	여성	88	0.0	1.1	14.8	20.5	34.1	26.1	3.4	15.9	20.5	63.6	68.5	65.4	3.1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0.0	0.0	9.1	15.9	38.6	25.0	11.4	9.1	15.9	75.0	73.4	67.2	6.2
	석사 졸업	85	0.0	2.4	11.8	18.8	34.1	30.6	2.4	14.1	18.8	67.1	69.4	65.1	4.3
	박사 졸업	121	0.8	6.6	10.7	16.5	29.8	27.3	8.3	18.2	16.5	65.3	68.9	67.4	1.5

2) 체계성 2 : 총괄기관, 시행기관, 사업수행자 간의 권한과 책임 적절성

| 그림 3-8 | 총괄기관, 시행기관, 사업수행자 간의 권한과 책임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



Q. ODA 총괄기관(국무조정실), 주무기관(기획재정부, 외교부), 시행기관(KOICA, EDCF, 기타 정부부처), 사업수행자 간에 권한과 책임이 적절히 설정되어 있다.

- ODA 총괄기관(국무조정실), 주무기관(기획재정부, 외교부), 시행기관(KOICA, EDCF, 기타 정부부처), 사업수행자 간에 권한과 책임이 적절히 설정되어 있느냐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의 40.8%(매우 만족 1.6% + 상당히 만족 18.8% + 약간 만족 20.4%)가 '만족'이라고 응답한 반면, 37.2%(매우 불만족 2.8% + 상당히 불만족 7.2% + 약간 불만족 27.2%)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하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총괄기관, 시행기관, 사업수행자 간의 권한과 책임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3.4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전년도 대비 큰 폭의 만족도 점수 상승(+10.2점)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전문가 중 56.7%가 ODA 총괄기관, 주무기관, 시행기관, 사업수행자 간에 권한과 책임이 적절히 설정되어 있느냐에 관한 문항에 '만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연구부문이 31.5%, 민간부문이 30%로 나타났다. 만족도를 점수로 환산해서 살펴보면, 공공부문이 65.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구부문이 54.2점으로 가장 낮았다.

종사 기간으로 살펴보면, 5년 미만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서 전년도 대비 만족도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만족'한다는 응답과 '불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율에서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5년 미만 종사한 전문가들이 모두 가장 높은 수치(만족 51.2%, 불만족 43.9%)가 나타났다. 3년 미만 종사한 전문가들의 '만족' 비율은 48.1%, 만족도 점수는 6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들의 '만족' 비율은 29%, 만족도 점수는 54.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전문

가들의 만족 수준과 매우 오래 종사한 전문가들의 만족 수준 간 격차가 제법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들의 체계성 2 항목에 대한 '만족' 비율(29%)이 앞선 체계성 1과 후술할 체계성 3 항목의 '만족' 비율(체계성 1 64.5%, 체계성 3 48.4%)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오래 종사한 전문가일수록 ODA 총괄기관, 주무기관, 시행기관, 사업수행자 간에 권한과 책임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표 3-14 | 응답자 특성별 총괄기관, 시행기관, 사업수행자 간의 권한과 책임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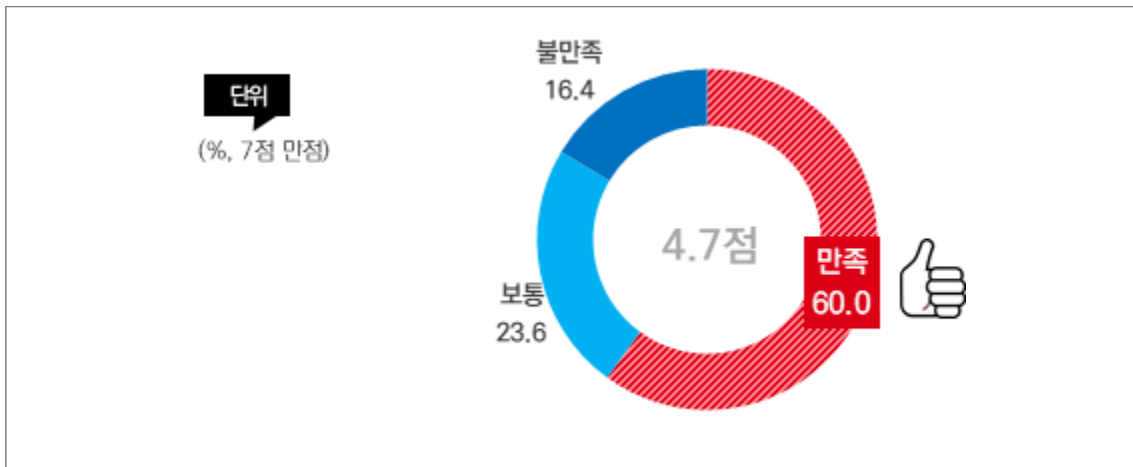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점수합산				
		매우 불만족	상당히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상당히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2018	2017	전년 대비	
전체	250	2.8	7.2	27.2	22.0	20.4	18.8	1.6	37.2	22.0	40.8	59.0	55.6	3.4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3.7	12.0	30.6	22.2	17.6	13.9	0.0	46.3	22.2	31.5	54.2	54.6	-0.4
	공공부문	97	3.1	3.1	17.5	19.6	23.7	28.9	4.1	23.7	19.6	56.7	65.8	60.8	5.0
	민간부문	40	0.0	5.0	40.0	25.0	20.0	10.0	0.0	45.0	25.0	30.0	55.7	45.5	10.2
	기타	5	0.0	0.0	40.0	40.0	20.0	0.0	0.0	40.0	40.0	20.0	54.3	57.2	-2.9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4.9	13.1	24.6	24.6	14.8	18.0	0.0	42.6	24.6	32.8	55.0	52.5	2.5
	국책연구원	47	2.1	10.6	38.3	19.1	21.3	8.5	0.0	51.1	19.1	29.8	53.2	60.5	-7.3
	정부부처	45	2.2	2.2	17.8	11.1	24.4	35.6	6.7	22.2	11.1	66.7	69.5	65.9	3.6
	공공기관	43	4.7	2.3	18.6	25.6	23.3	23.3	2.3	25.6	25.6	48.8	62.8	57.7	5.1
	국제기구	9	0.0	11.1	11.1	33.3	22.2	22.2	0.0	22.2	33.3	44.4	61.9	58.1	3.8
	시민단체	22	0.0	0.0	40.9	31.8	22.7	4.5	0.0	40.9	31.8	27.3	55.8	44.6	11.2
	민간기관	18	0.0	11.1	38.9	16.7	16.7	16.7	0.0	50.0	16.7	33.3	55.6	46.6	9.0
	기타	5	0.0	0.0	40.0	40.0	20.0	0.0	0.0	40.0	40.0	20.0	54.3	57.2	-2.9
종사 분야	교육	33	3.0	6.1	15.2	30.3	24.2	21.2	0.0	24.2	30.3	45.5	61.5	55.2	6.3
	보건의료	20	5.0	0.0	45.0	20.0	20.0	10.0	0.0	50.0	20.0	30.0	54.3	45.2	9.1
	공공행정·거버넌스	50	8.0	4.0	18.0	22.0	24.0	24.0	0.0	30.0	22.0	48.0	60.3	60.5	-0.2
	농촌개발	21	4.8	4.8	28.6	19.0	19.0	19.0	4.8	38.1	19.0	42.9	59.9	57.6	2.3
	교통인프라	6	0.0	16.7	50.0	0.0	0.0	33.3	0.0	66.7	0.0	33.3	54.8	65.3	-10.5
	정보통신·IT기술	14	0.0	7.1	21.4	14.3	21.4	35.7	0.0	28.6	14.3	57.1	65.3	51.4	13.9
	과학기술	11	0.0	0.0	36.4	36.4	9.1	9.1	9.1	36.4	36.4	27.3	59.7	65.1	-5.4
	환경·기후변화	17	0.0	11.8	23.5	23.5	11.8	23.5	5.9	35.3	23.5	41.2	61.3	58.8	2.5
	성평등·취약·인민보호	11	0.0	0.0	45.5	18.2	27.3	9.1	0.0	45.5	18.2	36.4	57.1	53.6	3.5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57.1	50.0	7.1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0.0	16.1	25.0	23.2	21.4	14.3	0.0	41.1	23.2	35.7	56.1	55.8	0.3
	기타	10	0.0	0.0	60.0	0.0	20.0	10.0	10.0	60.0	0.0	40.0	58.6	50.0	8.6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점수환산			
		매우 불만족	상당히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상당히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2018	2017	전년 대비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1.9	5.8	17.3	26.9	17.3	28.8	1.9	25.0	26.9	48.1	63.7	57.9	5.8
	5년 미만	41	2.4	0.0	41.5	4.9	31.7	19.5	0.0	43.9	4.9	51.2	60.3	60.7	-0.4
	10년 미만	77	5.2	6.5	31.2	19.5	19.5	16.9	1.3	42.9	19.5	37.7	56.8	52.8	4.0
	15년 미만	32	0.0	12.5	21.9	34.4	12.5	18.8	0.0	34.4	34.4	31.3	57.6	55.6	2.0
	20년 미만	17	0.0	11.8	29.4	11.8	17.6	23.5	5.9	41.2	11.8	47.1	61.3	52.9	8.4
	20년 이상	31	3.2	12.9	19.4	35.5	22.6	3.2	3.2	35.5	35.5	29.0	54.8	47.2	7.6
성별	남성	162	2.5	8.0	22.2	24.1	20.4	20.4	2.5	32.7	24.1	43.2	60.4	57.7	2.7
	여성	88	3.4	5.7	36.4	18.2	20.5	15.9	0.0	45.5	18.2	36.4	56.3	52.2	4.1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2.3	0.0	20.5	18.2	20.5	36.4	2.3	22.7	18.2	59.1	67.5	57.1	10.4
	석사 졸업	85	1.2	4.7	28.2	25.9	25.9	14.1	0.0	34.1	25.9	40.0	59.0	51.9	7.1
	박사 졸업	121	4.1	11.6	28.9	20.7	16.5	15.7	2.5	44.6	20.7	34.7	55.8	57.2	-1.4

3) 체계성 3 : 기획, 집행, 사업 관리 등 단계별 과정의 체계화

| 그림 3-9 | 기획, 집행, 사업 관리 등 단계별 과정의 체계화에 대한 만족도



Q. 정부는 ODA 기획, 집행, 사업 관리 등 단계별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ODA 기획, 집행, 사업 관리 등 단계별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만족'이라고 응답한 전문가의 비율은 60%(매우 만족 5.2% + 상당히 만족 24.4% + 약간 만족 30.4%)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전문가의 비율은 16.4%(매우 불만족 0.8% + 상당히 불만족 3.2% + 약간 불만족 12.4%)로 나타났다.

ODA 기획, 집행, 사업 관리 등 단계별 과정의 체계화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3.4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전년도 대비 상당한 수준의 만족도 점수 상승(+16.4점)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연구부문에서는 소폭 하락(-0.5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전문가 중 71.1%가 정부

가 기획, 집행, 사업 관리 등 단계별 과정의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만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연구부문이 51.9%, 민간부문이 57.5%로 나타났다.

종사 분야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정보통신·IT기술, 환경·기후변화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만족도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보건의료 +14.6점, 정보통신·IT기술 +10.5점, 환경·기후변화 13.4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사 기간으로 살펴보면, 3년 미만 종사한 전문가들의 경우 '만족' 비율은 69.2%, 만족도 점수는 7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들의 '만족' 비율은 48.4%, 만족도 점수는 6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종사한 기간이 늘어날수록 만족도 점수가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3-15 | 응답자 특성별 기획, 집행, 사업 관리 등 단계별 과정의 체계화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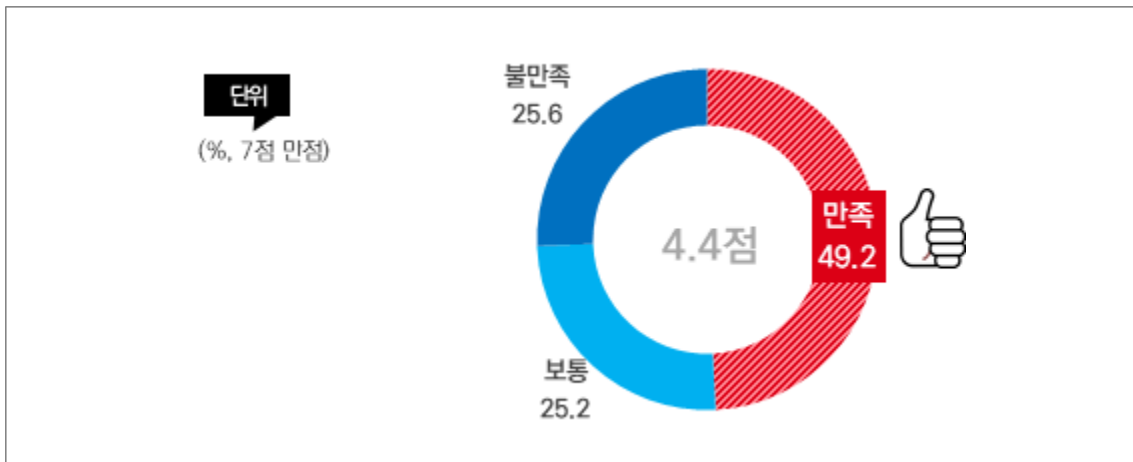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점수합산			
		매우 불만족	상당히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상당히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2018	2017	전년 대비	
전체	250	0.8	3.2	12.4	23.6	30.4	24.4	5.2	16.4	23.6	60.0	67.6	64.2	3.4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0.9	6.5	11.1	29.6	27.8	22.2	1.9	18.5	29.6	51.9	64.4	64.9	-0.5
	공공부문	97	1.0	0.0	12.4	15.5	29.9	32.0	9.3	13.4	15.5	71.1	72.3	69.7	2.6
	민간부문	40	0.0	2.5	15.0	25.0	37.5	15.0	5.0	17.5	25.0	57.5	66.1	49.7	16.4
	기타	5	0.0	0.0	20.0	40.0	40.0	0.0	0.0	20.0	40.0	40.0	60.0	60.7	-0.7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1.6	4.9	11.5	24.6	31.1	24.6	1.6	18.0	24.6	57.4	65.6	62.6	3.0
	국책연구원	47	0.0	8.5	10.6	36.2	23.4	19.1	2.1	19.1	36.2	44.7	62.9	71.4	-8.5
	정부부처	45	2.2	0.0	6.7	11.1	24.4	40.0	15.6	8.9	11.1	80.0	76.8	74.0	2.8
	공공기관	43	0.0	0.0	16.3	23.3	32.6	23.3	4.7	16.3	23.3	60.5	68.1	68.4	-0.3
	국제기구	9	0.0	0.0	22.2	0.0	44.4	33.3	0.0	22.2	0.0	77.8	69.8	62.2	7.6
	시민단체	22	0.0	0.0	18.2	36.4	36.4	4.5	4.5	18.2	36.4	45.5	63.0	48.0	15.0
	민간기관	18	0.0	5.6	11.1	11.1	38.9	27.8	5.6	16.7	11.1	72.2	69.8	51.9	17.9
	기타	5	0.0	0.0	20.0	40.0	40.0	0.0	0.0	20.0	40.0	40.0	60.0	60.7	-0.7
종사 분야	교육	33	0.0	6.1	3.0	24.2	30.3	36.4	0.0	9.1	24.2	66.7	69.7	61.4	8.3
	보건의료	20	0.0	5.0	5.0	40.0	35.0	10.0	5.0	10.0	40.0	50.0	65.0	50.4	14.6
	공공행정·거버넌스	50	2.0	0.0	22.0	12.0	32.0	24.0	8.0	24.0	12.0	64.0	68.0	69.0	-1.0
	농촌개발	21	4.8	0.0	19.0	14.3	38.1	14.3	9.5	23.8	14.3	61.9	66.0	73.7	-7.7
	교통인프라	6	0.0	0.0	16.7	16.7	50.0	16.7	0.0	16.7	16.7	66.7	66.7	77.5	-10.8
	정보통신·IT기술	14	0.0	0.0	14.3	14.3	28.6	35.7	7.1	14.3	14.3	71.4	72.4	61.9	10.5
	과학기술	11	0.0	0.0	18.2	27.3	36.4	9.1	9.1	18.2	27.3	54.5	66.2	69.8	-3.6
	환경·기후변화	17	0.0	0.0	11.8	17.6	17.6	47.1	5.9	11.8	17.6	70.6	73.9	60.5	13.4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0.0	9.1	0.0	54.5	27.3	9.1	0.0	9.1	54.5	36.4	61.0	58.9	2.1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점수환산			
		매우 불만족	상당히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상당히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2018	2017	전년 대비	
종사 기간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71.4	71.4	0.0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0.0	5.4	12.5	25.0	28.6	25.0	3.6	17.9	25.0	57.1	66.6	65.2	1.4
	기타	10	0.0	10.0	0.0	50.0	10.0	20.0	10.0	10.0	50.0	40.0	65.7	71.4	-5.7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1.9	1.9	3.8	23.1	30.8	32.7	5.8	7.7	23.1	69.2	71.4	64.5	6.9
	5년 미만	41	0.0	0.0	17.1	31.7	17.1	29.3	4.9	17.1	31.7	51.2	67.6	66.7	0.9
	10년 미만	77	1.3	3.9	16.9	16.9	33.8	22.1	5.2	22.1	16.9	61.0	66.4	64.3	2.1
	15년 미만	32	0.0	3.1	9.4	25.0	37.5	25.0	0.0	12.5	25.0	62.5	67.4	62.5	4.9
	20년 미만	17	0.0	5.9	11.8	17.6	41.2	17.6	5.9	17.6	17.6	64.7	67.2	57.8	9.4
	20년 이상	31	0.0	6.5	12.9	32.3	25.8	12.9	9.7	19.4	32.3	48.4	65.0	65.2	-0.2
성별	남성	162	1.2	3.7	12.3	22.8	30.2	24.1	5.6	17.3	22.8	59.9	67.4	65.6	1.8
	여성	88	0.0	2.3	12.5	25.0	30.7	25.0	4.5	14.8	25.0	60.2	68.2	62.0	6.2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2.3	0.0	6.8	18.2	31.8	34.1	6.8	9.1	18.2	72.7	72.4	63.9	8.5
	석사 졸업	85	0.0	1.2	14.1	21.2	31.8	28.2	3.5	15.3	21.2	63.5	68.9	61.9	7.0
	박사 졸업	121	0.8	5.8	13.2	27.3	28.9	18.2	5.8	19.8	27.3	52.9	65.0	65.7	-0.7

2. ODA 정책 통합성에 대한 만족도

1) 통합성 1 : 유무상 원조 연계성 강화를 위한 사업간 연계 활성화

| 그림 3-10 | 유무상 원조 연계성 강화를 위한 사업간 연계 활성화에 대한 만족도



Q. 정부는 유무상 원조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사업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있다.

- 정부가 유무상 원조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사업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전문가의 49.2%가 '만족'(매우 만족 3.2% + 상당히 만족 17.2% + 약간 만족 28.8%)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5.6%가 '불만족'(매우 불만족 0.4% + 상당히 불만족 5.2% + 약간 불만족 20%)이라고 응답하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유무상 원조 연계성 강화를 위한 사업간 연계 활성화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3.4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부문 전문가들의 만족도 점수가 전년도 대비 비교적 큰 폭의 상승(+9.7점)이 나타났다.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전문가들의 '만족' 비율이 70.1%로 조사되어 다른 부문의 전문가들(연구부문 36.1%, 민간부문 40%)에 비해 상당히 큰 폭의 격차를 보였다. '불만족' 비율 조사결과 역시 공공부문이 10.3%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연구부문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정부의 유무상 원조 사업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공공부문과 연구부문 전문가들의 '만족' 비율과 '불만족' 비율이 뚜렷이 대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사 기간별로는 3년 미만 종사한 전문가들의 경우 '만족' 비율이 67.3%, 만족도 점수가 70.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20년 미만 종사한 전문가들의 '만족' 비율은 35.3%, 만족도 점수는 5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불만족' 비율은 3년 미만 전문가의 '만족' 비율이 9.6%로 가장 낮은 반면, 20년 미만 전문가의 '만족' 비율은 35.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만족도 점수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오래 종사한 전문가일수록 종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전문가에 비해 유무상 원조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사업간 연계 활성화 노력을 회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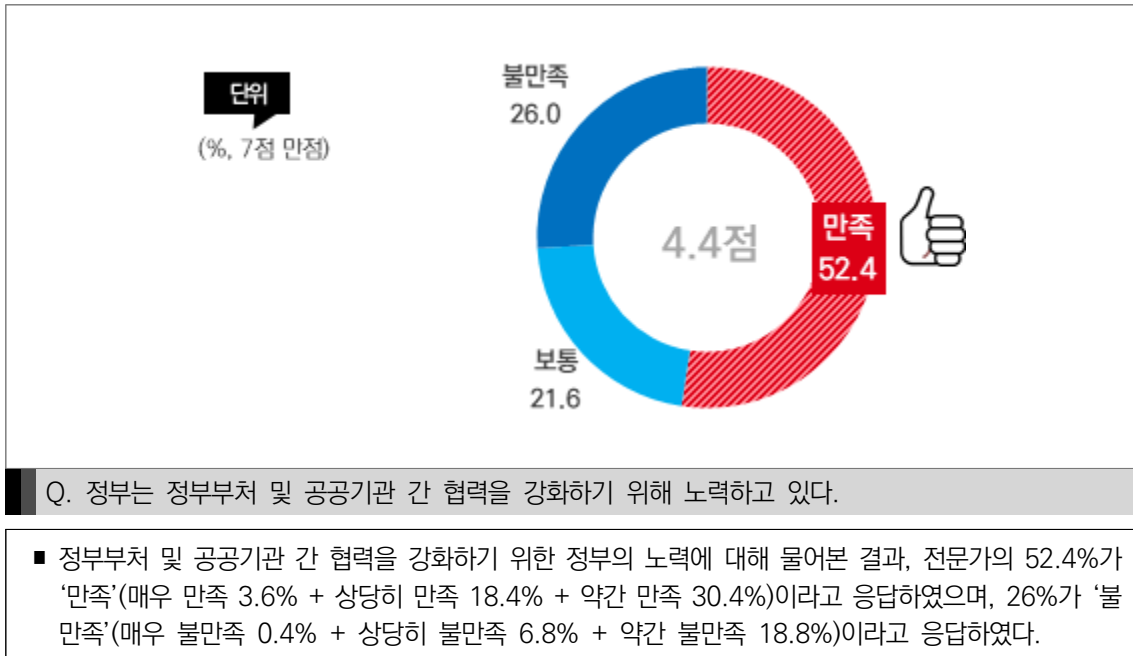
| 표 3-16 | 응답자 특성별 유무상 원조 연계성 강화를 위한 사업간 연계 활성화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점수환산			
		매우 불만족	상당히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상당히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2018	2017	전년 대비	
전체	250	0.4	5.2	20.0	25.2	28.8	17.2	3.2	25.6	25.2	49.2	63.0	59.6	3.4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0.9	7.4	26.9	28.7	25.9	9.3	0.9	35.2	28.7	36.1	57.5	56.8	0.7
	공공부문	97	0.0	2.1	8.2	19.6	30.9	32.0	7.2	10.3	19.6	70.1	72.0	67.4	4.6
	민간부문	40	0.0	7.5	25.0	27.5	35.0	5.0	0.0	32.5	27.5	40.0	57.8	48.1	9.7
	기타	5	0.0	0.0	60.0	40.0	0.0	0.0	0.0	60.0	40.0	0.0	48.6	60.7	-12.1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1.6	9.8	23.0	29.5	27.9	8.2	0.0	34.4	29.5	36.1	56.7	53.8	2.9
	국책연구원	47	0.0	4.3	31.9	27.7	23.4	10.6	2.1	36.2	27.7	36.2	58.7	65.2	-6.5
	정부부처	45	0.0	0.0	6.7	17.8	24.4	37.8	13.3	6.7	17.8	75.6	76.2	71.4	4.8
	공공기관	43	0.0	4.7	7.0	25.6	34.9	25.6	2.3	11.6	25.6	62.8	68.1	64.7	3.4
	국제기구	9	0.0	0.0	22.2	0.0	44.4	33.3	0.0	22.2	0.0	77.8	69.8	66.3	3.5
	시민단체	22	0.0	0.0	36.4	22.7	36.4	4.5	0.0	36.4	22.7	40.9	58.4	47.4	11.0
	민간기관	18	0.0	16.7	11.1	33.3	33.3	5.6	0.0	27.8	33.3	38.9	57.1	48.9	8.2
	기타	5	0.0	0.0	60.0	40.0	0.0	0.0	0.0	60.0	40.0	0.0	48.6	60.7	-12.1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점수환산			
			매우 불만족	상당히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상당히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2018	2017	전년 대비
종사 분야	교육	33	3.0	3.0	15.2	24.2	27.3	24.2	3.0	21.2	24.2	54.5	64.9	55.2	9.7
	보건의료	20	0.0	10.0	15.0	35.0	25.0	15.0	0.0	25.0	35.0	40.0	60.0	51.2	8.8
	공공행정·거버넌스	50	0.0	6.0	18.0	30.0	20.0	20.0	6.0	24.0	30.0	46.0	64.0	67.0	-3.0
	농촌개발	21	0.0	4.8	28.6	23.8	19.0	19.0	4.8	33.3	23.8	42.9	61.9	65.9	-4.0
	교통인프라	6	0.0	16.7	16.7	33.3	33.3	0.0	0.0	33.3	33.3	33.3	54.8	65.3	-10.5
	정보통신·IT기술	14	0.0	7.1	28.6	14.3	28.6	21.4	0.0	35.7	14.3	50.0	61.2	53.3	7.9
	과학기술	11	0.0	0.0	18.2	27.3	45.5	0.0	9.1	18.2	27.3	54.5	64.9	66.6	-1.7
	환경·기후변화	17	0.0	0.0	11.8	17.6	29.4	35.3	5.9	11.8	17.6	70.6	72.3	57.1	15.2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0.0	0.0	18.2	45.5	18.2	18.2	0.0	18.2	45.5	36.4	62.3	60.7	1.6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0.0	42.9	64.3	-21.4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0.0	7.1	21.4	17.9	42.9	10.7	0.0	28.6	17.9	53.6	61.2	59.0	2.2
기타	10	0.0	0.0	30.0	30.0	20.0	10.0	10.0	30.0	30.0	40.0	62.9	60.7	2.2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0.0	3.8	5.8	23.1	30.8	32.7	3.8	9.6	23.1	67.3	70.6	62.1	8.5
	5년 미만	41	0.0	2.4	26.8	29.3	17.1	17.1	7.3	29.3	29.3	41.5	63.1	63.3	-0.2
	10년 미만	77	1.3	5.2	20.8	27.3	27.3	16.9	1.3	27.3	27.3	45.5	61.4	58.7	2.7
	15년 미만	32	0.0	9.4	21.9	21.9	31.3	15.6	0.0	31.3	21.9	46.9	60.3	56.0	4.3
	20년 미만	17	0.0	5.9	29.4	29.4	29.4	0.0	5.9	35.3	29.4	35.3	58.0	52.1	5.9
	20년 이상	31	0.0	6.5	25.8	19.4	41.9	3.2	3.2	32.3	19.4	48.4	59.9	58.4	1.5
성별	남성	162	0.6	6.8	19.8	24.7	30.2	14.8	3.1	27.2	24.7	48.1	62.0	61.2	0.8
	여성	88	0.0	2.3	20.5	26.1	26.1	21.6	3.4	22.7	26.1	51.1	64.9	57.0	7.9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0.0	0.0	9.1	29.5	20.5	36.4	4.5	9.1	29.5	61.4	71.1	64.3	6.8
	석사 졸업	85	0.0	5.9	18.8	17.6	40.0	16.5	1.2	24.7	17.6	57.6	63.7	57.6	6.1
	박사 졸업	121	0.8	6.6	24.8	28.9	24.0	10.7	4.1	32.2	28.9	38.8	59.6	59.3	0.3

2) 통합성 2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협력 강화 노력

| 그림 3-11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협력 강화 노력에 대한 만족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협력 강화 노력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상승(+3.7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합성 2 항목에서도 마찬가지로 민간부문 전문가들의 만족도 점수가 전년도 대비 큰 폭의 상승(+12.9점)이 나타났다.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전문가들의 '만족' 비율이 71.1%로 조사되어 다른 부문의 전문가들(연구부문 41.7%, 민간부문 42.5%)에 비해 상당히 큰 폭의 격차를 보였다. '불만족' 응답 비율은 공공부문이 12.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연구부문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를 점수로 환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공공부문이 71.1점으로 연구부문 58.7점, 민간부문 60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63.5점보다 7.6점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종사기간별로 살펴보면, 모든 기간의 전문가 집단에서 대체로 '만족' 비율이 '불만족'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 미만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종사한 전문가들의 만족도 점수가 전년 대비 가장 큰 폭(+11.1점)으로 상승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관련 분야에서 짧게 종사한 3년 미만, 5년 미만 전문가들 간의 만족도 및 불만족도 비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 것(3년 미만 만족도 59.6%, 불만족도 17.3%, 5년 미만 만족도 43.9%, 불만족도 34.1%)은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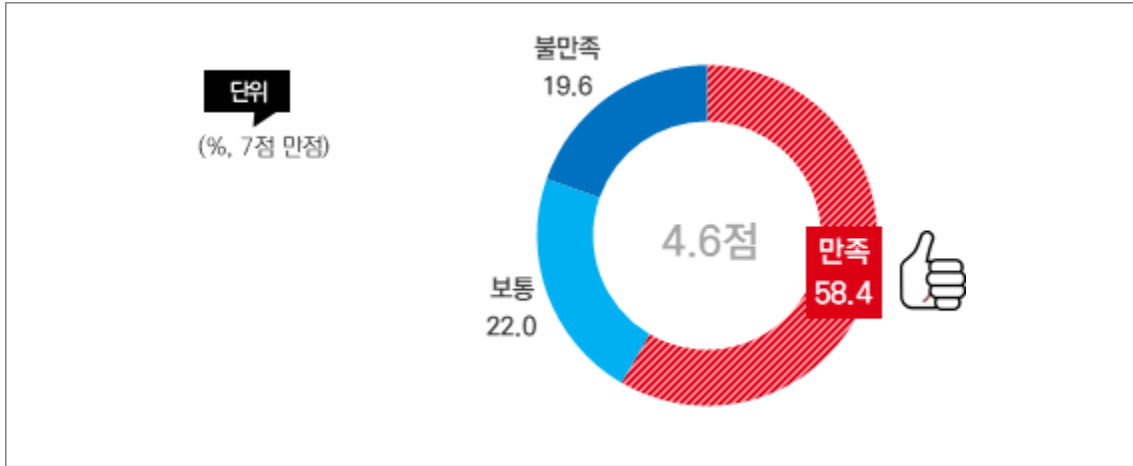
| 표 3-17 | 응답자 특성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협력 강화 노력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점수합산			
		매우 불만족	상당히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상당히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2018	2017	전년 대비	
전체	250	0.4	6.8	18.8	21.6	30.4	18.4	3.6	26.0	21.6	52.4	63.5	59.8	3.7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0.9	12.0	20.4	25.0	25.9	14.8	0.9	33.3	25.0	41.7	58.7	58.5	0.2
	공공부문	97	0.0	2.1	10.3	16.5	38.1	24.7	8.2	12.4	16.5	71.1	71.1	66.6	4.5
	민간부문	40	0.0	5.0	27.5	25.0	27.5	15.0	0.0	32.5	25.0	42.5	60.0	47.1	12.9
	기타	5	0.0	0.0	80.0	20.0	0.0	0.0	0.0	80.0	20.0	0.0	45.7	60.7	-15.0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1.6	13.1	16.4	27.9	27.9	13.1	0.0	31.1	27.9	41.0	58.1	56.1	2.0
	국책연구원	47	0.0	10.6	25.5	21.3	23.4	17.0	2.1	36.2	21.3	42.6	59.6	65.2	-5.6
	정부부처	45	0.0	0.0	11.1	4.4	42.2	28.9	13.3	11.1	4.4	84.4	75.5	71.0	4.5
	공공기관	43	0.0	4.7	9.3	25.6	34.9	20.9	4.7	14.0	25.6	60.5	67.4	64.9	2.5
	국제기구	9	0.0	0.0	11.1	33.3	33.3	22.2	0.0	11.1	33.3	55.6	66.6	60.2	6.4
	시민단체	22	0.0	4.5	27.3	27.3	27.3	13.6	0.0	31.8	27.3	40.9	59.7	46.9	12.8
	민간기관	18	0.0	5.6	27.8	22.2	27.8	16.7	0.0	33.3	22.2	44.4	60.3	47.4	12.9
	기타	5	0.0	0.0	80.0	20.0	0.0	0.0	0.0	80.0	20.0	0.0	45.7	60.7	-15.0
	종사 분야	교육	33	3.0	9.1	9.1	24.2	33.3	21.2	0.0	21.2	24.2	54.5	62.8	54.4
보건의료	20	0.0	10.0	25.0	30.0	20.0	15.0	0.0	35.0	30.0	35.0	57.9	49.6	8.3	
공공행정·거버넌스	50	0.0	6.0	24.0	20.0	24.0	20.0	6.0	30.0	20.0	50.0	63.7	68.4	-4.7	
농촌개발	21	0.0	4.8	19.0	33.3	14.3	19.0	9.5	23.8	33.3	42.9	64.6	60.8	3.8	
교통인프라	6	0.0	0.0	33.3	33.3	33.3	0.0	0.0	33.3	33.3	33.3	57.1	59.2	-2.1	
정보통신·IT기술	14	0.0	7.1	21.4	7.1	28.6	28.6	7.1	28.6	7.1	64.3	67.3	61.9	5.4	
과학기술	11	0.0	0.0	27.3	9.1	36.4	18.2	9.1	27.3	9.1	63.6	67.5	63.5	4.0	
환경·기후변화	17	0.0	5.9	0.0	23.5	29.4	35.3	5.9	5.9	23.5	70.6	72.2	55.4	16.8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0.0	0.0	27.3	27.3	36.4	9.1	0.0	27.3	27.3	45.5	61.0	60.7	0.3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57.1	57.2	-0.1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0.0	8.9	14.3	17.9	42.9	16.1	0.0	23.2	17.9	58.9	63.3	63.1	0.2	
기타	10	0.0	10.0	40.0	10.0	30.0	0.0	10.0	50.0	10.0	40.0	57.2	57.1	0.1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0.0	5.8	11.5	23.1	36.5	19.2	3.8	17.3	23.1	59.6	66.2	64.0	2.2
	5년 미만	41	0.0	4.9	29.3	22.0	22.0	17.1	4.9	34.1	22.0	43.9	61.7	61.4	0.3
	10년 미만	77	1.3	9.1	22.1	19.5	22.1	23.4	2.6	32.5	19.5	48.1	61.8	58.3	3.5
	15년 미만	32	0.0	9.4	12.5	18.8	37.5	18.8	3.1	21.9	18.8	59.4	64.7	56.0	8.7
	20년 미만	17	0.0	0.0	23.5	17.6	47.1	5.9	5.9	23.5	17.6	58.8	64.7	53.6	11.1
	20년 이상	31	0.0	6.5	12.9	29.0	35.5	12.9	3.2	19.4	29.0	51.6	63.6	61.5	2.1
성별	남성	162	0.6	8.0	17.3	24.7	29.0	16.0	4.3	25.9	24.7	49.4	62.7	60.8	1.9
	여성	88	0.0	4.5	21.6	15.9	33.0	22.7	2.3	26.1	15.9	58.0	64.9	58.2	6.7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0.0	2.3	18.2	13.6	27.3	34.1	4.5	20.5	13.6	65.9	69.5	61.0	8.5
	석사 졸업	85	0.0	3.5	20.0	21.2	37.6	16.5	1.2	23.5	21.2	55.3	63.9	59.7	4.2
	박사 졸업	121	0.8	10.7	18.2	24.8	26.4	14.0	5.0	29.8	24.8	45.5	61.0	59.6	1.4

3) 통합성 3 : 정부 외 민간기업, NGO와 협업 활성화 노력

| 그림 3-12 | 정부 외 민간기업, NGO와 협업 활성화 노력에 대한 만족도



Q. 정부는 정부 외 민간기업, NGO와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정부가 정부 외 민간기업, NGO와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문가의 58.4%가 '만족'(매우 만족 4% + 상당히 만족 19.6% + 약간 만족 34.8%)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9.6%가 '불만족'(매우 불만족 0.4% + 상당히 불만족 3.2% + 약간 불만족 16%)이라고 응답하였다.

정부의 민간기업, NGO와 협업 활성화 노력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상승(+3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성 3 항목에서도 마찬가지로 민간부문 전문가들의 만족도 점수가 전년도 대비 큰 폭 상승(+14.9점)하여, 연구부문과 공공부문과의 만족도 점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소속기관 세분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시민단체의 만족도 점수(64.3점)가 전년도와 비교해 18.6점 상승한 것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전문가들의 70.7%가 '만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연구부문 50%, 민간부문 60%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사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환경·기후변화, 성평등·취약·인권보호 분야 전문가들의 만족도 점수가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상승(보건의료 +11.3점, 환경·기후변화 +10.1점,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3점)하였으나, 교통인프라와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은 전년도 대비 만족도 점수가 다소 하락(교통인프라 -8.5점, 과학기술 -8.6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사 기간별로 살펴보면, 5년 미만 국제개발협력 분야 종사자를 제외한 전 기간의 전문가층에서 전년도 대비 만족도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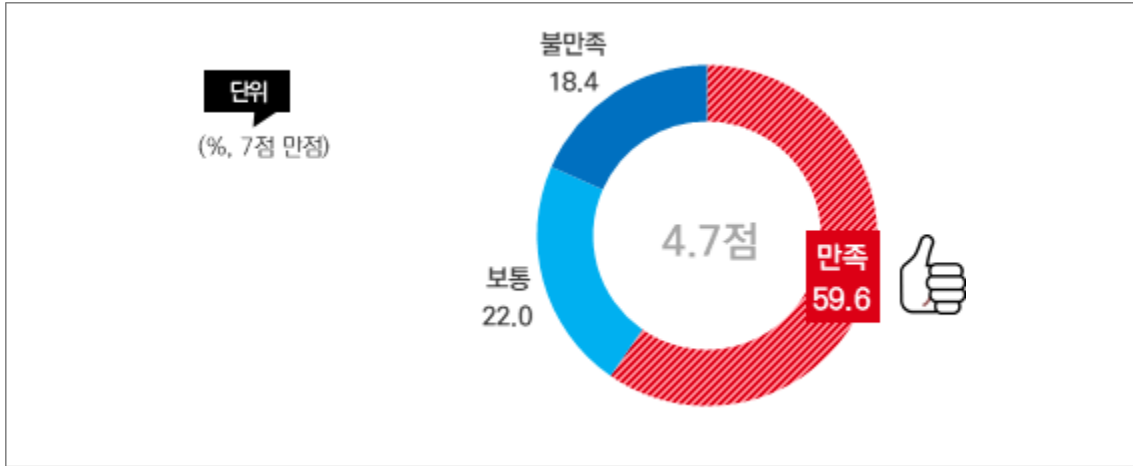
| 표 3-18 | 응답자 특성별 정부 외 민간기업, NGO와 협업 활성화 노력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점수합산		
			매우 불만족	상당히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상당히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2018	2017	전년 대비
	전체	250	0.4	3.2	16.0	22.0	34.8	19.6	4.0	19.6	22.0	58.4	66.0	63.0	3.0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0.9	4.6	18.5	25.9	34.3	14.8	0.9	24.1	25.9	50.0	62.3	61.0	1.3
	공공부문	97	0.0	2.1	13.4	15.5	35.1	24.7	9.3	15.5	15.5	69.1	70.7	69.0	1.7
	민간부문	40	0.0	2.5	10.0	27.5	37.5	22.5	0.0	12.5	27.5	60.0	66.8	51.9	14.9
	기타	5	0.0	0.0	60.0	20.0	20.0	0.0	0.0	60.0	20.0	20.0	51.4	82.1	-30.7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1.6	6.6	13.1	24.6	37.7	16.4	0.0	21.3	24.6	54.1	62.7	60.6	2.1
	국책연구원	47	0.0	2.1	25.5	27.7	29.8	12.8	2.1	27.7	27.7	44.7	61.7	61.9	-0.2
	정부부처	45	0.0	2.2	11.1	15.6	26.7	31.1	13.3	13.3	15.6	71.1	73.3	69.2	4.1
	공공기관	43	0.0	2.3	16.3	16.3	41.9	16.3	7.0	18.6	16.3	65.1	67.8	69.0	-1.2
	국제기구	9	0.0	0.0	11.1	11.1	44.4	33.3	0.0	11.1	11.1	77.8	71.4	68.3	3.1
	시민단체	22	0.0	4.5	18.2	18.2	40.9	18.2	0.0	22.7	18.2	59.1	64.3	45.7	18.6
	민간기관	18	0.0	0.0	0.0	38.9	33.3	27.8	0.0	0.0	38.9	61.1	69.8	60.1	9.7
	기타	5	0.0	0.0	60.0	20.0	20.0	0.0	0.0	60.0	20.0	20.0	51.4	82.1	-30.7
종사 분야	교육	33	3.0	0.0	18.2	18.2	36.4	21.2	3.0	21.2	18.2	60.6	65.8	61.4	4.4
	보건의료	20	0.0	5.0	10.0	30.0	35.0	15.0	5.0	15.0	30.0	55.0	65.7	54.4	11.3
	공공행정·거버넌스	50	0.0	8.0	18.0	24.0	26.0	18.0	6.0	26.0	24.0	50.0	63.7	67.0	-3.3
	농촌개발	21	0.0	0.0	14.3	23.8	42.9	14.3	4.8	14.3	23.8	61.9	67.3	63.6	3.7
	교통인프라	6	0.0	0.0	50.0	16.7	33.3	0.0	0.0	50.0	16.7	33.3	54.8	63.3	-8.5
	정보통신·IT기술	14	0.0	0.0	7.1	42.9	28.6	14.3	7.1	7.1	42.9	50.0	67.3	61.9	5.4
	과학기술	11	0.0	0.0	36.4	27.3	27.3	0.0	9.1	36.4	27.3	36.4	59.7	68.3	-8.6
	환경·기후변화	17	0.0	0.0	11.8	17.6	35.3	29.4	5.9	11.8	17.6	70.6	71.4	61.3	10.1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0.0	0.0	9.1	18.2	45.5	27.3	0.0	9.1	18.2	72.7	70.1	57.1	13.0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71.4	71.4	0.0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0.0	3.6	8.9	17.9	39.3	30.4	0.0	12.5	17.9	69.6	69.1	66.6	2.5
	기타	10	0.0	10.0	40.0	10.0	30.0	0.0	10.0	50.0	10.0	40.0	57.2	57.1	0.1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0.0	3.8	15.4	21.2	36.5	17.3	5.8	19.2	21.2	59.6	66.5	63.3	3.2
	5년 미만	41	0.0	7.3	17.1	26.8	26.8	17.1	4.9	24.4	26.8	48.8	63.4	66.4	-3.0
	10년 미만	77	1.3	1.3	22.1	18.2	29.9	26.0	1.3	24.7	18.2	57.1	65.3	62.1	3.2
	15년 미만	32	0.0	3.1	12.5	21.9	43.8	15.6	3.1	15.6	21.9	62.5	66.5	59.1	7.4
	20년 미만	17	0.0	5.9	0.0	23.5	52.9	11.8	5.9	5.9	23.5	70.6	68.9	57.9	11.0
	20년 이상	31	0.0	0.0	12.9	25.8	35.5	19.4	6.5	12.9	25.8	61.3	68.6	66.4	2.2
성별	남성	162	0.6	4.3	16.0	19.8	36.4	19.1	3.7	21.0	19.8	59.3	65.6	63.5	2.1
	여성	88	0.0	1.1	15.9	26.1	31.8	20.5	4.5	17.0	26.1	56.8	66.9	62.1	4.8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0.0	2.3	18.2	22.7	29.5	20.5	6.8	20.5	22.7	56.8	66.9	64.9	2.0
	석사 졸업	85	0.0	3.5	17.6	14.1	37.6	25.9	1.2	21.2	14.1	64.7	66.9	62.7	4.2
	박사 졸업	121	0.8	3.3	14.0	27.3	34.7	14.9	5.0	18.2	27.3	54.5	65.2	62.5	2.7

4) 통합성 4 : 글로벌 수준의 다양한 협력 강화 노력

| 그림 3-13 | 글로벌 수준의 다양한 협력 강화 노력에 대한 만족도



Q. 정부는 국제기구, 타 공여기관 등 글로벌 수준에서 다양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정부가 국제기구 및 타 공여기관 등 글로벌 수준에서 다양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문가의 59.6%가 '만족'(매우 만족 4% + 상당히 만족 23.6% + 약간 만족 32%)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8.4%가 '불만족'(매우 불만족 0% + 상당히 불만족 2% + 약간 불만족 16.4%)이라고 응답하였다.

글로벌 수준의 다양한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2.1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전문가들의 74.2%가 '만족'이라고 응답한 반면, 연구부문 50%, 민간부문 55%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속기관 세분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글로벌 수준의 직접적 협력 당사자인 국제기구의 평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69.8점)이지만 전년도 대비 소폭 하락(-1.6점)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종사 기간별로는 20년 미만 전문가 집단의 '만족' 비율이 7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년 미만 전문가들의 '만족' 비율이 49.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5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전문가 집단의 '불만족' 비율(5년 미만 26.8%, 10년 미만 24.7%, 15년 미만 25%)은 그 외 기간의 전문가 집단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년도 대비 만족도 점수의 변화는 10년 미만 전문가 집단(-1.5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간의 전문가 집단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19 | 응답자 특성별 글로벌 수준의 다양한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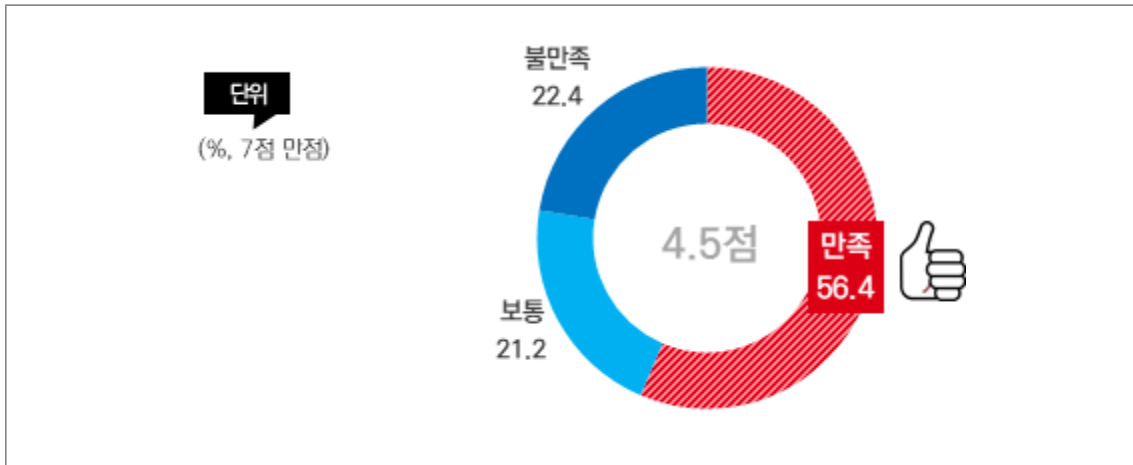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점수합산		
		매우 불만족	상당히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상당히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2018	2017	전년 대비	
전체	250	0.0	2.0	16.4	22.0	32.0	23.6	4.0	18.4	22.0	59.6	67.2	65.1	2.1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0.0	1.9	18.5	29.6	32.4	16.7	.9	20.4	29.6	50.0	63.7	63.9	-0.2
	공공부문	97	0.0	1.0	12.4	12.4	32.0	35.1	7.2	13.4	12.4	74.2	72.7	69.4	3.3
	민간부문	40	0.0	5.0	15.0	25.0	32.5	17.5	5.0	20.0	25.0	55.0	65.3	56.8	8.5
	기타	5	0.0	0.0	60.0	20.0	20.0	0.0	0.0	60.0	20.0	20.0	51.4	78.6	-27.2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0.0	3.3	14.8	29.5	37.7	14.8	0.0	18.0	29.5	52.5	63.7	61.8	1.9
	국책연구원	47	0.0	0.0	23.4	29.8	25.5	19.1	2.1	23.4	29.8	46.8	63.8	70.0	-6.2
	정부부처	45	0.0	0.0	8.9	13.3	31.1	33.3	13.3	8.9	13.3	77.8	75.5	71.1	4.4
	공공기관	43	0.0	2.3	16.3	7.0	37.2	34.9	2.3	18.6	7.0	74.4	70.4	67.6	2.8
	국제기구	9	0.0	0.0	11.1	33.3	11.1	44.4	0.0	11.1	33.3	55.6	69.8	71.4	-1.6
	시민단체	22	0.0	4.5	18.2	36.4	27.3	9.1	4.5	22.7	36.4	40.9	61.7	55.4	6.3
	민간기관	18	0.0	5.6	11.1	11.1	38.9	27.8	5.6	16.7	11.1	72.2	69.8	58.6	11.2
	기타	5	0.0	0.0	60.0	20.0	20.0	0.0	0.0	60.0	20.0	20.0	51.4	78.6	-27.2
종사 분야	교육	33	0.0	0.0	9.1	39.4	27.3	24.2	0.0	9.1	39.4	51.5	66.6	62.9	3.7
	보건의료	20	0.0	5.0	5.0	30.0	40.0	20.0	0.0	10.0	30.0	60.0	66.4	60.3	6.1
	공공행정·거버넌스	50	0.0	2.0	26.0	14.0	32.0	20.0	6.0	28.0	14.0	58.0	65.7	68.4	-2.7
	농촌개발	21	0.0	4.8	19.0	9.5	33.3	23.8	9.5	23.8	9.5	66.7	68.7	65.4	3.3
	교통인프라	6	0.0	0.0	33.3	0.0	33.3	33.3	0.0	33.3	0.0	66.7	66.7	71.4	-4.7
	정보통신·IT기술	14	0.0	7.1	7.1	14.3	14.3	50.0	7.1	14.3	14.3	71.4	73.5	65.7	7.8
	과학기술	11	0.0	0.0	36.4	18.2	36.4	0.0	9.1	36.4	18.2	45.5	61.0	68.2	-7.2
	환경·기후변화	17	0.0	5.9	5.9	23.5	23.5	41.2	0.0	11.8	23.5	64.7	69.7	63.8	5.9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0.0	0.0	9.1	27.3	36.4	18.2	9.1	9.1	27.3	63.6	70.1	58.9	11.2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57.1	78.6	-21.5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0.0	0.0	12.5	23.2	39.3	23.2	1.8	12.5	23.2	64.3	68.3	67.0	1.3
	기타	10	0.0	0.0	40.0	20.0	20.0	10.0	10.0	40.0	20.0	40.0	61.4	53.6	7.8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0.0	0.0	7.7	25.0	34.6	26.9	5.8	7.7	25.0	67.3	71.1	68.0
5년 미만		41	0.0	4.9	22.0	17.1	19.5	31.7	4.9	26.8	17.1	56.1	66.5	65.7	0.8
10년 미만		77	0.0	2.6	22.1	26.0	24.7	20.8	3.9	24.7	26.0	49.4	64.4	65.9	-1.5
15년 미만		32	0.0	3.1	21.9	12.5	37.5	25.0	0.0	25.0	12.5	62.5	65.6	61.0	4.6
20년 미만		17	0.0	0.0	0.0	23.5	58.8	11.8	5.9	0.0	23.5	76.5	71.4	62.1	9.3
20년 이상		31	0.0	0.0	12.9	22.6	41.9	19.4	3.2	12.9	22.6	64.5	68.2	63.3	4.9
성별	남성	162	0.0	3.1	16.7	18.5	32.7	24.7	4.3	19.8	18.5	61.7	67.4	66.3	1.1
	여성	88	0.0	0.0	15.9	28.4	30.7	21.6	3.4	15.9	28.4	55.7	66.9	63.2	3.7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0.0	0.0	15.9	18.2	27.3	31.8	6.8	15.9	18.2	65.9	70.8	69.5	1.3
	석사 졸업	85	0.0	1.2	16.5	21.2	34.1	23.5	3.5	17.6	21.2	61.2	67.5	63.8	3.7
	박사 졸업	121	0.0	3.3	16.5	24.0	32.2	20.7	3.3	19.8	24.0	56.2	65.7	64.6	1.1

3. ODA 정책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

1) 효율성 1 : 수원국의 수요 기여를 위한 자원배분 원칙 설정

| 그림 3-14 | 수원국의 수요 기여를 위한 자원배분 원칙 설정에 대한 만족도



Q. 정부는 수원국의 수요에 기여하도록 자원배분 원칙을 설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정부가 수원국의 수요 기여를 위한 자원배분 원칙을 설정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전문가의 56.4%가 '만족'(매우 만족 3.6% + 상당히 만족 15.6% + 약간 만족 37.2%)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2.4%가 '불만족'(매우 불만족 0% + 상당히 불만족 6% + 약간 불만족 16.4%)이라고 응답하였다.

정부가 수원국의 수요에 기여하도록 자원배분 원칙을 설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1.3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전문가들의 72.2%가 '만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연구부문 50.9%, 민간부문 37.5%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부문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만족' 비율이 '불만족' 비율보다 약 7배가 크지만, 민간부문 전문가들의 경우는 '만족' 비율과 '불만족' 비율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민간부문 전문가들의 전년도 대비 만족도 점수의 변화 폭(+5.6점)은 연구부문(-0.5점)과 공공부문(+2.7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자원배분 원칙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점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사 기간별로 살펴보면, 모든 전문가 집단에서 '만족' 비율이 '불만족' 비율을 상당히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 점수 또한 모든 집단에서 평균 64.4점에 근접한 점수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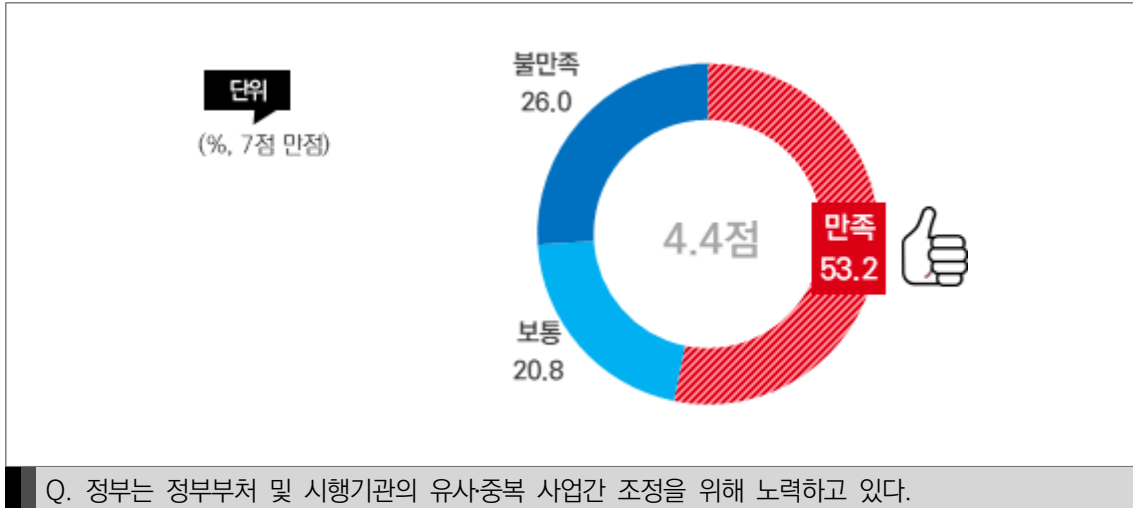
| 표 3-20 | 응답자 특성별 수원국의 수요 기여를 위한 자원배분 원칙 설정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점수환산		
		매우 불만족	상당히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상당히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2018	2017	전년 대비	
전체	250	0.0	6.0	16.4	21.2	37.2	15.6	3.6	22.4	21.2	56.4	64.4	63.1	1.3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0.0	7.4	19.4	22.2	39.8	9.3	1.9	26.9	22.2	50.9	61.4	61.9	-0.5
	공공부문	97	0.0	1.0	9.3	17.5	39.2	25.8	7.2	10.3	17.5	72.2	71.6	68.9	2.7
	민간부문	40	0.0	12.5	20.0	30.0	27.5	10.0	0.0	32.5	30.0	37.5	57.5	51.9	5.6
	기타	5	0.0	20.0	60.0	0.0	20.0	0.0	0.0	80.0	0.0	20.0	45.7	67.9	-22.2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0.0	4.9	16.4	26.2	42.6	8.2	1.6	21.3	26.2	52.5	62.5	60.0	2.5
	국책연구원	47	0.0	10.6	23.4	17.0	36.2	10.6	2.1	34.0	17.0	48.9	59.9	67.6	-7.7
	정부부처	45	0.0	0.0	8.9	11.1	37.8	26.7	15.6	8.9	11.1	80.0	75.5	72.5	3.0
	공공기관	43	0.0	2.3	7.0	27.9	34.9	27.9	0.0	9.3	27.9	62.8	68.4	66.0	2.4
	국제기구	9	0.0	0.0	22.2	0.0	66.7	11.1	0.0	22.2	0.0	77.8	66.7	69.4	-2.7
	시민단체	22	0.0	18.2	13.6	40.9	27.3	0.0	0.0	31.8	40.9	27.3	53.9	49.1	4.8
	민간기관	18	0.0	5.6	27.8	16.7	27.8	22.2	0.0	33.3	16.7	50.0	61.9	55.6	6.3
	기타	5	0.0	20.0	60.0	0.0	20.0	0.0	0.0	80.0	0.0	20.0	45.7	67.9	-22.2
종사 분야	교육	33	0.0	6.1	9.1	27.3	42.4	12.1	3.0	15.2	27.3	57.6	64.9	60.2	4.7
	보건의료	20	0.0	10.0	10.0	35.0	35.0	10.0	0.0	20.0	35.0	45.0	60.7	51.6	9.1
	공공행정·거버넌스	50	0.0	2.0	16.0	22.0	34.0	18.0	8.0	18.0	22.0	60.0	67.7	69.7	-2.0
	농촌개발	21	0.0	9.5	23.8	4.8	19.0	33.3	9.5	33.3	4.8	61.9	67.3	70.5	-3.2
	교통인프라	6	0.0	0.0	50.0	0.0	50.0	0.0	0.0	50.0	0.0	50.0	57.2	73.4	-16.2
	정보통신·IT기술	14	0.0	14.3	7.1	14.3	35.7	28.6	0.0	21.4	14.3	64.3	65.3	63.8	1.5
	과학기술	11	0.0	9.1	18.2	9.1	54.5	0.0	9.1	27.3	9.1	63.6	63.6	66.7	-3.1
	환경·기후변화	17	0.0	0.0	17.6	17.6	41.2	23.5	0.0	17.6	17.6	64.7	67.2	63.9	3.3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0.0	9.1	27.3	27.3	27.3	9.1	0.0	36.4	27.3	36.4	57.1	60.7	-3.6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57.1	71.4	-14.3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0.0	7.1	12.5	21.4	44.6	14.3	0.0	19.6	21.4	58.9	63.8	61.5	2.3
	기타	10	0.0	0.0	40.0	30.0	20.0	0.0	10.0	40.0	30.0	30.0	58.6	60.7	-2.1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0.0	0.0	11.5	25.0	38.5	17.3	7.7	11.5	25.0	63.5	69.2	64.5	4.7
	5년 미만	41	0.0	7.3	17.1	14.6	31.7	24.4	4.9	24.4	14.6	61.0	66.2	65.5	0.7
	10년 미만	77	0.0	10.4	19.5	20.8	32.5	15.6	1.3	29.9	20.8	49.4	61.0	61.5	-0.5
	15년 미만	32	0.0	3.1	18.8	18.8	40.6	18.8	0.0	21.9	18.8	59.4	64.7	61.4	3.3
	20년 미만	17	0.0	11.8	5.9	35.3	41.2	0.0	5.9	17.6	35.3	47.1	61.3	61.4	-0.1
	20년 이상	31	0.0	3.2	19.4	19.4	48.4	6.5	3.2	22.6	19.4	58.1	63.6	62.7	0.9
성별	남성	162	0.0	6.2	14.8	20.4	37.0	17.3	4.3	21.0	20.4	58.6	65.3	64.5	0.8
	여성	88	0.0	5.7	19.3	22.7	37.5	12.5	2.3	25.0	22.7	52.3	62.7	60.9	1.8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0.0	6.8	6.8	18.2	40.9	22.7	4.5	13.6	18.2	68.2	68.5	63.3	5.2
	석사 졸업	85	0.0	5.9	20.0	18.8	40.0	12.9	2.4	25.9	18.8	55.3	63.0	61.0	2.0
	박사 졸업	121	0.0	5.8	17.4	24.0	33.9	14.9	4.1	23.1	24.0	52.9	63.9	64.3	-0.4

2) 효율성 2 : 정부부처 및 시행기관의 유사 중복 사업간 조정 노력

| 그림 3-15 | 정부부처 및 시행기관의 유사 중복 사업간 조정 노력에 대한 만족도



- 정부의 정부부처 및 시행기관의 유사 중복 사업간 조정 노력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의 53.2%가 '만족'(매우 만족 5.2% + 상당히 만족 17.2% + 약간 만족 30.8%)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6%가 '불만족'(매우 불만족 2.8% + 상당히 불만족 8.4% + 약간 불만족 14.8%)이라고 응답하였다.

정부가 수원국의 수요에 기여하도록 자원배분 원칙을 설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1.3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전문가들의 72.2%가 '만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연구부문 50.9%, 민간부문 37.5%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부문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만족' 비율이 '불만족' 비율보다 약 7배가 크지만, 민간부문 전문가들의 경우는 '만족' 비율과 '불만족' 비율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민간부문 전문가들의 전년도 대비 만족도 점수의 변화 폭(+5.6점)은 연구부문(-0.5점)과 공공부문(+2.7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자원배분 원칙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점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사 기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한 만족도 점수는 5년 미만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종사한 전문가 집단(-2.4점)을 제외한 모든 기간의 전문가 집단에서 다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년 미만 전문가 집단의 '만족' 비율이 63.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10년 미만이 46.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불만족' 응답의 비율은 3년 미만 전문가 집단의 '불만족' 비율이 11.5%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5년 미만 전문가들의 36.6%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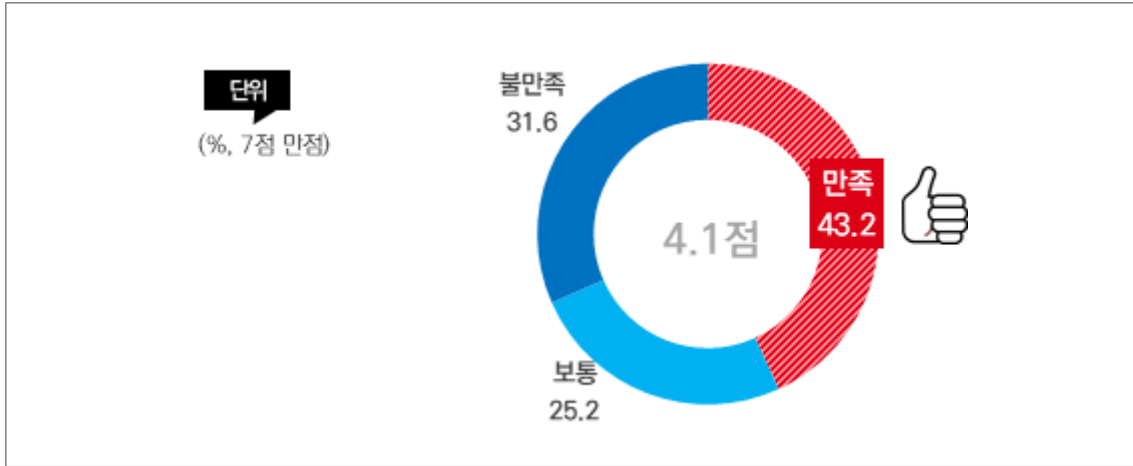
| 표 3-21 | 응답자 특성별 정부부처 및 시행기관의 유사 중복 사업간 조정 노력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점수환산			
		매우 불만족	상당히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상당히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2018	2017	전년 대비	
전체	250	2.8	8.4	14.8	20.8	30.8	17.2	5.2	26.0	20.8	53.2	63.0	60.8	2.2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5.6	13.9	16.7	21.3	27.8	12.0	2.8	36.1	21.3	42.6	57.0	57.3	-0.3
	공공부문	97	1.0	2.1	8.2	16.5	37.1	25.8	9.3	11.3	16.5	72.2	71.6	68.7	2.9
	민간부문	40	0.0	5.0	25.0	30.0	25.0	12.5	2.5	30.0	30.0	40.0	60.3	50.0	10.3
	기타	5	0.0	40.0	20.0	20.0	20.0	0.0	0.0	60.0	20.0	20.0	45.7	71.4	-25.7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6.6	13.1	16.4	23.0	29.5	9.8	1.6	36.1	23.0	41.0	56.0	52.5	3.5
	국책연구원	47	4.3	14.9	17.0	19.1	25.5	14.9	4.3	36.2	19.1	44.7	58.4	70.9	-12.5
	정부부처	45	0.0	0.0	6.7	8.9	33.3	31.1	20.0	6.7	8.9	84.4	78.4	71.8	6.6
	공공기관	43	2.3	4.7	11.6	18.6	39.5	23.3	0.0	18.6	18.6	62.8	65.4	66.6	-1.2
	국제기구	9	0.0	0.0	0.0	44.4	44.4	11.1	0.0	0.0	44.4	55.6	66.6	68.3	-1.7
	시민단체	22	0.0	9.1	18.2	40.9	18.2	13.6	0.0	27.3	40.9	31.8	58.4	50.3	8.1
	민간기관	18	0.0	0.0	33.3	16.7	33.3	11.1	5.6	33.3	16.7	50.0	62.7	49.6	13.1
	기타	5	0.0	40.0	20.0	20.0	20.0	0.0	0.0	60.0	20.0	20.0	45.7	71.4	-25.7
종사 분야	교육	33	6.1	3.0	12.1	36.4	18.2	15.2	9.1	21.2	36.4	42.4	62.8	55.2	7.6
	보건의료	20	5.0	15.0	20.0	30.0	10.0	20.0	0.0	40.0	30.0	30.0	55.0	54.0	1.0
	공공행정·거버넌스	50	2.0	10.0	12.0	22.0	32.0	12.0	10.0	24.0	22.0	54.0	64.0	68.7	-4.7
	농촌개발	21	4.8	9.5	14.3	19.0	38.1	4.8	9.5	28.6	19.0	52.4	61.2	64.1	-2.9
	교통인프라	6	0.0	0.0	0.0	16.7	83.3	0.0	0.0	0.0	16.7	83.3	69.0	61.2	7.8
	정보통신·IT기술	14	0.0	7.1	21.4	14.3	28.6	21.4	7.1	28.6	14.3	57.1	65.3	58.1	7.2
	과학기술	11	0.0	9.1	18.2	0.0	45.5	18.2	9.1	27.3	0.0	72.7	67.5	73.0	-5.5
	환경·기후변화	17	0.0	5.9	11.8	23.5	17.6	41.2	0.0	17.6	23.5	58.8	68.1	62.2	5.9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0.0	18.2	9.1	18.2	36.4	18.2	0.0	27.3	18.2	54.5	61.0	58.9	2.1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71.4	71.4	0.0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0.0	7.1	17.9	17.9	33.9	23.2	0.0	25.0	17.9	57.1	64.0	59.2	4.8
	기타	10	20.0	10.0	20.0	0.0	40.0	0.0	10.0	50.0	0.0	50.0	52.9	64.3	-11.4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0.0	5.8	5.8	25.0	32.7	25.0	5.8	11.5	25.0	63.5	68.9	63.8	5.1
	5년 미만	41	2.4	7.3	26.8	12.2	22.0	19.5	9.8	36.6	12.2	51.2	63.1	65.5	-2.4
	10년 미만	77	5.2	10.4	13.0	24.7	28.6	14.3	3.9	28.6	24.7	46.8	59.9	59.3	0.6
	15년 미만	32	3.1	9.4	18.8	15.6	34.4	15.6	3.1	31.3	15.6	53.1	61.2	56.0	5.2
	20년 미만	17	0.0	5.9	17.6	17.6	41.2	11.8	5.9	23.5	17.6	58.8	64.7	57.1	7.6
	20년 이상	31	3.2	9.7	12.9	22.6	35.5	12.9	3.2	25.8	22.6	51.6	61.3	56.5	4.8
성별	남성	162	3.7	9.9	12.3	20.4	31.5	17.3	4.9	25.9	20.4	53.7	62.5	61.6	0.9
	여성	88	1.1	5.7	19.3	21.6	29.5	17.0	5.7	26.1	21.6	52.3	63.8	59.5	4.3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2.3	4.5	11.4	18.2	29.5	27.3	6.8	18.2	18.2	63.6	68.2	66.9	1.3
	석사 졸업	85	2.4	3.5	15.3	18.8	36.5	18.8	4.7	21.2	18.8	60.0	65.5	60.4	5.1
	박사 졸업	121	3.3	13.2	15.7	23.1	27.3	12.4	5.0	32.2	23.1	44.6	59.3	59.2	0.1

3) 효율성 3 : ODA 사업관리 효율성

| 그림 3-16 | ODA 사업관리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



Q. 정부는 비용대비 원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ODA 사업을 잘 관리하고 있다.

- 비용대비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ODA 사업관리 노력에 대한 설문에 전문가의 43.2%가 '만족'(매우 만족 2.4% + 상당히 만족 11.6% + 약간 만족 29.2%)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1.6%가 '불만족'(매우 불만족 3.2% + 상당히 불만족 7.2% + 약간 불만족 21.2%)이라고 응답하였다.

정부가 비용대비 원조 효과성을 증진시키도록 ODA 사업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2.6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효율성 1, 2 항목과 비교했을 때, 효율성 3의 만족도 비율(43.2%)은 다소 낮은 반면(효율성1 56.4%, 효율성2 53.2%), 불만족도 비율(31.6%)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효율성1 22.4, 효율성2 26%).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전문가들의 61.9%가 '만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연구부문 31.5%, 민간부문 32.5%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부문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만족' 응답 비율이 '불만족' 비율보다 약 4배 이상이었지만, 연구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불만족' 응답 비율이 '만족' 비율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민간부문 전문가들의 전년도 대비 만족도 점수의 변화 폭(+8.8점)은 연구부문(-0.5점)과 공공부문(+4.1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원조 효과성을 높이도록 정부가 ODA 사업을 잘 관리하려는 노력을 점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속기관 세분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도 시민단체와 민간기관의 전년도 대비 만족도 변화(시민단체 +9점, 민간기관 +8.3점)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종사 기간별로 살펴보면, 2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집단을 제외하고 모든 기간의 집단에서 전년도 대비 만족도 점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종사 기간

이 상대적으로 오래된 전문가 집단일수록 종사 기간이 짧은 전문가 집단에 비해 '만족'한
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 표 3-22 | 응답자 특성별 ODA 사업관리 효율성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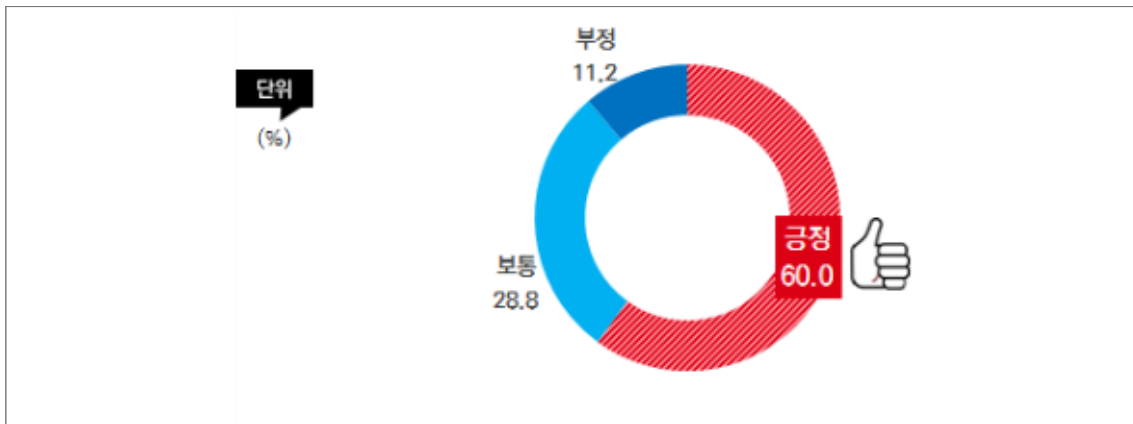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점수합산		
		매우 불만족	상당히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상당히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2018	2017	전년 대비	
전체	250	3.2	7.2	21.2	25.2	29.2	11.6	2.4	31.6	25.2	43.2	59.2	56.6	2.6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6.5	6.5	27.8	27.8	24.1	6.5	0.9	40.7	27.8	31.5	54.2	54.7	-0.5
	공공부문	97	1.0	3.1	10.3	23.7	37.1	19.6	5.2	14.4	23.7	61.9	67.4	63.3	4.1
	민간부문	40	0.0	17.5	27.5	22.5	25.0	7.5	0.0	45.0	22.5	32.5	53.9	45.1	8.8
	기타	5	0.0	20.0	40.0	20.0	20.0	0.0	0.0	60.0	20.0	20.0	48.6	57.2	-8.6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11.5	4.9	19.7	34.4	23.0	6.6	0.0	36.1	34.4	29.5	53.2	52.8	0.4
	국책연구원	47	0.0	8.5	38.3	19.1	25.5	6.4	2.1	46.8	19.1	34.0	55.6	60.0	-4.4
	정부부처	45	2.2	0.0	6.7	24.4	28.9	26.7	11.1	8.9	24.4	66.7	71.7	66.3	5.4
	공공기관	43	0.0	7.0	14.0	18.6	44.2	16.3	0.0	20.9	18.6	60.5	64.1	63.1	1.0
	국제기구	9	0.0	0.0	11.1	44.4	44.4	0.0	0.0	11.1	44.4	44.4	61.9	56.1	5.8
	시민단체	22	0.0	13.6	31.8	31.8	22.7	0.0	0.0	45.5	31.8	22.7	51.9	42.9	9.0
	민간기관	18	0.0	22.2	22.2	11.1	27.8	16.7	0.0	44.4	11.1	44.4	56.4	48.1	8.3
	기타	5	0.0	20.0	40.0	20.0	20.0	0.0	0.0	60.0	20.0	20.0	48.6	57.2	-8.6
종사 분야	교육	33	6.1	3.0	15.2	21.2	39.4	15.2	0.0	24.2	21.2	54.5	61.5	51.7	9.8
	보건의료	20	0.0	25.0	15.0	25.0	35.0	0.0	0.0	40.0	25.0	35.0	52.9	50.4	2.5
	공공행정·거버넌스	50	2.0	4.0	22.0	28.0	26.0	14.0	4.0	28.0	28.0	44.0	61.4	63.9	-2.5
	농촌개발	21	4.8	0.0	33.3	9.5	33.3	9.5	9.5	38.1	9.5	52.4	61.9	55.8	6.1
	교통인프라	6	16.7	0.0	0.0	50.0	16.7	16.7	0.0	16.7	50.0	33.3	57.1	63.3	-6.2
	정보통신·IT기술	14	0.0	14.3	14.3	21.4	21.4	28.6	0.0	28.6	21.4	50.0	62.2	53.3	8.9
	과학기술	11	0.0	9.1	36.4	9.1	36.4	0.0	9.1	45.5	9.1	45.5	58.4	63.5	-5.1
	환경·기후변화	17	5.9	5.9	5.9	17.6	35.3	29.4	0.0	17.6	17.6	64.7	65.5	56.3	9.2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0.0	0.0	45.5	27.3	18.2	9.1	0.0	45.5	27.3	27.3	55.8	58.9	-3.1
	난민지원·간급구호	1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57.1	50.0	7.1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3.6	3.6	25.0	32.1	28.6	7.1	0.0	32.1	32.1	35.7	57.1	57.4	-0.3
기타	10	0.0	40.0	10.0	30.0	10.0	0.0	10.0	50.0	30.0	20.0	50.0	57.2	-7.2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1.9	1.9	15.4	28.8	28.8	21.2	1.9	19.2	28.8	51.9	64.5	59.4	5.1
	5년 미만	41	0.0	2.4	31.7	14.6	24.4	22.0	4.9	34.1	14.6	51.2	63.8	60.0	3.8
	10년 미만	77	2.6	13.0	19.5	23.4	32.5	7.8	1.3	35.1	23.4	41.6	56.9	55.2	1.7
	15년 미만	32	12.5	12.5	15.6	28.1	21.9	9.4	0.0	40.6	28.1	31.3	51.8	50.6	1.2
	20년 미만	17	0.0	0.0	17.6	41.2	35.3	0.0	5.9	17.6	41.2	41.2	62.2	52.1	10.1
	20년 이상	31	3.2	6.5	29.0	25.8	32.3	0.0	3.2	38.7	25.8	35.5	55.8	58.4	-2.6
성별	남성	162	4.9	8.0	19.1	21.6	32.7	10.5	3.1	32.1	21.6	46.3	59.0	57.7	1.3
	여성	88	0.0	5.7	25.0	31.8	22.7	13.6	1.1	30.7	31.8	37.5	59.6	54.8	4.8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2.3	2.3	20.5	22.7	22.7	27.3	2.3	25.0	22.7	52.3	64.6	61.7	2.9
	석사 졸업	85	0.0	11.8	14.1	25.9	40.0	7.1	1.2	25.9	25.9	48.2	60.0	53.6	6.4
	박사 졸업	121	5.8	5.8	26.4	25.6	24.0	9.1	3.3	38.0	25.6	36.4	56.7	56.7	0.0

4. ODA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

1) 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인식 :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이 국가협력전략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맞게 발굴되고 있음

| 그림 3-17 |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이 국가협력전략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맞게 발굴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Q.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은 국가협력전략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맞게 발굴되고 있다.

■ 정부가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을 국가협력전략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맞게 발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의 60%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3.2% + 상당히 그렇다 18% + 약간 그렇다 38.8%)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1.2%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0% + 상당히 그렇지 않다 1.2% + 약간 그렇지 않다 10%)이라고 응답하였다.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전문가들의 69.1%가 '긍정'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연구부문 50%, 민간부문 65%의 전문가들이 정부가 ODA 사업들을 국가협력전략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맞게 발굴하려는 노력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구부문이 17.6%으로서 공공부문 6.2%, 민간부문 7.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종사분야별로 살펴보면 12개의 분야 중 6개 분야(교육, 보건의료, 농촌개발, 정보통신·IT기술, 환경·기후변화, 난민지원·긴급구호)에서 긍정 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사 기간별로 살펴보면, 3년 미만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종사한 전문가들의 71.2%가 '긍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들의 51.6%만이 '긍정'이라고 응답하여 두 집단 간 격차는 약 20%에 달했다.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10년 미만 종사한 전문가 집단이 1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년 미만 종사한 전문가 집단이 1.9%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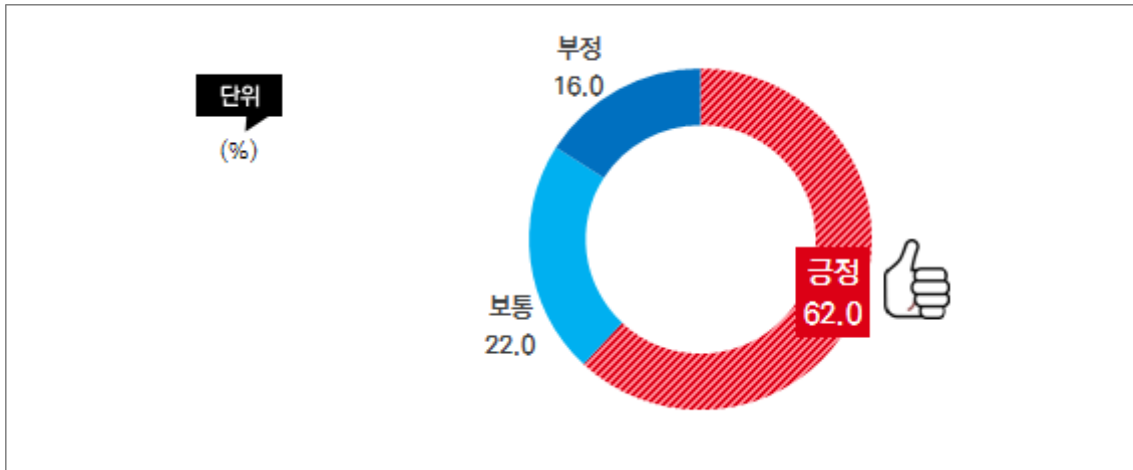
| 표 3-23 | 응답자 특성별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이 국가협력전략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맞게 발굴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다소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전체	250	0.0	1.2	10.0	28.8	38.8	18.0	3.2	11.2	28.8	60.0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0.0	1.9	15.7	32.4	37.0	12.0	0.9	17.6	32.4	50.0
	공공부문	97	0.0	1.0	5.2	24.7	38.1	24.7	6.2	6.2	24.7	69.1
	민간부문	40	0.0	0.0	7.5	27.5	45.0	17.5	2.5	7.5	27.5	65.0
	기타	5	0.0	0.0	0.0	40.0	40.0	20.0	0.0	0.0	40.0	60.0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0.0	1.6	16.4	23.0	44.3	14.8	0.0	18.0	23.0	59.0
	국책연구원	47	0.0	2.1	14.9	44.7	27.7	8.5	2.1	17.0	44.7	38.3
	정부부처	45	0.0	0.0	4.4	22.2	35.6	28.9	8.9	4.4	22.2	73.3
	공공기관	43	0.0	2.3	4.7	30.2	34.9	23.3	4.7	7.0	30.2	62.8
	국제기구	9	0.0	0.0	11.1	11.1	66.7	11.1	0.0	11.1	11.1	77.8
	시민단체	22	0.0	0.0	9.1	36.4	40.9	13.6	0.0	9.1	36.4	54.5
	민간기관	18	0.0	0.0	5.6	16.7	50.0	22.2	5.6	5.6	16.7	77.8
	기타	5	0.0	0.0	0.0	40.0	40.0	20.0	0.0	0.0	40.0	60.0
종사 분야	교육	33	0.0	0.0	6.1	18.2	45.5	24.2	6.1	6.1	18.2	75.8
	보건의료	20	0.0	0.0	0.0	35.0	40.0	25.0	0.0	0.0	35.0	65.0
	공공행정·거버넌스	50	0.0	2.0	14.0	30.0	36.0	18.0	0.0	16.0	30.0	54.0
	농촌개발	21	0.0	4.8	14.3	9.5	38.1	23.8	9.5	19.0	9.5	71.4
	교통인프라	6	0.0	0.0	0.0	33.3	66.7	0.0	0.0	0.0	33.3	66.7
	정보통신·IT기술	14	0.0	0.0	7.1	21.4	64.3	0.0	7.1	7.1	21.4	71.4
	과학기술	11	0.0	0.0	18.2	45.5	27.3	0.0	9.1	18.2	45.5	36.4
	환경·기후변화	17	0.0	0.0	17.6	11.8	29.4	35.3	5.9	17.6	11.8	70.6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0.0	0.0	0.0	72.7	18.2	9.1	0.0	0.0	72.7	27.3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0.0	1.8	8.9	32.1	41.1	16.1	0.0	10.7	32.1	57.1
기타	10	0.0	0.0	20.0	40.0	10.0	20.0	10.0	20.0	40.0	40.0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0.0	0.0	1.9	26.9	42.3	26.9	1.9	1.9	26.9	71.2
	5년 미만	41	0.0	0.0	14.6	26.8	31.7	24.4	2.4	14.6	26.8	58.5
	10년 미만	77	0.0	2.6	14.3	27.3	36.4	14.3	5.2	16.9	27.3	55.8
	15년 미만	32	0.0	3.1	6.3	31.3	50.0	9.4	0.0	9.4	31.3	59.4
	20년 미만	17	0.0	0.0	11.8	23.5	47.1	11.8	5.9	11.8	23.5	64.7
	20년 이상	31	0.0	0.0	9.7	38.7	32.3	16.1	3.2	9.7	38.7	51.6
성별	남성	162	0.0	1.2	10.5	27.2	40.1	16.7	4.3	11.7	27.2	61.1
	여성	88	0.0	1.1	9.1	31.8	36.4	20.5	1.1	10.2	31.8	58.0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0.0	0.0	6.8	22.7	27.3	38.6	4.5	6.8	22.7	70.5
	석사 졸업	85	0.0	0.0	3.5	31.8	49.4	14.1	1.2	3.5	31.8	64.7
	박사 졸업	121	0.0	2.5	15.7	28.9	35.5	13.2	4.1	18.2	28.9	52.9

2) 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인식 : 사전심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음

| 그림 3-18 | 사업선정을 위한 사전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Q. 사업선정을 위한 사전심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 정부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선정을 위한 사전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문가의 6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4.8% + 상당히 그렇다 26.4% + 약간 그렇다 30.8%)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6%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0.8% + 별로 그렇지 않다 4.4% + 전혀 그렇지 않다 10.8%)이라고 응답하였다.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전문가들의 77.3%가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연구부문 51.9%, 민간부문 60%의 전문가들이 정부가 ODA 사업선정을 위한 사전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연구부문 24.1%, 민간부문 20%로 공공부문 5.2%와 비교하여 약 4배를 뛰어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소속기관 세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부부처, 공공기관, 국제기구의 만족비율 모두 70%를 넘었지만(정부부처 73.3%, 공공기관 81.4%, 국제기구 77.8%), 학계와 국책연구원, 시민단체 모두 50%에 그치지 못하거나 겨우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계 54.1%, 국책연구원 48.9%, 시민단체 50%). 마찬가지로 학계, 국책연구원, 시민단체의 부정적 응답 비율(학계 18%, 국책연구원 31.9%, 시민단체 31.8%) 또한 다른 세분 유형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사 기간별로 살펴보면, 3년 미만, 5년 미만, 20년 미만 종사한 전문가들의 긍정적 인식은 높았으나 그 외의 기간동안 종사한 전문가들의 긍정적 인식은 높지 않았다. 긍정적 응답 비율 측면에서는 15년 미만 종사한 전문가 집단이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10년 미만 종사한 전문가 집단이 5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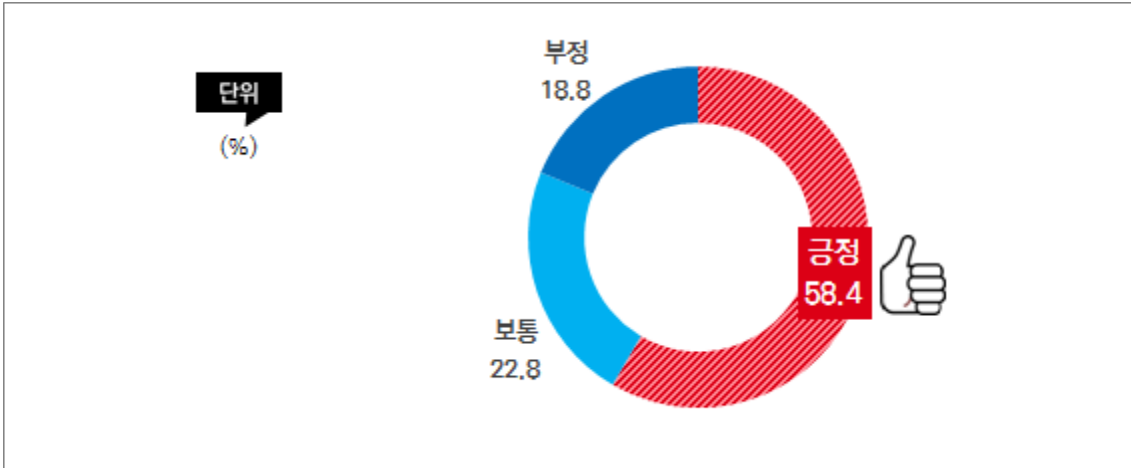
| 표 3-24 | 응답자 특성별 사업선정을 위한 사전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다소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전체	250	0.8	4.4	10.8	22.0	30.8	26.4	4.8	16.0	22.0	62.0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1.9	6.5	15.7	24.1	31.5	19.4	0.9	24.1	24.1	51.9
	공공부문	97	0.0	1.0	4.1	17.5	29.9	38.1	9.3	5.2	17.5	77.3
	민간부문	40	0.0	7.5	12.5	20.0	35.0	20.0	5.0	20.0	20.0	60.0
	기타	5	0.0	0.0	20.0	80.0	0.0	0.0	0.0	20.0	80.0	0.0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1.6	8.2	8.2	27.9	34.4	19.7	0.0	18.0	27.9	54.1
	국책연구원	47	2.1	4.3	25.5	19.1	27.7	19.1	2.1	31.9	19.1	48.9
	정부부처	45	0.0	2.2	4.4	20.0	22.2	40.0	11.1	6.7	20.0	73.3
	공공기관	43	0.0	0.0	2.3	16.3	34.9	37.2	9.3	2.3	16.3	81.4
	국제기구	9	0.0	0.0	11.1	11.1	44.4	33.3	0.0	11.1	11.1	77.8
	시민단체	22	0.0	13.6	18.2	18.2	27.3	18.2	4.5	31.8	18.2	50.0
	민간기관	18	0.0	0.0	5.6	22.2	44.4	22.2	5.6	5.6	22.2	72.2
	기타	5	0.0	0.0	20.0	80.0	0.0	0.0	0.0	20.0	80.0	0.0
종사 분야	교육	33	3.0	3.0	15.2	15.2	24.2	30.3	9.1	21.2	15.2	63.6
	보건의료	20	0.0	5.0	5.0	25.0	35.0	30.0	0.0	10.0	25.0	65.0
	공공행정·거버넌스	50	2.0	6.0	10.0	20.0	30.0	28.0	4.0	18.0	20.0	62.0
	농촌개발	21	0.0	0.0	9.5	23.8	33.3	28.6	4.8	9.5	23.8	66.7
	교통인프라	6	0.0	0.0	0.0	0.0	66.7	33.3	0.0	0.0	0.0	100.0
	정보통신·IT기술	14	0.0	0.0	21.4	21.4	35.7	7.1	14.3	21.4	21.4	57.1
	과학기술	11	0.0	0.0	18.2	27.3	27.3	18.2	9.1	18.2	27.3	54.5
	환경·기후변화	17	0.0	0.0	0.0	17.6	41.2	35.3	5.9	0.0	17.6	82.4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0.0	9.1	27.3	9.1	45.5	9.1	0.0	36.4	9.1	54.5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0.0	7.1	7.1	25.0	28.6	30.4	1.8	14.3	25.0	60.7	
기타	10	0.0	10.0	20.0	50.0	0.0	10.0	10.0	30.0	50.0	20.0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0.0	0.0	9.6	25.0	25.0	38.5	1.9	9.6	25.0	65.4
	5년 미만	41	0.0	9.8	9.8	17.1	31.7	24.4	7.3	19.5	17.1	63.4
	10년 미만	77	2.6	2.6	14.3	26.0	23.4	26.0	5.2	19.5	26.0	54.5
	15년 미만	32	0.0	12.5	3.1	9.4	46.9	25.0	3.1	15.6	9.4	75.0
	20년 미만	17	0.0	0.0	11.8	17.6	64.7	0.0	5.9	11.8	17.6	70.6
	20년 이상	31	0.0	3.2	12.9	29.0	22.6	25.8	6.5	16.1	29.0	54.8
성별	남성	162	1.2	3.1	9.9	21.6	35.2	23.5	5.6	14.2	21.6	64.2
	여성	88	0.0	6.8	12.5	22.7	22.7	31.8	3.4	19.3	22.7	58.0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0.0	2.3	11.4	20.5	22.7	38.6	4.5	13.6	20.5	65.9
	석사 졸업	85	0.0	4.7	9.4	21.2	31.8	27.1	5.9	14.1	21.2	64.7
	박사 졸업	121	1.7	5.0	11.6	23.1	33.1	21.5	4.1	18.2	23.1	58.7

3) 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인식 : 예산규모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림 3-19 | 정부가 사업별로 예산규모를 객관·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의견



Q. 사업별로 예산규모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정부가 사업별로 예산규모를 객관·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문가의 58.4%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3.6% + 상당히 그렇다 18.4% + 약간 그렇다 36.4%)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8.8%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0.4% + 거의 그렇지 않다 4% + 별로 그렇지 않다 14.4%)이라고 응답하였다.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전문가들의 76.3%가 '긍정'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연구부문과 민간부문 전문가들은 50%에 그치지 못하는 비율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연구부문 49.1%, 민간부문 45%). 공공부문 전문가들은 '긍정' 응답의 비율이 '부정' 응답 비율보다 약 7배 다다른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연구부문과 민간부문 전문가들은 약 2배 정도로 나타났다.

소속기관 세분 유형별 분석 중 주목할 만한 점은 시민단체와 국책연구원 전문가들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비교하여, 정부가 사업별로 예산규모를 객관·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으로 평가하였다(시민단체 31.8%, 국책연구원 44.7%).

종사 기간별로 살펴보면, 평균보다 높게 긍정비율을 보인 집단이 6개 집단 중 3개 집단(3년 미만, 15년 미만, 20년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긍정'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전문가 집단은 15년 미만(75%)이고, 가장 낮은 전문가 집단은 20년 이상(48.4%)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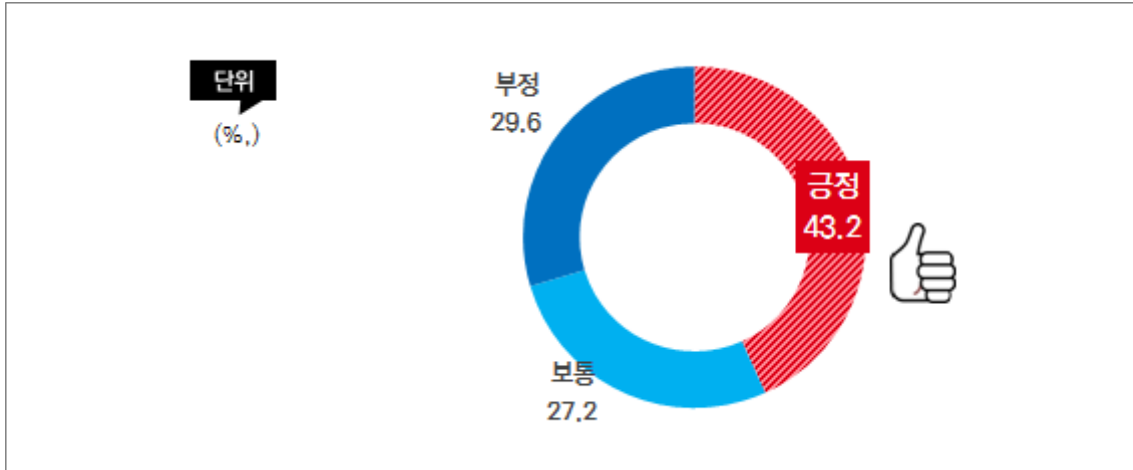
| 표 3-25 | 응답자 특성별 사업별로 예산규모를 객관·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다소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전체	250	0.4	4.0	14.4	22.8	36.4	18.4	3.6	18.8	22.8	58.4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0.9	6.5	16.7	26.9	37.0	12.0	0.0	24.1	26.9	49.1
	공공부문	97	0.0	1.0	10.3	12.4	40.2	26.8	9.3	11.3	12.4	76.3
	민간부문	40	0.0	5.0	17.5	32.5	27.5	17.5	0.0	22.5	32.5	45.0
	기타	5	0.0	0.0	20.0	60.0	20.0	0.0	0.0	20.0	60.0	20.0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0.0	6.6	16.4	24.6	41.0	11.5	0.0	23.0	24.6	52.5
	국책연구원	47	2.1	6.4	17.0	29.8	31.9	12.8	0.0	25.5	29.8	44.7
	정부부처	45	0.0	0.0	15.6	8.9	37.8	22.2	15.6	15.6	8.9	75.6
	공공기관	43	0.0	0.0	7.0	16.3	39.5	32.6	4.7	7.0	16.3	76.7
	국제기구	9	0.0	11.1	0.0	11.1	55.6	22.2	0.0	11.1	11.1	77.8
	시민단체	22	0.0	9.1	27.3	31.8	22.7	9.1	0.0	36.4	31.8	31.8
	민간기관	18	0.0	0.0	5.6	33.3	33.3	27.8	0.0	5.6	33.3	61.1
	기타	5	0.0	0.0	20.0	60.0	20.0	0.0	0.0	20.0	60.0	20.0
종사 분야	교육	33	0.0	9.1	15.2	15.2	33.3	24.2	3.0	24.2	15.2	60.6
	보건의료	20	0.0	5.0	10.0	25.0	40.0	20.0	0.0	15.0	25.0	60.0
	공공행정·거버넌스	50	0.0	6.0	16.0	20.0	32.0	18.0	8.0	22.0	20.0	58.0
	농촌개발	21	0.0	0.0	14.3	23.8	38.1	19.0	4.8	14.3	23.8	61.9
	교통인프라	6	0.0	0.0	0.0	16.7	66.7	16.7	0.0	0.0	16.7	83.3
	정보통신·IT기술	14	0.0	7.1	14.3	14.3	42.9	21.4	0.0	21.4	14.3	64.3
	과학기술	11	0.0	0.0	9.1	27.3	45.5	9.1	9.1	9.1	27.3	63.6
	환경·기후변화	17	0.0	0.0	5.9	17.6	58.8	11.8	5.9	5.9	17.6	76.5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0.0	9.1	18.2	45.5	9.1	18.2	0.0	27.3	45.5	27.3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0.0	1.8	16.1	28.6	33.9	19.6	0.0	17.9	28.6	53.6
기타	10	10.0	0.0	30.0	20.0	20.0	10.0	10.0	40.0	20.0	40.0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0.0	0.0	11.5	19.2	42.3	19.2	7.7	11.5	19.2	69.2
	5년 미만	41	0.0	7.3	19.5	22.0	22.0	26.8	2.4	26.8	22.0	51.2
	10년 미만	77	0.0	5.2	16.9	26.0	33.8	16.9	1.3	22.1	26.0	51.9
	15년 미만	32	0.0	6.3	9.4	9.4	59.4	15.6	0.0	15.6	9.4	75.0
	20년 미만	17	0.0	0.0	5.9	35.3	41.2	11.8	5.9	5.9	35.3	58.8
	20년 이상	31	3.2	3.2	16.1	29.0	25.8	16.1	6.5	22.6	29.0	48.4
성별	남성	162	0.6	4.3	13.6	21.0	39.5	16.7	4.3	18.5	21.0	60.5
	여성	88	0.0	3.4	15.9	26.1	30.7	21.6	2.3	19.3	26.1	54.5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0.0	2.3	20.5	13.6	29.5	27.3	6.8	22.7	13.6	63.6
	석사 졸업	85	0.0	2.4	8.2	24.7	41.2	20.0	3.5	10.6	24.7	64.7
	박사 졸업	121	0.8	5.8	16.5	24.8	35.5	14.0	2.5	23.1	24.8	52.1

4) 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인식 : 집행을 위한 협력관계를 잘 구축하고 있음

| 그림 3-20 | 집행을 위한 협력관계를 잘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Q. 정부부처와 시행기관들은 집행을 위한 협력관계를 잘 구축하고 있다.

- 정부부처와 시행기관들이 집행을 위한 협력관계를 잘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문가의 43.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2.4% + 상당히 그렇다 15.2% + 약간 그렇다 25.6%)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9.6%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2.8% + 거의 그렇지 않다 9.2% + 별로 그렇지 않다 17.6%)이라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긍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2%로 앞선 살펴본 3가지 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인식에 대한 '긍정' 비율보다 다소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적개발원조 인식 1 60%, 인식2 62%, 인식3 58.4%). 이를 통해 ODA 사업의 계획(인식1), 심사(인식2), 예산(인식3)처럼 정책 초기과정보다 집행(인식4)같은 정책 중반과정에 대한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공공부문 57.7%, 민간부문 37.5%, 연구부문 34.3%순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문가 집단에서는 '긍정' 비율이 '부정' 비율보다 높는데 비해, 연구부문에서는 '긍정' 비율 34.3%, '부정' 비율 41.7%로 나타나 오히려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종사 기간별로 살펴보면, 3년 미만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들 중 57.7%가 '긍정'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2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들 중 25.8%만이 '긍정'으로 응답하여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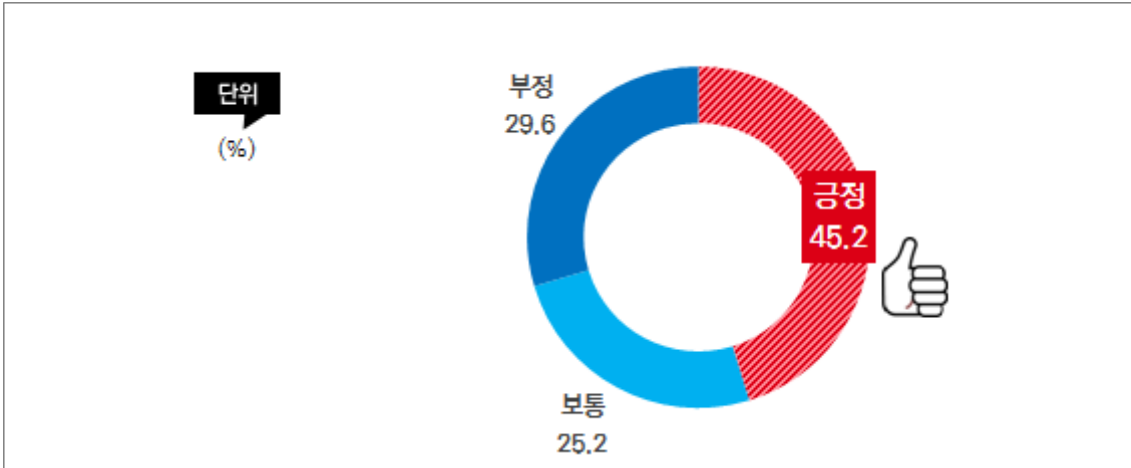
| 표 3-26 | 응답자 특성별 정부부처와 시행기관들이 집행을 위한 협력관계를 잘 구축하고 있는지 의견

(단위: 명, %)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다소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전체	250	2.8	9.2	17.6	27.2	25.6	15.2	2.4	29.6	27.2	43.2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4.6	12.0	25.0	24.1	23.1	10.2	0.9	41.7	24.1	34.3
	공공부문	97	1.0	2.1	10.3	28.9	30.9	22.7	4.1	13.4	28.9	57.7
	민간부문	40	2.5	15.0	12.5	32.5	22.5	12.5	2.5	30.0	32.5	37.5
	기타	5	0.0	40.0	40.0	20.0	0.0	0.0	0.0	80.0	20.0	0.0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6.6	11.5	24.6	26.2	18.0	13.1	0.0	42.6	26.2	31.1
	국책연구원	47	2.1	12.8	25.5	21.3	29.8	6.4	2.1	40.4	21.3	38.3
	정부부처	45	0.0	0.0	6.7	24.4	33.3	26.7	8.9	6.7	24.4	68.9
	공공기관	43	2.3	4.7	11.6	32.6	30.2	18.6	0.0	18.6	32.6	48.8
	국제기구	9	0.0	0.0	22.2	33.3	22.2	22.2	0.0	22.2	33.3	44.4
	시민단체	22	4.5	13.6	13.6	45.5	9.1	13.6	0.0	31.8	45.5	22.7
	민간기관	18	0.0	16.7	11.1	16.7	38.9	11.1	5.6	27.8	16.7	55.6
	기타	5	0.0	40.0	40.0	20.0	0.0	0.0	0.0	80.0	20.0	0.0
종사 분야	교육	33	0.0	9.1	12.1	24.2	18.2	33.3	3.0	21.2	24.2	54.5
	보건의료	20	0.0	15.0	20.0	30.0	20.0	15.0	0.0	35.0	30.0	35.0
	공공행정·거버넌스	50	6.0	6.0	18.0	26.0	30.0	12.0	2.0	30.0	26.0	44.0
	농촌개발	21	9.5	4.8	19.0	19.0	28.6	14.3	4.8	33.3	19.0	47.6
	교통인프라	6	16.7	0.0	16.7	33.3	33.3	0.0	0.0	33.3	33.3	33.3
	정보통신·IT기술	14	0.0	14.3	7.1	21.4	28.6	21.4	7.1	21.4	21.4	57.1
	과학기술	11	0.0	9.1	36.4	0.0	45.5	0.0	9.1	45.5	0.0	54.5
	환경·기후변화	17	0.0	5.9	11.8	29.4	17.6	35.3	0.0	17.6	29.4	52.9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0.0	27.3	0.0	45.5	27.3	0.0	0.0	27.3	45.5	27.3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0.0	7.1	21.4	33.9	26.8	10.7	0.0	28.6	33.9	37.5
기타	10	10.0	20.0	30.0	20.0	10.0	0.0	10.0	60.0	20.0	20.0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0.0	3.8	13.5	25.0	26.9	28.8	1.9	17.3	25.0	57.7
	5년 미만	41	2.4	12.2	17.1	31.7	14.6	17.1	4.9	31.7	31.7	36.6
	10년 미만	77	5.2	13.0	16.9	23.4	27.3	13.0	1.3	35.1	23.4	41.6
	15년 미만	32	6.3	9.4	9.4	21.9	46.9	6.3	0.0	25.0	21.9	53.1
	20년 미만	17	0.0	5.9	11.8	47.1	17.6	11.8	5.9	17.6	47.1	35.3
	20년 이상	31	0.0	6.5	38.7	29.0	16.1	6.5	3.2	45.2	29.0	25.8
성별	남성	162	2.5	9.9	17.9	27.2	25.3	13.6	3.7	30.2	27.2	42.6
	여성	88	3.4	8.0	17.0	27.3	26.1	18.2	0.0	28.4	27.3	44.3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0.0	6.8	6.8	31.8	20.5	29.5	4.5	13.6	31.8	54.5
	석사 졸업	85	1.2	5.9	16.5	31.8	34.1	8.2	2.4	23.5	31.8	44.7
	박사 졸업	121	5.0	12.4	22.3	22.3	21.5	14.9	1.7	39.7	22.3	38.0

5) 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인식 :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는 파트너십을 형성함

| 그림 3-21 |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가 파트너십을 형성해 집행하는지에 대한 의견



Q.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는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문가의 45.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2% + 상당히 그렇다 12.8% + 약간 그렇다 30.4%)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9.6%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1.6% + 거의 그렇지 않다 5.6% + 별로 그렇지 않다 22.4%)이라고 응답하였다.

파트너십 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45.2%로 앞서 질문한 3개의 질문과는 달리 긍정적 비율에 있어서 다소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적개발원조 인식1 60%, 인식2 62%, 인식3 58.4%).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ODA 사업을 집행하는지에 관한 내용도 앞서 4번째 질문인 협력관계에 대한 질문과 마찬가지로 정책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사업 시행 이후 집행과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긍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문가 집단에서는 ‘긍정’ 비율이 ‘부정’ 비율보다 높는데 비해, 연구부문에서는 ‘긍정’ 비율 40.7%, ‘부정’ 비율 34.3%로 나타나 오히려 부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사 분야별로 살펴보면, 12개 분야 중 ‘긍정’ 응답 비율이 50%를 넘는 분야는 4개(교육, 농촌개발, 정보통신·IT기술, 난민지원·긴급구호)에 그쳤고, 특히 교통인프라 분야의 ‘긍정’ 응답은 16.7%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부정’ 응답 비율은 6개 분야(보건의료, 공공행정·거버넌스, 교통인프라, 정보통신·IT기술, 과학기술, 기타)에서 30% 이상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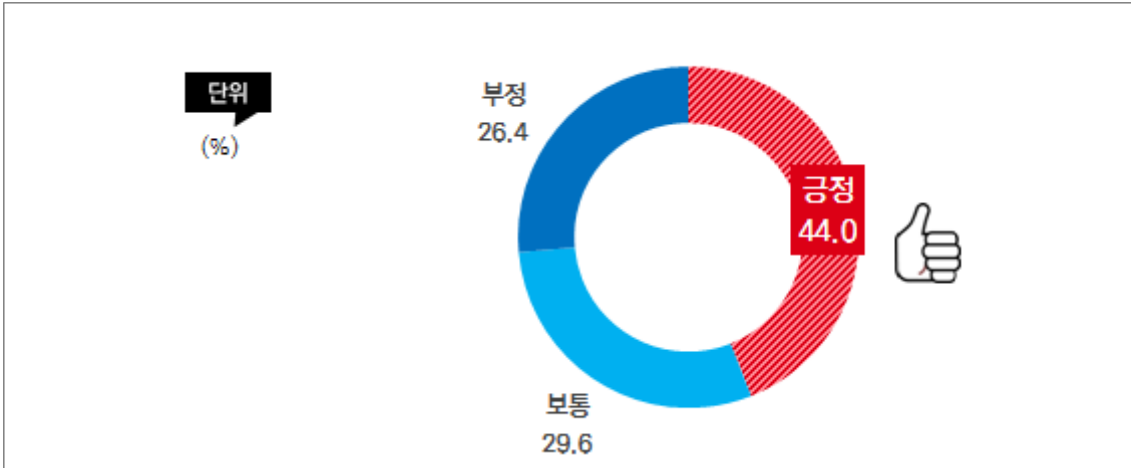
| 표 3-27 | 응답자 특성별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업을 집행하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다소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전체	250	1.6	5.6	22.4	25.2	30.4	12.8	2.0	29.6	25.2	45.2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1.9	10.2	28.7	25.0	24.1	10.2	0.0	40.7	25.0	34.3
	공공부문	97	2.1	0.0	15.5	26.8	38.1	12.4	5.2	17.5	26.8	55.7
	민간부문	40	0.0	5.0	22.5	20.0	30.0	22.5	0.0	27.5	20.0	52.5
	기타	5	0.0	20.0	20.0	40.0	20.0	0.0	0.0	40.0	40.0	20.0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3.3	8.2	26.2	23.0	26.2	13.1	0.0	37.7	23.0	39.3
	국책연구원	47	0.0	12.8	31.9	27.7	21.3	6.4	0.0	44.7	27.7	27.7
	정부부처	45	0.0	0.0	17.8	22.2	37.8	11.1	11.1	17.8	22.2	60.0
	공공기관	43	4.7	0.0	11.6	34.9	34.9	14.0	0.0	16.3	34.9	48.8
	국제기구	9	0.0	0.0	22.2	11.1	55.6	11.1	0.0	22.2	11.1	66.7
	시민단체	22	0.0	4.5	18.2	27.3	27.3	22.7	0.0	22.7	27.3	50.0
	민간기관	18	0.0	5.6	27.8	11.1	33.3	22.2	0.0	33.3	11.1	55.6
	기타	5	0.0	20.0	20.0	40.0	20.0	0.0	0.0	40.0	40.0	20.0
종사 분야	교육	33	0.0	9.1	9.1	12.1	39.4	27.3	3.0	18.2	12.1	69.7
	보건의료	20	0.0	5.0	25.0	30.0	20.0	20.0	0.0	30.0	30.0	40.0
	공공행정·거버넌스	50	4.0	8.0	22.0	30.0	28.0	4.0	4.0	34.0	30.0	36.0
	농촌개발	21	4.8	0.0	14.3	19.0	52.4	4.8	4.8	19.0	19.0	61.9
	교통인프라	6	16.7	0.0	50.0	16.7	16.7	0.0	0.0	66.7	16.7	16.7
	정보통신·IT기술	14	0.0	0.0	35.7	14.3	28.6	21.4	0.0	35.7	14.3	50.0
	과학기술	11	0.0	9.1	27.3	27.3	27.3	9.1	0.0	36.4	27.3	36.4
	환경·기후변화	17	0.0	5.9	17.6	35.3	17.6	23.5	0.0	23.5	35.3	41.2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0.0	0.0	27.3	27.3	36.4	9.1	0.0	27.3	27.3	45.5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0.0	5.4	19.6	32.1	30.4	12.5	0.0	25.0	32.1	42.9
기타	10	0.0	10.0	60.0	10.0	10.0	0.0	10.0	70.0	10.0	20.0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0.0	5.8	19.2	23.1	32.7	15.4	3.8	25.0	23.1	51.9
	5년 미만	41	2.4	7.3	26.8	26.8	22.0	9.8	4.9	36.6	26.8	36.6
	10년 미만	77	2.6	5.2	23.4	22.1	31.2	15.6	0.0	31.2	22.1	46.8
	15년 미만	32	3.1	9.4	15.6	28.1	40.6	3.1	0.0	28.1	28.1	43.8
	20년 미만	17	0.0	5.9	17.6	17.6	52.9	0.0	5.9	23.5	17.6	58.8
	20년 이상	31	0.0	0.0	29.0	35.5	12.9	22.6	0.0	29.0	35.5	35.5
성별	남성	162	1.2	6.8	22.2	22.2	33.3	12.3	1.9	30.2	22.2	47.5
	여성	88	2.3	3.4	22.7	30.7	25.0	13.6	2.3	28.4	30.7	40.9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2.3	0.0	15.9	25.0	31.8	20.5	4.5	18.2	25.0	56.8
	석사 졸업	85	0.0	5.9	21.2	28.2	34.1	9.4	1.2	27.1	28.2	44.7
	박사 졸업	121	2.5	7.4	25.6	23.1	27.3	12.4	1.7	35.5	23.1	41.3

6) 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인식 : 수원국과 상호책임성을 갖추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갖춘

| 그림 3-22 | 수원국과 상호책임성을 갖추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갖춰 집행하는지에 대한 의견



Q. 수원국과 상호책임성을 갖추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갖추어 집행하고 있다.

■ 정부가 수원국과 상호책임성을 갖추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갖추어 집행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문가의 44%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2.8% + 상당히 그렇다 14.8% + 약간 그렇다 26.4%)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6.4%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0.8% + 상당히 그렇지 않다 4.8% + 별로 그렇지 않다 20.8%)이라고 응답하였다.

정부가 수원국과 상호책임성을 갖추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갖추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긍정비율을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에서는 '긍정' 응답 비율이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연구부문의 '긍정' 비율은 27.8%에 그쳐 두 집단 간의 격차가 37.1%p로 크게 나타났다. '부정' 응답 비율에서 볼 때 또한, 공공부문은 8.2%로 낮은 수치인데 비해 연구부문과 민간부문은 각각 38%, 37.5%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소속기관 세분 유형별 분석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국책연구원의 '긍정' 응답 비율은 23.4%인데 비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긍정' 응답 비율은 모두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부처 60%, 공공기관 67.4%).

종사 기간별로 살펴보면, 3년 미만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종사한 전문가들의 '긍정' 비율은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들의 '긍정' 비율은 32.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긍정' 응답 비율 측면에서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오래 종사한 전문가일수록 저조한 '긍정'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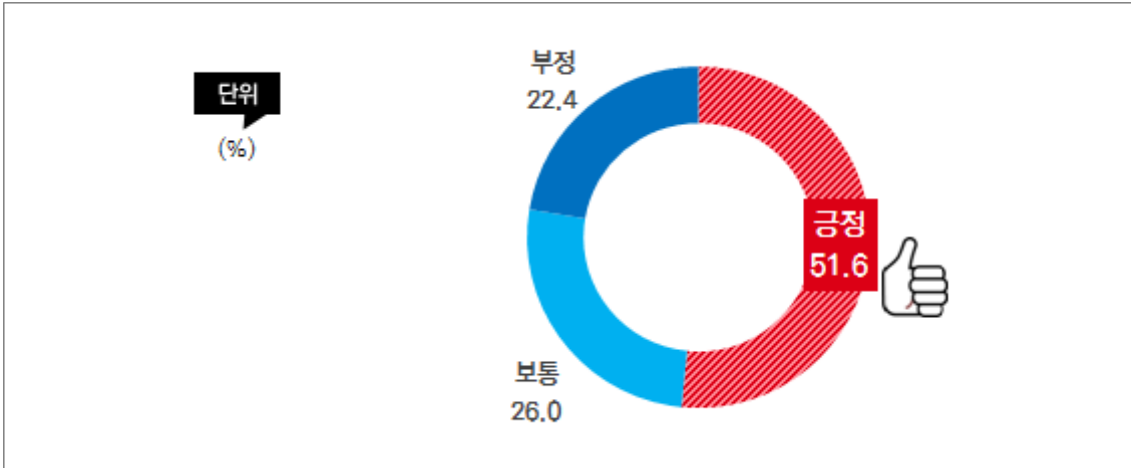
| 표 3-28 | 응답자 특성별 정부가 수원국과 상호책임성을 갖추도록 ODA 사업관리 체계를 갖춰 집행하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다소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전체	250	0.8	4.8	20.8	29.6	26.4	14.8	2.8	26.4	29.6	44.0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1.9	5.6	30.6	34.3	17.6	10.2	0.0	38.0	34.3	27.8
	공공부문	97	0.0	1.0	7.2	26.8	36.1	22.7	6.2	8.2	26.8	64.9
	민간부문	40	0.0	12.5	25.0	22.5	27.5	10.0	2.5	37.5	22.5	40.0
	기타	5	0.0	0.0	40.0	40.0	20.0	0.0	0.0	40.0	40.0	20.0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3.3	6.6	24.6	34.4	23.0	8.2	0.0	34.4	34.4	31.1
	국책연구원	47	0.0	4.3	38.3	34.0	10.6	12.8	0.0	42.6	34.0	23.4
	정부부처	45	0.0	0.0	8.9	31.1	20.0	26.7	13.3	8.9	31.1	60.0
	공공기관	43	0.0	2.3	4.7	25.6	46.5	20.9	0.0	7.0	25.6	67.4
	국제기구	9	0.0	0.0	11.1	11.1	66.7	11.1	0.0	11.1	11.1	77.8
	시민단체	22	0.0	9.1	31.8	27.3	18.2	13.6	0.0	40.9	27.3	31.8
	민간기관	18	0.0	16.7	16.7	16.7	38.9	5.6	5.6	33.3	16.7	50.0
	기타	5	0.0	0.0	40.0	40.0	20.0	0.0	0.0	40.0	40.0	20.0
종사 분야	교육	33	0.0	3.0	27.3	18.2	27.3	24.2	0.0	30.3	18.2	51.5
	보건의료	20	0.0	5.0	5.0	35.0	30.0	25.0	0.0	10.0	35.0	55.0
	공공행정·거버넌스	50	0.0	6.0	22.0	36.0	18.0	14.0	4.0	28.0	36.0	36.0
	농촌개발	21	4.8	9.5	4.8	28.6	33.3	9.5	9.5	19.0	28.6	52.4
	교통인프라	6	0.0	0.0	0.0	33.3	33.3	33.3	0.0	0.0	33.3	66.7
	정보통신·IT기술	14	7.1	14.3	7.1	14.3	42.9	7.1	7.1	28.6	14.3	57.1
	과학기술	11	0.0	0.0	27.3	27.3	18.2	18.2	9.1	27.3	27.3	45.5
	환경·기후변화	17	0.0	0.0	23.5	17.6	35.3	23.5	0.0	23.5	17.6	58.8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0.0	0.0	36.4	54.5	9.1	0.0	0.0	36.4	54.5	9.1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0.0	1.8	26.8	30.4	30.4	10.7	0.0	28.6	30.4	41.1
	기타	10	0.0	20.0	30.0	30.0	10.0	0.0	10.0	50.0	30.0	20.0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0.0	0.0	13.5	30.8	26.9	25.0	3.8	13.5	30.8	55.8
	5년 미만	41	0.0	4.9	29.3	26.8	17.1	19.5	2.4	34.1	26.8	39.0
	10년 미만	77	2.6	7.8	19.5	26.0	31.2	10.4	2.6	29.9	26.0	44.2
	15년 미만	32	0.0	12.5	18.8	25.0	31.3	12.5	0.0	31.3	25.0	43.8
	20년 미만	17	0.0	0.0	11.8	47.1	29.4	5.9	5.9	11.8	47.1	41.2
	20년 이상	31	0.0	0.0	32.3	35.5	19.4	9.7	3.2	32.3	35.5	32.3
성별	남성	162	1.2	4.3	17.9	30.9	29.0	13.0	3.7	23.5	30.9	45.7
	여성	88	0.0	5.7	26.1	27.3	21.6	18.2	1.1	31.8	27.3	40.9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0.0	0.0	20.5	25.0	18.2	29.5	6.8	20.5	25.0	54.5
	석사 졸업	85	0.0	4.7	15.3	30.6	34.1	14.1	1.2	20.0	30.6	49.4
	박사 졸업	121	1.7	6.6	24.8	30.6	24.0	9.9	2.5	33.1	30.6	36.4

7) 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인식 : 성과관리와 평가를 위한 계획과 방법이 잘 안내되고 있음

| 그림 3-23 |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와 평가를 위한 계획과 방법이 잘 안내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Q.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와 평가를 위한 계획과 방법이 잘 안내되고 있다.

■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와 평가를 위한 계획과 방법이 잘 안내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문가의 51.6%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3.2% + 상당히 그렇다 14.4% + 약간 그렇다 34%)라고 응답하였으며, 22.4%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0.8% + 거의 그렇지 않다 4% + 별로 그렇지 않다 17.6%)라고 응답하였다.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와 평가를 위한 계획과 방법이 잘 안내되고 있는지에 대해 긍정은 51.6%, 부정은 22.4%로 나타났다.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에서는 '긍정' 응답 비율이 6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연구부문의 '긍정' 비율은 38.9%로 가장 낮게 나타나 두 집단 간의 격차가 29.1%p로 나타났다. 한편 소속기관 세분 유형별로 살펴볼 때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국제기구, 민간기관의 '긍정' 응답 비율이 65%를 상회(정부부처 66.7%, 공공기관 69.8%, 국제기구 66.7%, 민간기관 66.7%)하는 것으로 조사된 데 비해, 학계와 국책연구원, 시민단체의 '긍정' 응답 비율은 30% 후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계 39.3%, 국책연구원 38.3%, 시민단체 36.4%).

종사 기간별로 살펴보면, 15년 미만 종사 전문가들의 '긍정' 응답 비율이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년 이상 종사 전문가들의 '긍정' 응답 비율은 45.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정' 응답의 비율은 10년 미만 종사 전문가 집단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데 비해 15년 미만 종사 전문가 집단은 12.5%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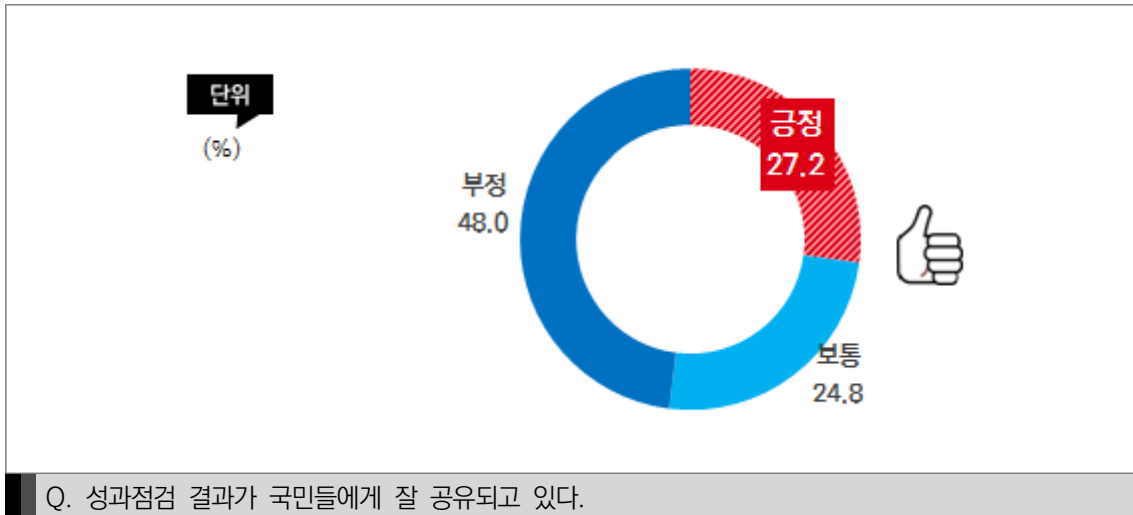
| 표 3-29 | 응답자 특성별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와 평가를 위한 계획과 방법이 잘 안내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다소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전체	250	0.8	4.0	17.6	26.0	34.0	14.4	3.2	22.4	26.0	51.6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1.9	6.5	24.1	28.7	27.8	10.2	0.9	32.4	28.7	38.9
	공공부문	97	0.0	1.0	9.3	21.6	42.3	18.6	7.2	10.3	21.6	68.0
	민간부문	40	0.0	5.0	17.5	27.5	32.5	17.5	0.0	22.5	27.5	50.0
	기타	5	0.0	0.0	40.0	40.0	20.0	0.0	0.0	40.0	40.0	20.0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0.0	9.8	19.7	31.1	24.6	14.8	0.0	29.5	31.1	39.3
	국책연구원	47	4.3	2.1	29.8	25.5	31.9	4.3	2.1	36.2	25.5	38.3
	정부부처	45	0.0	0.0	8.9	24.4	31.1	22.2	13.3	8.9	24.4	66.7
	공공기관	43	0.0	2.3	9.3	18.6	48.8	18.6	2.3	11.6	18.6	69.8
	국제기구	9	0.0	0.0	11.1	22.2	66.7	0.0	0.0	11.1	22.2	66.7
	시민단체	22	0.0	4.5	27.3	31.8	27.3	9.1	0.0	31.8	31.8	36.4
	민간기관	18	0.0	5.6	5.6	22.2	38.9	27.8	0.0	11.1	22.2	66.7
	기타	5	0.0	0.0	40.0	40.0	20.0	0.0	0.0	40.0	40.0	20.0
종사 분야	교육	33	0.0	3.0	9.1	27.3	30.3	27.3	3.0	12.1	27.3	60.6
	보건의료	20	0.0	0.0	20.0	25.0	30.0	25.0	0.0	20.0	25.0	55.0
	공공행정·거버넌스	50	4.0	2.0	16.0	30.0	28.0	14.0	6.0	22.0	30.0	48.0
	농촌개발	21	0.0	9.5	14.3	14.3	33.3	19.0	9.5	23.8	14.3	61.9
	교통인프라	6	0.0	0.0	0.0	33.3	50.0	16.7	0.0	0.0	33.3	66.7
	정보통신·IT기술	14	0.0	0.0	21.4	7.1	50.0	21.4	0.0	21.4	7.1	71.4
	과학기술	11	0.0	0.0	18.2	9.1	45.5	18.2	9.1	18.2	9.1	72.7
	환경·기후변화	17	0.0	0.0	23.5	29.4	35.3	11.8	0.0	23.5	29.4	47.1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0.0	9.1	36.4	36.4	18.2	0.0	0.0	45.5	36.4	18.2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0.0	5.4	19.6	30.4	39.3	5.4	0.0	25.0	30.4	44.6
	기타	10	0.0	20.0	20.0	30.0	20.0	0.0	10.0	40.0	30.0	30.0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0.0	0.0	13.5	28.8	32.7	21.2	3.8	13.5	28.8	57.7
	5년 미만	41	2.4	0.0	26.8	22.0	22.0	22.0	4.9	29.3	22.0	48.8
	10년 미만	77	1.3	9.1	19.5	22.1	33.8	13.0	1.3	29.9	22.1	48.1
	15년 미만	32	0.0	6.3	6.3	28.1	50.0	9.4	0.0	12.5	28.1	59.4
	20년 미만	17	0.0	0.0	23.5	23.5	41.2	5.9	5.9	23.5	23.5	52.9
	20년 이상	31	0.0	3.2	16.1	35.5	32.3	6.5	6.5	19.4	35.5	45.2
성별	남성	162	0.6	3.1	14.8	22.8	40.7	13.6	4.3	18.5	22.8	58.6
	여성	88	1.1	5.7	22.7	31.8	21.6	15.9	1.1	29.5	31.8	38.6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0.0	2.3	18.2	22.7	25.0	27.3	4.5	20.5	22.7	56.8
	석사 졸업	85	0.0	0.0	18.8	27.1	40.0	10.6	3.5	18.8	27.1	54.1
	박사 졸업	121	1.7	7.4	16.5	26.4	33.1	12.4	2.5	25.6	26.4	47.9

8) 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인식 : 성과점검 결과가 국민들에게 잘 공유되고 있음

| 그림 3-24 | 성과점검 결과가 국민들에게 잘 공유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 성과점검 결과가 국민들에게 잘 공유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문가의 27.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1.2% + 상당히 그렇다 6% + 약간 그렇다 20%)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8%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5.6% + 거의 그렇지 않다 13.2% + 별로 그렇지 않다 29.2%)이라고 응답하였다.

성과점검 결과가 국민들에게 잘 공유되고 있는지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27.2%에 그쳐, 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인식에 대한 질문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문가들은 ODA 사업의 성과점검 결과가 국민들에게 공유되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는 소속기관 유형별로 살펴볼 때 더욱 두드러진다. 성과점검 결과 공유의 주체인 공공부문은 45.5%의 전문가들이 ‘긍정’이라고 응답한 데 비해, 연구부문과 민간부문은 각각 16.7%, 15%의 전문가들만이 ‘긍정’이라고 응답하여 공공부문과 그 외 부문 전문가들의 인식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종사 기간별로 살펴보면 3년 미만과 20년 이상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 집단의 긍정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긍정’ 응답의 비율은 3년 미만 전문가 집단(38.5%)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10년 미만 전문가 집단(22.1%)에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부정’ 응답의 비율은 총 6개 집단 중 4개 집단(5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20년 미만)에서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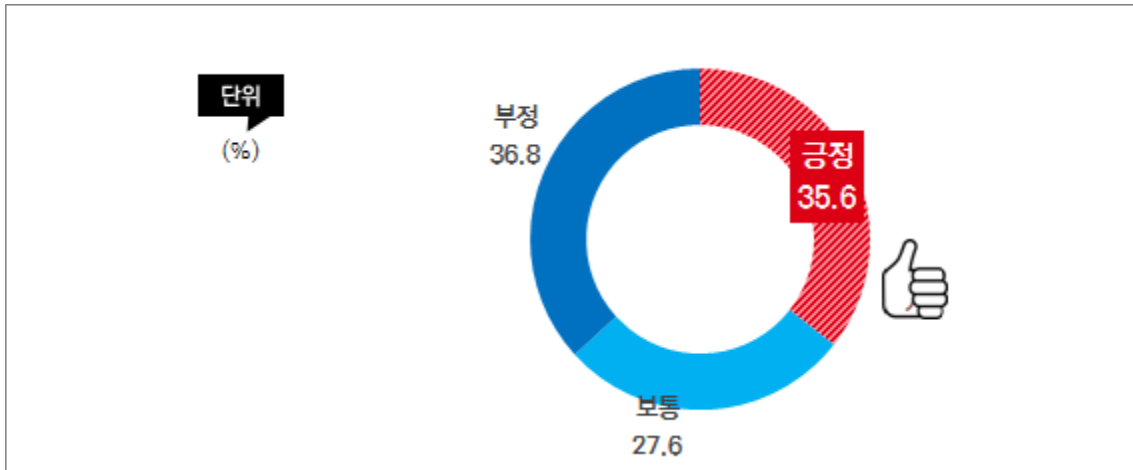
| 표 3-30 | 응답자 특성별 성과점검 결과가 국민들에게 잘 공유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다소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전체	250	5.6	13.2	29.2	24.8	20.0	6.0	1.2	48.0	24.8	27.2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7.4	18.5	39.8	17.6	13.0	3.7	0.0	65.7	17.6	16.7
	공공부문	97	2.1	5.2	18.6	28.9	34.0	8.2	3.1	25.8	28.9	45.4
	민간부문	40	10.0	17.5	22.5	35.0	7.5	7.5	0.0	50.0	35.0	15.0
	기타	5	0.0	20.0	60.0	20.0	0.0	0.0	0.0	80.0	20.0	0.0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4.9	21.3	39.3	19.7	11.5	3.3	0.0	65.6	19.7	14.8
	국책연구원	47	10.6	14.9	40.4	14.9	14.9	4.3	0.0	66.0	14.9	19.1
	정부부처	45	0.0	2.2	22.2	22.2	31.1	17.8	4.4	24.4	22.2	53.3
	공공기관	43	2.3	9.3	14.0	32.6	39.5	0.0	2.3	25.6	32.6	41.9
	국제기구	9	11.1	0.0	22.2	44.4	22.2	0.0	0.0	33.3	44.4	22.2
	시민단체	22	9.1	18.2	22.7	40.9	9.1	0.0	0.0	50.0	40.9	9.1
	민간기관	18	11.1	16.7	22.2	27.8	5.6	16.7	0.0	50.0	27.8	22.2
	기타	5	0.0	20.0	60.0	20.0	0.0	0.0	0.0	80.0	20.0	0.0
종사 분야	교육	33	6.1	6.1	39.4	15.2	24.2	9.1	0.0	51.5	15.2	33.3
	보건의료	20	0.0	20.0	30.0	25.0	25.0	0.0	0.0	50.0	25.0	25.0
	공공행정·거버넌스	50	6.0	18.0	22.0	26.0	18.0	8.0	2.0	46.0	26.0	28.0
	농촌개발	21	9.5	14.3	19.0	19.0	23.8	14.3	0.0	42.9	19.0	38.1
	교통인프라	6	0.0	0.0	33.3	33.3	33.3	0.0	0.0	33.3	33.3	33.3
	정보통신·IT기술	14	14.3	21.4	21.4	21.4	7.1	14.3	0.0	57.1	21.4	21.4
	과학기술	11	0.0	0.0	45.5	0.0	45.5	9.1	0.0	45.5	0.0	54.5
	환경·기후변화	17	5.9	0.0	29.4	41.2	17.6	0.0	5.9	35.3	41.2	23.5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9.1	0.0	45.5	45.5	0.0	0.0	0.0	54.5	45.5	0.0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1.8	16.1	30.4	26.8	21.4	3.6	0.0	48.2	26.8	25.0
기타	10	20.0	30.0	20.0	20.0	0.0	0.0	10.0	70.0	20.0	10.0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1.9	9.6	23.1	26.9	25.0	11.5	1.9	34.6	26.9	38.5
	5년 미만	41	7.3	14.6	31.7	19.5	12.2	9.8	4.9	53.7	19.5	26.8
	10년 미만	77	7.8	15.6	27.3	27.3	19.5	2.6	0.0	50.6	27.3	22.1
	15년 미만	32	6.3	12.5	34.4	21.9	25.0	0.0	0.0	53.1	21.9	25.0
	20년 미만	17	0.0	29.4	35.3	11.8	17.6	5.9	0.0	64.7	11.8	23.5
	20년 이상	31	6.5	3.2	32.3	32.3	19.4	6.5	0.0	41.9	32.3	25.8
성별	남성	162	5.6	13.6	27.2	24.7	19.8	7.4	1.9	46.3	24.7	29.0
	여성	88	5.7	12.5	33.0	25.0	20.5	3.4	0.0	51.1	25.0	23.9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4.5	9.1	22.7	22.7	27.3	11.4	2.3	36.4	22.7	40.9
	석사 졸업	85	2.4	10.6	24.7	30.6	27.1	3.5	1.2	37.6	30.6	31.8
	박사 졸업	121	8.3	16.5	34.7	21.5	12.4	5.8	0.8	59.5	21.5	19.0

9) 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인식 : 성과점검 결과가 차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잘 반영됨

| 그림 3-25 | 성과점검 결과가 차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잘 반영되는지에 대한 의견



Q. 성과점검 결과가 차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다.

■ 성과점검 결과가 차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문가의 35.6%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1.2% + 상당히 그렇다 8% + 약간 그렇다 26.4%)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6.8%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6% + 거의 그렇지 않다 10.4% + 별로 그렇지 않다 22.8%)이라고 응답하였다.

성과점검 결과가 차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반영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35.6%로 다른 인식 조사에 비해 긍정적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앞서 살펴본 질문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성과점검 결과를 공유 및 성과점검 결과 정책환류 단계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들의 만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의 전문가 집단이 '그렇다' 응답 비율(56.7%)이 '그렇지 않다' 응답 비율(20.6%)보다 상당히 높은데 비해, 연구부문과 민간부문은 '그렇지 않다' 응답 비율(연구부문 48.1%, 민간부문 42.5%)이 '그렇다' 응답 비율(연구부문 19.4%, 민간부문 32.5%)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소속기관 세분 유형별로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정부부처의 '그렇다' 응답 비율(66.7%)과 국책연구원의 '그렇다' 응답 비율(14.9%)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종사 기간으로 살펴볼 때 주목할 만한 점은, 3년 미만 종사 전문가 집단과 20년 미만 종사 전문가 집단 간에 대조적인 '그렇다' 및 '그렇지 않다' 응답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3년 미만 집단은 '그렇다' 긍정적 응답 비율 48.1%, '그렇지 않다' 부정적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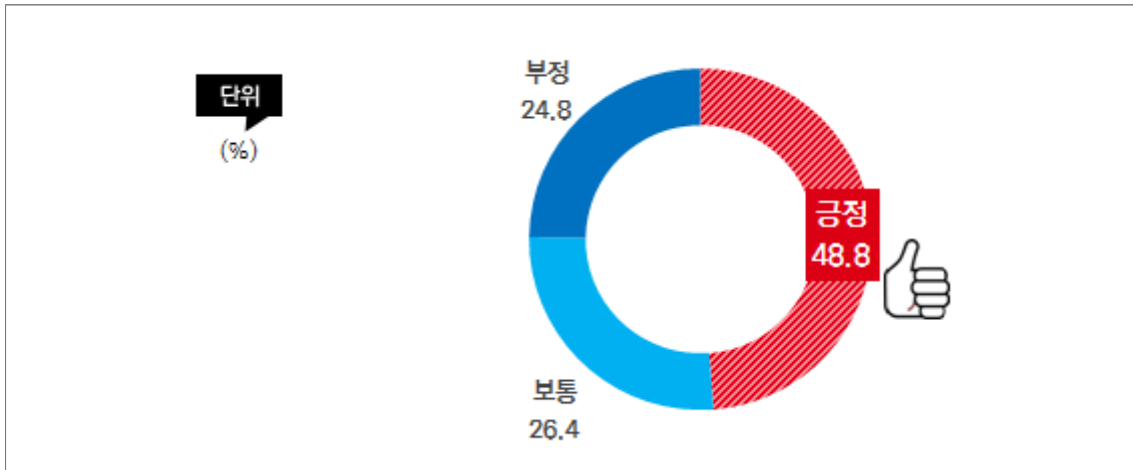
이 21.2%로 조사된 데 비해, 20년 미만 집단은 긍정 응답 비율 17.6%, 부정적 응답 비율이 52.9%로 나타났다.

| 표 3-31 | 응답자 특성별 성과점검 결과가 차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잘 반영되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점)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다소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전체	250	3.6	10.4	22.8	27.6	26.4	8.0	1.2	36.8	27.6	35.6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4.6	17.6	25.9	32.4	15.7	3.7	0.0	48.1	32.4	19.4
	공공부문	97	1.0	4.1	15.5	22.7	40.2	13.4	3.1	20.6	22.7	56.7
	민간부문	40	7.5	7.5	27.5	25.0	25.0	7.5	0.0	42.5	25.0	32.5
	기타	5	0.0	0.0	60.0	40.0	0.0	0.0	0.0	60.0	40.0	0.0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4.9	19.7	24.6	27.9	19.7	3.3	0.0	49.2	27.9	23.0
	국책연구원	47	4.3	14.9	27.7	38.3	10.6	4.3	0.0	46.8	38.3	14.9
	정부부처	45	0.0	4.4	13.3	15.6	40.0	20.0	6.7	17.8	15.6	66.7
	공공기관	43	2.3	4.7	16.3	27.9	41.9	7.0	0.0	23.3	27.9	48.8
	국제기구	9	0.0	0.0	22.2	33.3	33.3	11.1	0.0	22.2	33.3	44.4
	시민단체	22	9.1	4.5	27.3	31.8	22.7	4.5	0.0	40.9	31.8	27.3
	민간기관	18	5.6	11.1	27.8	16.7	27.8	11.1	0.0	44.4	16.7	38.9
	기타	5	0.0	0.0	60.0	40.0	0.0	0.0	0.0	60.0	40.0	0.0
종사 분야	교육	33	0.0	3.0	24.2	39.4	15.2	18.2	0.0	27.3	39.4	33.3
	보건의료	20	0.0	15.0	20.0	30.0	30.0	5.0	0.0	35.0	30.0	35.0
	공공행정·거버넌스	50	2.0	16.0	26.0	16.0	30.0	8.0	2.0	44.0	16.0	40.0
	농촌개발	21	4.8	0.0	19.0	23.8	42.9	4.8	4.8	23.8	23.8	52.4
	교통인프라	6	0.0	0.0	33.3	33.3	33.3	0.0	0.0	33.3	33.3	33.3
	정보통신·IT기술	14	14.3	14.3	7.1	14.3	35.7	14.3	0.0	35.7	14.3	50.0
	과학기술	11	0.0	0.0	18.2	36.4	27.3	18.2	0.0	18.2	36.4	45.5
	환경·기후변화	17	0.0	5.9	17.6	47.1	29.4	0.0	0.0	23.5	47.1	29.4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9.1	9.1	18.2	45.5	18.2	0.0	0.0	36.4	45.5	18.2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1.8	14.3	28.6	26.8	21.4	7.1	0.0	44.6	26.8	28.6
기타	10	30.0	20.0	20.0	10.0	10.0	0.0	10.0	70.0	10.0	20.0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1.9	5.8	13.5	30.8	28.8	17.3	1.9	21.2	30.8	48.1
	5년 미만	41	2.4	9.8	29.3	24.4	22.0	9.8	2.4	41.5	24.4	34.1
	10년 미만	77	7.8	13.0	19.5	26.0	27.3	6.5	0.0	40.3	26.0	33.8
	15년 미만	32	3.1	12.5	15.6	34.4	34.4	0.0	0.0	31.3	34.4	34.4
	20년 미만	17	0.0	11.8	41.2	29.4	11.8	0.0	5.9	52.9	29.4	17.6
	20년 이상	31	0.0	9.7	35.5	22.6	25.8	6.5	0.0	45.2	22.6	32.3
성별	남성	162	1.9	11.1	22.8	26.5	29.0	6.8	1.9	35.8	26.5	37.7
	여성	88	6.8	9.1	22.7	29.5	21.6	10.2	0.0	38.6	29.5	31.8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2.3	2.3	22.7	18.2	31.8	20.5	2.3	27.3	18.2	54.5
	석사 졸업	85	2.4	7.1	24.7	24.7	32.9	7.1	1.2	34.1	24.7	41.2
	박사 졸업	121	5.0	15.7	21.5	33.1	19.8	4.1	0.8	42.1	33.1	24.8

10) 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인식 : 국가협력전략과 수원국의 발전전략은 일관성을 갖춤

| 그림 3-26 | 국가협력전략과 수원국의 발전전략은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Q. 국가협력전략과 수원국의 발전전략은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

■ 국가협력전략과 수원국의 발전전략 간에 일관성이 갖춰져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문가의 48.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2.8% + 상당히 그렇다 15.2% + 다소 그렇다 30.8%)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4.8%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1.6% + 상당히 그렇지 않다 5.6% + 약간 그렇지 않다 17.6%)이라고 응답하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의 '그렇다' 응답 비율은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연구부문의 '그렇다' 응답 비율은 38.9%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한편 종사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69.7%로 국가협력전략과 수원국의 발전전략 간 일관성이 갖춰져 있다고 응답한 반면, 성평등·취약·인권보호 분야의 전문가 집단은 9.1%로 응답 비율이 나타나 두 분야의 전문가 집단 간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응답 비율은 과학기술 분야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기후변화 분야가 11.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난민지원·긴급구호 분야는 '그렇지 않다' 응답 비율이 0%지만 모집단이 1명이므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논하기 어려움).

종사 기간별로 살펴보면, 3년 미만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종사한 전문가 집단이 53.8%의 '그렇다' 응답 비율을 나타냈고 20년 이상 종사 전문가 집단은 38.7%가 '그렇다' 응답 비율로 조사되었다. 20년 미만 종사 전문가 집단은 '그렇지 않다'로 부정적 응답 비율이 11.8%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20년 이상 종사 전문가 집단은 부정적 응답 비율이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표 3-32 | 응답자 특성별 국가협력전략과 수원국의 발전전략이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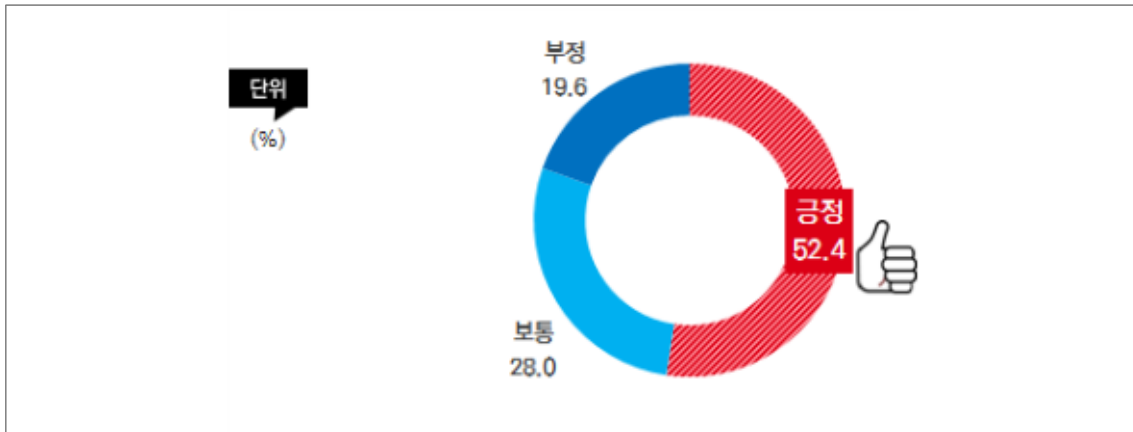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다소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전체	250	1.6	5.6	17.6	26.4	30.8	15.2	2.8	24.8	26.4	48.8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2.8	7.4	18.5	32.4	30.6	8.3	0.0	28.7	32.4	38.9
	공공부문	97	1.0	4.1	11.3	22.7	29.9	25.8	5.2	16.5	22.7	60.8
	민간부문	40	0.0	5.0	25.0	22.5	35.0	7.5	5.0	30.0	22.5	47.5
	기타	5	0.0	0.0	60.0	0.0	20.0	20.0	0.0	60.0	0.0	40.0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1.6	6.6	18.0	31.1	34.4	8.2	0.0	26.2	31.1	42.6
	국책연구원	47	4.3	8.5	19.1	34.0	25.5	8.5	0.0	31.9	34.0	34.0
	정부부처	45	0.0	4.4	13.3	17.8	20.0	33.3	11.1	17.8	17.8	64.4
	공공기관	43	0.0	4.7	9.3	27.9	37.2	20.9	0.0	14.0	27.9	58.1
	국제기구	9	11.1	0.0	11.1	22.2	44.4	11.1	0.0	22.2	22.2	55.6
	시민단체	22	0.0	4.5	22.7	36.4	31.8	0.0	4.5	27.3	36.4	36.4
	민간기관	18	0.0	5.6	27.8	5.6	38.9	16.7	5.6	33.3	5.6	61.1
	기타	5	0.0	0.0	60.0	0.0	20.0	20.0	0.0	60.0	0.0	40.0
종사 분야	교육	33	0.0	0.0	18.2	12.1	45.5	24.2	0.0	18.2	12.1	69.7
	보건의료	20	0.0	0.0	15.0	30.0	35.0	20.0	0.0	15.0	30.0	55.0
	공공행정·거버넌스	50	4.0	8.0	22.0	20.0	30.0	12.0	4.0	34.0	20.0	46.0
	농촌개발	21	0.0	4.8	9.5	28.6	28.6	23.8	4.8	14.3	28.6	57.1
	교통인프라	6	0.0	16.7	0.0	33.3	33.3	16.7	0.0	16.7	33.3	50.0
	정보통신·IT기술	14	7.1	0.0	14.3	21.4	28.6	21.4	7.1	21.4	21.4	57.1
	과학기술	11	0.0	0.0	36.4	18.2	36.4	0.0	9.1	36.4	18.2	45.5
	환경·기후변화	17	0.0	5.9	5.9	35.3	29.4	23.5	0.0	11.8	35.3	52.9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0.0	9.1	9.1	72.7	9.1	0.0	0.0	18.2	72.7	9.1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1.8	7.1	17.9	30.4	28.6	12.5	1.8	26.8	30.4	42.9
기타	10	0.0	20.0	40.0	10.0	20.0	0.0	10.0	60.0	10.0	30.0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0.0	7.7	9.6	28.8	25.0	25.0	3.8	17.3	28.8	53.8
	5년 미만	41	2.4	4.9	22.0	22.0	26.8	19.5	2.4	29.3	22.0	48.8
	10년 미만	77	2.6	3.9	18.2	23.4	36.4	13.0	2.6	24.7	23.4	51.9
	15년 미만	32	0.0	9.4	15.6	34.4	34.4	6.3	0.0	25.0	34.4	40.6
	20년 미만	17	5.9	0.0	5.9	35.3	47.1	0.0	5.9	11.8	35.3	52.9
	20년 이상	31	0.0	6.5	32.3	22.6	19.4	16.1	3.2	38.7	22.6	38.7
성별	남성	162	1.9	6.2	17.9	24.7	32.1	13.6	3.7	25.9	24.7	49.4
	여성	88	1.1	4.5	17.0	29.5	28.4	18.2	1.1	22.7	29.5	47.7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0.0	6.8	15.9	20.5	20.5	31.8	4.5	22.7	20.5	56.8
	석사 졸업	85	1.2	3.5	16.5	28.2	36.5	10.6	3.5	21.2	28.2	50.6
	박사 졸업	121	2.5	6.6	19.0	27.3	30.6	12.4	1.7	28.1	27.3	44.6

5. ODA 정책 및 전반적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

1) 정부 ODA 정책과 관련 활동의 신뢰

| 그림 3-27 | 정부의 ODA 정책과 관련 활동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만족도



Q. 정부의 ODA 정책과 관련 활동을 신뢰한다.

- 정부의 ODA 정책과 관련 활동을 신뢰하는지 질문한 결과, 전문가의 52.4%가 '긍정'(매우 그렇다 4.4% + 상당히 그렇다 15.2% + 약간 그렇다 32.8%)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9.6%가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 0.4% + 거의 그렇지 않다 3.6% + 별로 그렇지 않다 15.6%)이라고 응답하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의 전문가 집단 중 71.1%가 정부의 ODA 정책과 관련 활동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민간부문의 '긍정' 응답 비율은 40%로 나타났다. '부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공부문이 9.3%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연구부문은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소속기관 세분 유형별 조사에서도 드러나는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긍정' 응답이 60%를 뛰어넘은 반면(정부부처 80%, 공공기관 60.5%), 학계와 국책연구원, 시민단체, 민간기관의 '긍정' 응답은 모두 50% 이하(학계 45.9%, 국책연구원 36.2%, 시민단체 31.8%, 민간기관 50%)로 조사되었다.

종사 기간별로 살펴보면, 3년 미만 전문가 집단의 긍정 비율이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년 이상 전문가 집단의 긍정 비율은 38.7%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정부의 ODA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오래 종사한 전문가일수록 상대적으로 짧게 종사한 전문가와 비교하여 저조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15년 미만 전문가 집단의 62.5%가 정부의 ODA 정책과 관련 활동을 신뢰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년 이상 전문가 집단의 38.7%가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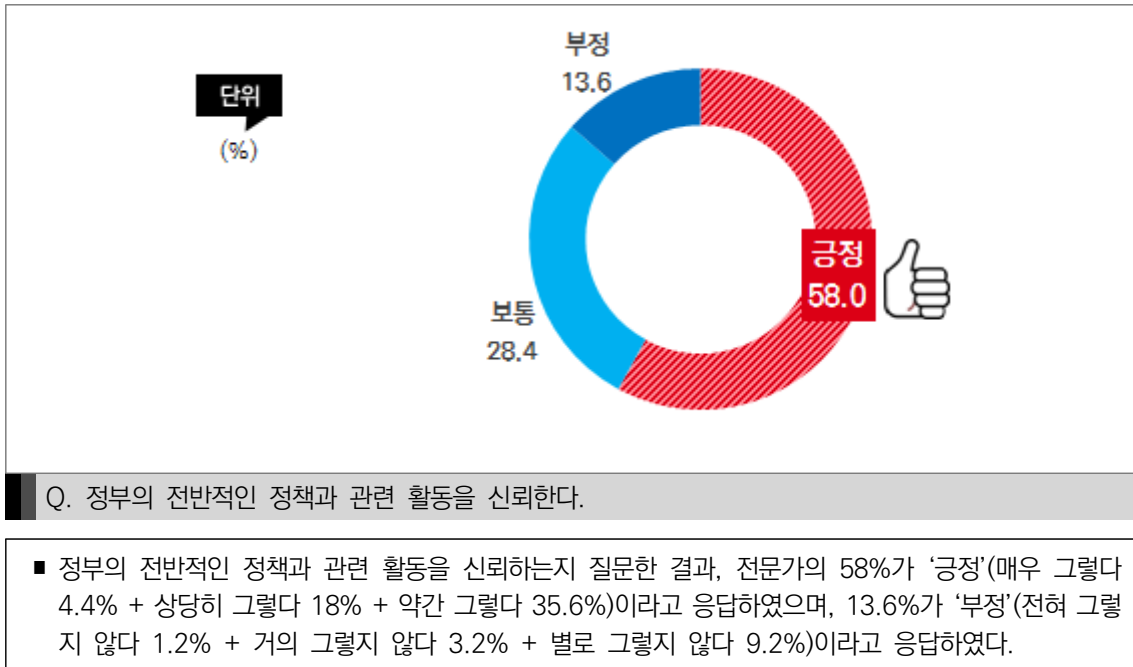
| 표 3-33 | 응답자 특성별 정부의 ODA 정책과 관련 활동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점)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다소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전체	250	0.4	3.6	15.6	28.0	32.8	15.2	4.4	19.6	28.0	52.4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0.9	8.3	20.4	28.7	33.3	7.4	0.9	29.6	28.7	41.7
	공공부문	97	0.0	0.0	9.3	19.6	38.1	23.7	9.3	9.3	19.6	71.1
	민간부문	40	0.0	0.0	20.0	40.0	20.0	17.5	2.5	20.0	40.0	40.0
	기타	5	0.0	0.0	0.0	80.0	20.0	0.0	0.0	0.0	80.0	20.0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1.6	6.6	19.7	26.2	36.1	9.8	0.0	27.9	26.2	45.9
	국책연구원	47	0.0	10.6	21.3	31.9	29.8	4.3	2.1	31.9	31.9	36.2
	정부부처	45	0.0	0.0	4.4	15.6	40.0	26.7	13.3	4.4	15.6	80.0
	공공기관	43	0.0	0.0	14.0	25.6	32.6	20.9	7.0	14.0	25.6	60.5
	국제기구	9	0.0	0.0	11.1	11.1	55.6	22.2	0.0	11.1	11.1	77.8
	시민단체	22	0.0	0.0	18.2	50.0	18.2	13.6	0.0	18.2	50.0	31.8
	민간기관	18	0.0	0.0	22.2	27.8	22.2	22.2	5.6	22.2	27.8	50.0
	기타	5	0.0	0.0	0.0	80.0	20.0	0.0	0.0	0.0	80.0	20.0
종사 분야	교육	33	0.0	3.0	21.2	18.2	33.3	18.2	6.1	24.2	18.2	57.6
	보건의료	20	0.0	0.0	20.0	25.0	35.0	20.0	0.0	20.0	25.0	55.0
	공공행정·거버넌스	50	0.0	4.0	12.0	32.0	30.0	14.0	8.0	16.0	32.0	52.0
	농촌개발	21	4.8	0.0	19.0	14.3	42.9	14.3	4.8	23.8	14.3	61.9
	교통인프라	6	0.0	0.0	33.3	16.7	50.0	0.0	0.0	33.3	16.7	50.0
	정보통신·IT기술	14	0.0	7.1	7.1	21.4	35.7	21.4	7.1	14.3	21.4	64.3
	과학기술	11	0.0	0.0	9.1	36.4	45.5	0.0	9.1	9.1	36.4	54.5
	환경·기후변화	17	0.0	0.0	5.9	23.5	29.4	35.3	5.9	5.9	23.5	70.6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0.0	0.0	18.2	63.6	9.1	9.1	0.0	18.2	63.6	18.2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0.0	7.1	17.9	26.8	35.7	12.5	0.0	25.0	26.8	48.2
기타	10	0.0	10.0	10.0	50.0	10.0	10.0	10.0	20.0	50.0	30.0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0.0	0.0	11.5	28.8	32.7	21.2	5.8	11.5	28.8	59.6
	5년 미만	41	0.0	4.9	19.5	26.8	26.8	17.1	4.9	24.4	26.8	48.8
	10년 미만	77	1.3	5.2	16.9	24.7	29.9	18.2	3.9	23.4	24.7	51.9
	15년 미만	32	0.0	3.1	6.3	28.1	50.0	6.3	6.3	9.4	28.1	62.5
	20년 미만	17	0.0	5.9	5.9	41.2	41.2	5.9	0.0	11.8	41.2	47.1
	20년 이상	31	0.0	3.2	29.0	29.0	25.8	9.7	3.2	32.3	29.0	38.7
성별	남성	162	0.6	4.3	17.9	22.8	33.3	15.4	5.6	22.8	22.8	54.3
	여성	88	0.0	2.3	11.4	37.5	31.8	14.8	2.3	13.6	37.5	48.9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0.0	0.0	9.1	31.8	25.0	29.5	4.5	9.1	31.8	59.1
	석사 졸업	85	0.0	0.0	14.1	31.8	35.3	12.9	5.9	14.1	31.8	54.1
	박사 졸업	121	0.8	7.4	19.0	24.0	33.9	11.6	3.3	27.3	24.0	48.8

2)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 활동의 신뢰

| 그림 3-28 |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 활동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의견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 활동을 신뢰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 58%, 부정 13.6%로 조사되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의 전문가 집단 중 73.2%가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 활동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연구부문의 '긍정' 응답 비율은 45.4%로 나타났다. '부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공부문이 7.2%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연구부문은 2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사 분야별로 살펴보면, '긍정' 응답 비율은 정보통신·IT 기술 분야에서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평등·취약·인권보호 분야에서 4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난민지원·긴급구호 분야는 '만족' 응답 비율이 0%지만 모집단이 1명이므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논하기 어려움). '부정' 응답 비율은 교통인프라 분야가 33.3%로 조사되었으며, 보건의료 분야는 0%로 나타났다.

| 표 3-34 | 응답자 특성별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 활동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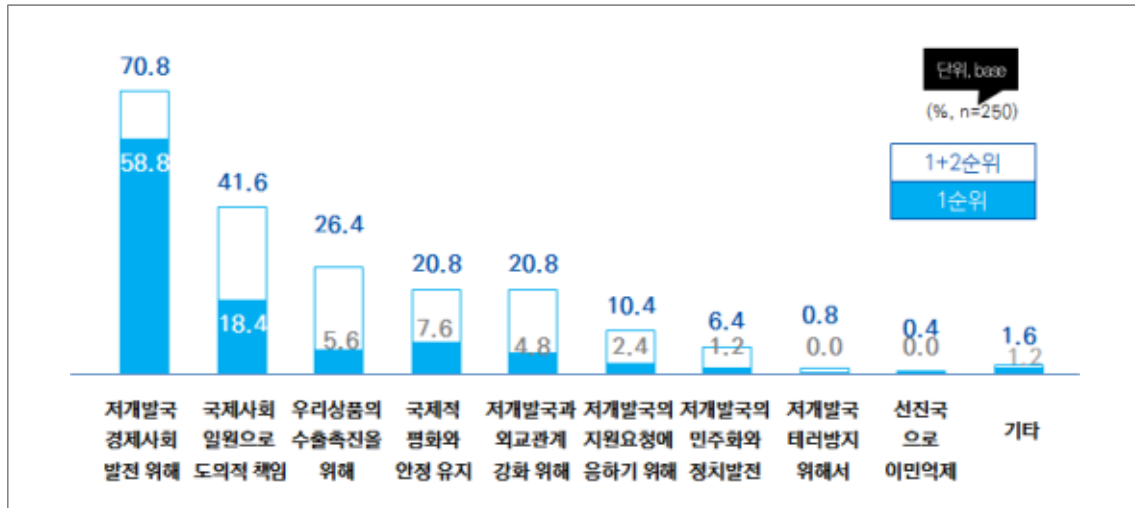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다소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보통	긍정	
전체	250	1.2	3.2	9.2	28.4	35.6	18.0	4.4	13.6	28.4	58.0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2.8	6.5	12.0	33.3	32.4	11.1	1.9	21.3	33.3	45.4
	공공부문	97	0.0	1.0	6.2	19.6	37.1	27.8	8.2	7.2	19.6	73.2
	민간부문	40	0.0	0.0	10.0	37.5	35.0	15.0	2.5	10.0	37.5	52.5
	기타	5	0.0	0.0	0.0	20.0	80.0	0.0	0.0	0.0	20.0	80.0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3.3	6.6	11.5	32.8	31.1	13.1	1.6	21.3	32.8	45.9
	국책연구원	47	2.1	6.4	12.8	34.0	34.0	8.5	2.1	21.3	34.0	44.7
	정부부처	45	0.0	0.0	4.4	15.6	37.8	26.7	15.6	4.4	15.6	80.0
	공공기관	43	0.0	2.3	9.3	27.9	27.9	30.2	2.3	11.6	27.9	60.5
	국제기구	9	0.0	0.0	0.0	0.0	77.8	22.2	0.0	0.0	0.0	100.0
	시민단체	22	0.0	0.0	9.1	50.0	31.8	9.1	0.0	9.1	50.0	40.9
	민간기관	18	0.0	0.0	11.1	22.2	38.9	22.2	5.6	11.1	22.2	66.7
	기타	5	0.0	0.0	0.0	20.0	80.0	0.0	0.0	0.0	20.0	80.0
종사 분야	교육	33	0.0	3.0	6.1	30.3	36.4	18.2	6.1	9.1	30.3	60.6
	보건의료	20	0.0	0.0	0.0	45.0	25.0	30.0	0.0	0.0	45.0	55.0
	공공행정·거버넌스	50	2.0	6.0	8.0	24.0	34.0	18.0	8.0	16.0	24.0	60.0
	농촌개발	21	4.8	0.0	9.5	19.0	38.1	19.0	9.5	14.3	19.0	66.7
	교통인프라	6	0.0	0.0	33.3	16.7	50.0	0.0	0.0	33.3	16.7	50.0
	정보통신·IT기술	14	0.0	0.0	7.1	21.4	50.0	21.4	0.0	7.1	21.4	71.4
	과학기술	11	0.0	0.0	9.1	36.4	36.4	9.1	9.1	9.1	36.4	54.5
	환경·기후변화	17	5.9	0.0	0.0	29.4	23.5	35.3	5.9	5.9	29.4	64.7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0.0	0.0	9.1	45.5	36.4	9.1	0.0	9.1	45.5	45.5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0.0	7.1	14.3	25.0	39.3	14.3	0.0	21.4	25.0	53.6
기타	10	0.0	0.0	20.0	30.0	30.0	10.0	10.0	20.0	30.0	50.0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0.0	1.9	3.8	28.8	28.8	28.8	7.7	5.8	28.8	65.4
	5년 미만	41	0.0	2.4	9.8	36.6	26.8	19.5	4.9	12.2	36.6	51.2
	10년 미만	77	2.6	5.2	10.4	24.7	35.1	19.5	2.6	18.2	24.7	57.1
	15년 미만	32	3.1	3.1	6.3	25.0	46.9	12.5	3.1	12.5	25.0	62.5
	20년 미만	17	0.0	5.9	5.9	41.2	41.2	0.0	5.9	11.8	41.2	47.1
	20년 이상	31	0.0	0.0	19.4	22.6	45.2	9.7	3.2	19.4	22.6	58.1
성별	남성	162	1.9	3.7	9.3	28.4	32.7	17.9	6.2	14.8	28.4	56.8
	여성	88	0.0	2.3	9.1	28.4	40.9	18.2	1.1	11.4	28.4	60.2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0.0	2.3	2.3	31.8	31.8	27.3	4.5	4.5	31.8	63.6
	석사 졸업	85	0.0	1.2	7.1	29.4	41.2	16.5	4.7	8.2	29.4	62.4
	박사 졸업	121	2.5	5.0	13.2	26.4	33.1	15.7	4.1	20.7	26.4	52.9

6. 국제개발협력 일반적 사안에 대한 전문가 인식

1) 공적개발원조가 필요한 이유

| 그림 3-29 | 공적개발원조가 필요한 이유



Q. 우리 정부는 저개발국에 대한 다양한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 나라에 원조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주세요.

우리 정부가 저개발국에 대해 다양한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1+2 순위로 가장 많이 뽑힌 응답은 ‘저개발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70.8%), ‘국제사회일원으로 도의적 책임’(41.6%), ‘우리상품의 수출촉진을 위해’(26.4%)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상위 3가지 이유 순은 변동이 없었으나, 비율로는 ‘저개발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가 2.5%p, ‘우리상품의 수출촉진을 위해’가 2.9%p 하락(전년도 ‘저개발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73.3%, ‘우리상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29.3%)한 반면, ‘국제사회일원으로 도의적 책임’이 4.2%p 상승(전년도 ‘국제사회일원으로 도의적 책임’ 37.4%)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제사회일원으로 도의적 책임’(60%)에 대한 응답률이 타 분야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통신·IT기술 분야에서는 ‘우리상품의 수출촉진을 위해’(50%)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성평등·취약·인권보호 분야는 ‘국제적 평화와 안정 유지’(45.5%)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종사 기간별로 살펴볼 때 주목할 만한 점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오래 종사한 전문가일 수록 ‘저개발국 경제사회 발전 위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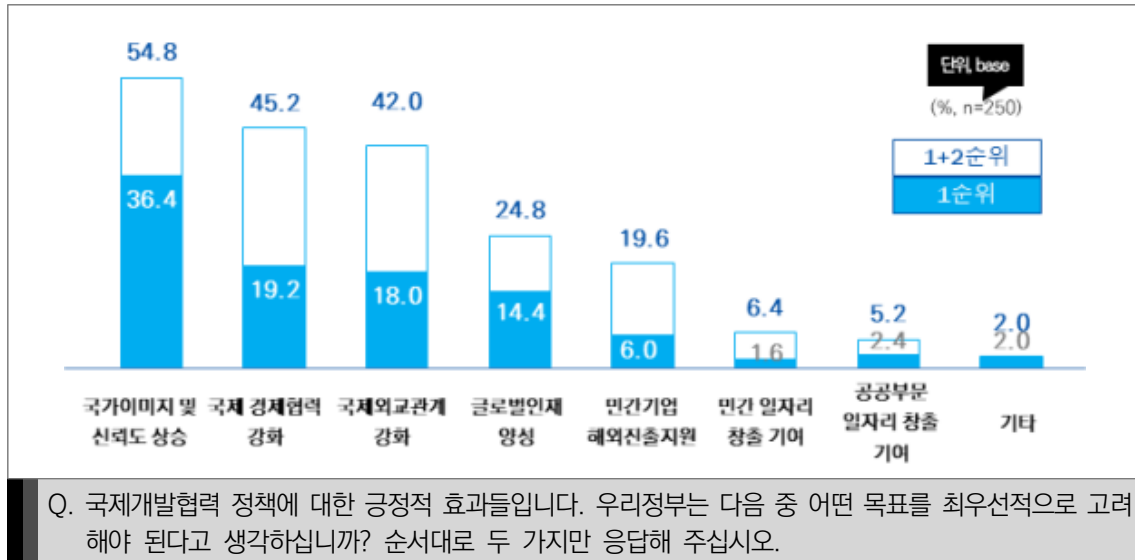
| 표 3-35 | 응답자 특성별 공적개발원조가 필요한 이유 [복수응답 기준]

(단위: 명, %)

구분		(명)	저개발국 경제사회 발전위해	국제사회 일원으로 도약적 책임	우리상품 수출촉진 위해	국제적 평화와 안정유지	저개발국 외교관계 강화위해	저개발국 지원요청 응하기 위해	저개발국 민주화와 정치발전	저개발국 테러방지 위해	선진국 으로의 이민억제	기타
2017		270	73.3	37.4	29.3	21.5	17.4	7.8	9.6	0.4	0.0	3.3
2018		250	70.8	41.6	26.4	20.8	20.8	10.4	6.4	0.8	0.4	1.6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69.4	49.1	24.1	17.6	21.3	10.2	6.5	0.0	0.0	1.9
	공공부문	97	71.1	35.1	30.9	22.7	23.7	9.3	3.1	2.1	1.0	1.0
	민간부문	40	72.5	40.0	22.5	25.0	12.5	12.5	12.5	0.0	0.0	2.5
	기타	5	80.0	20.0	20.0	20.0	20.0	20	20.0	0.0	0.0	0.0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77.0	45.9	24.6	19.7	13.1	14.8	4.9	0.0	0.0	0.0
	국책연구원	47	59.6	53.2	23.4	14.9	31.9	4.3	8.5	0.0	0.0	4.3
	정부부처	45	71.1	33.3	35.6	20.0	24.4	8.9	4.4	2.2	0.0	0.0
	공공기관	43	74.4	34.9	30.2	16.3	23.3	11.6	2.3	2.3	2.3	2.3
	국제기구	9	55.6	44.4	11.1	66.7	22.2	0.0	0.0	0.0	0.0	0.0
	시민단체	22	68.2	40.9	9.1	45.5	9.1	9.1	18.2	0.0	0.0	0.0
	민간기관	18	77.8	38.9	38.9	0.0	16.7	16.7	5.6	0.0	0.0	5.6
	기타	5	80.0	20.0	20.0	20.0	20.0	20	20.0	0.0	0.0	0.0
종사 분야	교육	33	72.7	48.5	18.2	27.3	15.2	9.1	9.1	0.0	0.0	0.0
	보건의료	20	60.0	60.0	5.0	15.0	20.0	25	5.0	5.0	0.0	5.0
	공공행정·거버넌스	50	72.0	36.0	36.0	14.0	22.0	14	4.0	0.0	2.0	0.0
	농촌개발	21	85.7	33.3	33.3	0.0	33.3	9.5	4.8	0.0	0.0	0.0
	교통인프라	6	50.0	33.3	50.0	16.7	16.7	33.3	0.0	0.0	0.0	0.0
	정보통신·IT기술	14	78.6	35.7	50.0	7.1	21.4	7.1	0.0	0.0	0.0	0.0
	과학기술	11	72.7	54.5	36.4	27.3	0.0	0.0	0.0	0.0	0.0	9.1
	환경·기후변화	17	64.7	52.9	23.5	29.4	17.6	11.8	0.0	0.0	0.0	0.0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63.6	45.5	0.0	45.5	18.2	0.0	18.2	9.1	0.0	0.0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0.0	100.0	0.0	0.0	100.0	0.0	0.0	0.0
	개발협력사업일반	56	73.2	39.3	25.0	26.8	21.4	5.4	5.4	0.0	0.0	3.6
기타	10	60.0	20.0	20.0	20.0	40.0	10	30.0	0.0	0.0	0.0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51.9	44.2	38.5	19.2	21.2	13.5	7.7	0.0	1.9	1.9
	5년 미만	41	68.3	46.3	14.6	19.5	26.8	12.2	9.8	2.4	0.0	0.0
	10년 미만	77	72.7	42.9	24.7	20.8	24.7	9.1	2.6	1.3	0.0	1.3
	15년 미만	32	75.0	21.9	40.6	12.5	21.9	18.8	6.3	0.0	0.0	3.1
	20년 미만	17	70.6	47.1	17.6	35.3	5.9	0.0	17.6	0.0	0.0	5.9
	20년 이상	31	96.8	45.2	16.1	25.8	9.7	3.2	3.2	0.0	0.0	0.0
성별	남성	162	70.4	37.0	32.1	17.9	19.8	13	5.6	1.2	0.6	2.5
	여성	88	71.6	50.0	15.9	26.1	22.7	5.7	8.0	0.0	0.0	0.0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72.7	29.5	31.8	27.3	18.2	11.4	6.8	0.0	2.3	0.0
	석사 졸업	85	61.2	49.4	25.9	24.7	22.4	8.2	3.5	2.4	0.0	2.4
	박사 졸업	121	76.9	40.5	24.8	15.7	20.7	11.6	8.3	0.0	0.0	1.7

2)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최우선 고려 목표

| 그림 3-30 |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최우선 고려 목표



우리 정부가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긍정적 효과 중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목표에 대한 1+2순위로 가장 많이 뽑힌 응답은 ‘국가이미지 및 신뢰도 상승’(54.8%), ‘국제 경제협력 강화’(45.2%), ‘국제외교관계 강화’(4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서는 1순위 기준으로 응답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글로벌인재 양성’ 응답이 1+2순위(24.8%)보다 1순위(14.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가이미지 및 신뢰도 상승’이라는 응답에 대하여 공공부문 전문가들이 58.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부문 전문가들은 45%가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그 격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부문 전문가들은 타 부문 전문가들에 비해 ‘국제외교관계 강화’(45%), ‘글로벌인재 양성’(37.5%)이라는 목표에 대해 공공부문과 연구부문 전문가보다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종사 기간별로 살펴보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짧게 종사할수록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이라는 목표를 상대적으로 더욱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3년 미만 23.1%, 5년 미만 22%, 20년 미만 11.8%, 20년 이상 12.9%).

| 표 3-36 | 응답자 특성별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최우선 고려 목표 [복수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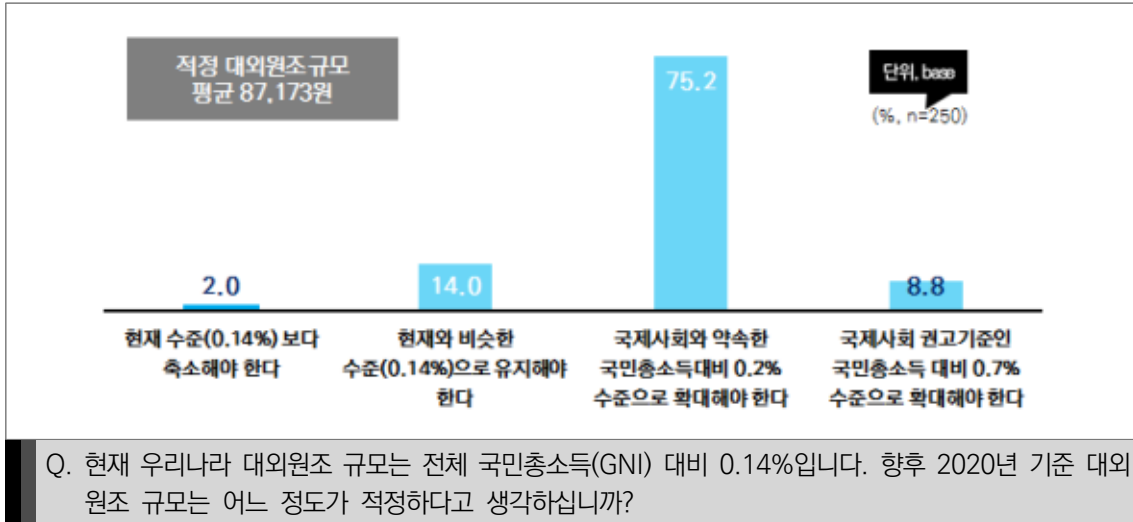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명)	국가이미지 및 신뢰도상승	국제경제 협력 강화	국제외교 관계 강화	글로벌인재 양성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민간일자리 창출 기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기여	기타
2017		270	55.6	39.3	37.8	32.6	17.0	11.5	5.6	0.7
2018		250	54.8	45.2	42.0	24.8	19.6	6.4	5.2	2.0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55.6	47.2	41.7	26.9	15.7	6.5	5.6	0.9
	공공부문	97	58.8	47.4	41.2	16.5	25.8	6.2	3.1	1.0
	민간부문	40	45.0	35.0	45.0	37.5	12.5	7.5	10.0	7.5
	기타	5	40.0	40.0	40.0	40.0	40.0	0.0	0.0	0.0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55.7	50.8	37.7	31.1	9.8	8.2	4.9	1.6
	국책연구원	47	55.3	42.6	46.8	21.3	23.4	4.3	6.4	0.0
	정부부처	45	62.2	40.0	44.4	17.8	26.7	6.7	0.0	2.2
	공공기관	43	53.5	58.1	41.9	9.3	25.6	4.7	7.0	0.0
	국제기구	9	66.7	33.3	22.2	44.4	22.2	11.1	0.0	0.0
	시민단체	22	40.9	31.8	54.5	31.8	9.1	9.1	13.6	9.1
	민간기관	18	50.0	38.9	33.3	44.4	16.7	5.6	5.6	5.6
	기타	5	40.0	40.0	40.0	40.0	40.0	0.0	0.0	0.0
종사 분야	교육	33	33.3	54.5	42.4	39.4	9.1	9.1	12.1	0.0
	보건의료	20	45.0	45.0	45.0	40.0	10.0	0.0	10.0	5.0
	공공행정·거버넌스	50	62.0	44.0	42.0	8.0	32.0	6.0	4.0	2.0
	농촌개발	21	57.1	57.1	33.3	28.6	19.0	4.8	0.0	0.0
	교통인프라	6	50.0	33.3	33.3	33.3	33.3	16.7	0.0	0.0
	정보통신·IT기술	14	50.0	50.0	28.6	21.4	35.7	14.3	0.0	0.0
	과학기술	11	54.5	27.3	36.4	27.3	36.4	18.2	0.0	0.0
	환경·기후변화	17	47.1	52.9	52.9	17.6	23.5	0.0	0.0	5.9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72.7	27.3	27.3	45.5	9.1	9.1	9.1	0.0
	난민지원·긴급구호	1	100.0	0.0	0.0	100.0	0.0	0.0	0.0	0.0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62.5	44.6	42.9	19.6	14.3	5.4	7.1	3.6
	기타	10	60.0	30.0	80.0	30.0	0.0	0.0	0.0	0.0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57.7	36.5	46.2	17.3	23.1	11.5	7.7	0.0
	5년 미만	41	61.0	43.9	41.5	14.6	22.0	4.9	9.8	2.4
	10년 미만	77	46.8	44.2	49.4	28.6	20.8	3.9	3.9	2.6
	15년 미만	32	46.9	56.3	37.5	25.0	18.8	9.4	3.1	3.1
	20년 미만	17	58.8	52.9	23.5	47.1	11.8	0.0	0.0	5.9
	20년 이상	31	67.7	48.4	32.3	29.0	12.9	6.5	3.2	0.0
성별	남성	162	58.0	45.7	34.6	23.5	24.7	6.2	4.3	3.1
	여성	88	48.9	44.3	55.7	27.3	10.2	6.8	6.8	0.0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52.3	34.1	52.3	25.0	18.2	9.1	9.1	0.0
	석사 졸업	85	51.8	51.8	43.5	17.6	24.7	3.5	3.5	3.5
	박사 졸업	121	57.9	44.6	37.2	29.8	16.5	7.4	5.0	1.7

3)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적정 규모

가. 공적개발원조의 향후 적정 규모

| 그림 3-31 | 공적개발원조의 향후 적정 규모



향후 2020년 기준 대외원조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제사회와 약속한 국민총소득대비 0.2%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75.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와 비슷한 수준(0.14%)으로 유지해야 한다’(14%), ‘국제사회 권고기준인 국민총소득 대비 0.7%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8.8%), ‘현재 수준(0.14%)보다 축소해야 한다’(2%)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제사회와 약속한 국민총소득 대비 0.2%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가 민간부문(80%)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국제사회 권고기준인 국민총소득 대비 0.7%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공공부문(10.3%)에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종사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제사회 권고기준인 국민총소득 대비 0.7%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교통인프라(33.3%) 및 환경·기후변화(33.3%) 분야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현재와 비슷한 수준(0.14%)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과학기술(36.4%) 분야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국민 1인당 적정금액에 대해 주관식으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평균 87,173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었다. 2017년 ODA예산이 GNI 대비 0.14%로서 1인당 약 5만원 정도였는데 반해 전문가들은 조금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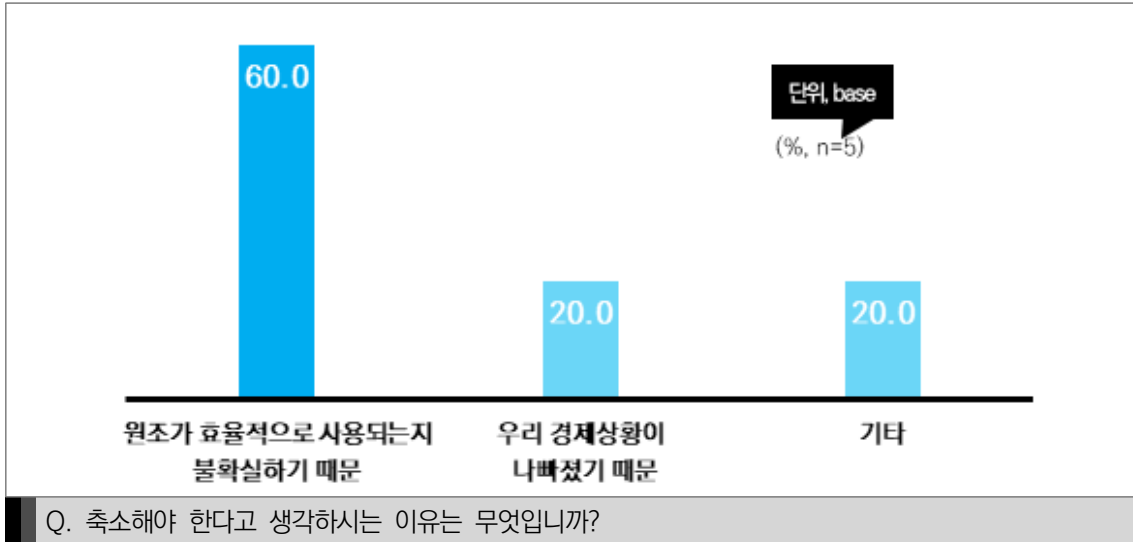
| 표 3-37 | 응답자 특성별 공적개발원조의 향후 적정 규모

(단위: 명, %)

구분		(명)	현재 수준(0.14%) 보다 축소해야 한다	현재와 비슷한 수준(0.14%) 으로 유지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국민총소득대비 0.2%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국제사회 권고기준인 국민총소득 대비 0.7%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적절 대외원조 규모 (평균)
전체		250	2.0	14.0	75.2	8.8	87,173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2.8	12.0	75.9	9.3	87,946
	공공부문	97	2.1	14.4	73.2	10.3	90,825
	민간부문	40	0.0	15.0	80.0	5.0	77,563
	기타	5	0.0	40.0	60.0	0.0	76,500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1.6	13.1	75.4	9.8	92,672
	국책연구원	47	4.3	10.6	76.6	8.5	81,813
	정부부처	45	2.2	20.0	73.3	4.4	72,944
	공공기관	43	2.3	11.6	74.4	11.6	101,395
	국제기구	9	0.0	0.0	66.7	33.3	129,722
	시민단체	22	0.0	9.1	90.9	0.0	71,136
	민간기관	18	0.0	22.2	66.7	11.1	85,417
	기타	5	0.0	40.0	60.0	0.0	76,500
종사 분야	교육	33	0.0	15.2	81.8	3.0	90,152
	보건의료	20	5.0	5.0	80.0	10.0	87,500
	공공행정·거버넌스	50	2.0	22.0	70.0	6.0	82,654
	농촌개발	21	0.0	9.5	81.0	9.5	97,857
	교통인프라	6	0.0	0.0	66.7	33.3	120,417
	정보통신·IT기술	14	0.0	21.4	78.6	0.0	69,464
	과학기술	11	0.0	36.4	63.6	0.0	64,091
	환경·기후변화	17	0.0	11.8	52.9	35.3	129,559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0.0	18.2	72.7	9.1	70,682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100.0	0.0	63,000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5.4	7.1	78.6	8.9	83,438
기타	10	0.0	10.0	90.0	0.0	76,500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0.0	23.1	69.2	7.7	89,952
	5년 미만	41	2.4	12.2	85.4	0.0	69,456
	10년 미만	77	2.6	13.0	74.0	10.4	89,870
	15년 미만	32	6.3	15.6	59.4	18.8	101,328
	20년 미만	17	0.0	11.8	82.4	5.9	80,618
	20년 이상	31	0.0	3.2	87.1	9.7	88,226
성별	남성	162	2.5	11.7	74.7	11.1	94,895
	여성	88	1.1	18.2	76.1	4.5	72,957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2.3	22.7	68.2	6.8	92,557
	석사 졸업	85	1.2	10.6	75.3	12.9	87,706
	박사 졸업	121	2.5	13.2	77.7	6.6	84,840

나. 공적개발원조의 축소 의향 이유

| 그림 3-32 | 공적개발원조의 축소 의향 이유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 ‘원조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불확실하기 때문’(6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 경제상황이 나빠졌기 때문’(20%), ‘기타 이유’(20%)가 그 다음을 이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문가들 중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인원이 총 5명이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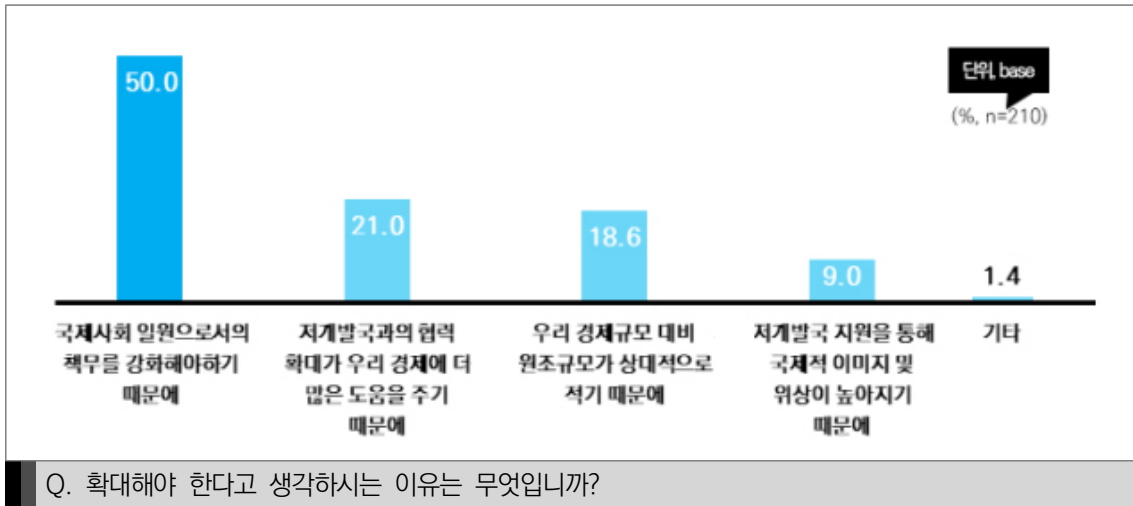
| 표 3-38 | 응답자 특성별 공적개발원조를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명)	원조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불확실하기 때문	우리 경제상황이 나빠졌기 때문	기타
전체		5	60.0	20.0	20.0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3	66.7	0.0	33.3
	공공부문	2	50.0	50.0	0.0
	민간부문	0	0.0	0.0	0.0
	기타	0	0.0	0.0	0.0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1	0.0	0.0	100.0
	국책연구원	2	100.0	0.0	0.0
	정부부처	1	0.0	100.0	0.0
	공공기관	1	100.0	0.0	0.0
	국제기구	0	0.0	0.0	0.0
	시민단체	0	0.0	0.0	0.0
	민간기관	0	0.0	0.0	0.0
	기타	0	0.0	0.0	0.0
종사 분야	교육	0	0.0	0.0	0.0
	보건의료	1	100.0	0.0	0.0
	공공행정·거버넌스	1	100.0	0.0	0.0
	농촌개발	0	0.0	0.0	0.0
	교통인프라	0	0.0	0.0	0.0
	정보통신·IT기술	0	0.0	0.0	0.0
	과학기술	0	0.0	0.0	0.0
	환경·기후변화	0	0.0	0.0	0.0
	성평등·취약·인권보호	0	0.0	0.0	0.0
	난민지원·긴급구호	0	0.0	0.0	0.0
	개발협력사업 일반	3	33.3	33.3	33.3
	기타	0	0.0	0.0	0.0
	종사 기간	3년 미만	0	0.0	0.0
5년 미만		1	100.0	0.0	0.0
10년 미만		2	100.0	0.0	0.0
15년 미만		2	0.0	50.0	50.0
20년 미만		0	0.0	0.0	0.0
20년 이상		0	0.0	0.0	0.0
성별	남성	4	75.0	0.0	25.0
	여성	1	0.0	100.0	0.0
최종 학력	대졸 이하	1	0.0	100.0	0.0
	석사 졸업	1	100.0	0.0	0.0
	박사 졸업	3	66.7	0.0	33.3

다. 공적개발원조의 확대 의향 이유

| 그림 3-33 | 공적개발원조의 확대 의향 이유



공적개발원조의 확대 의향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5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개발국과의 협력 확대가 우리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21%), ‘우리 경제규모 대비 원조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18.6%), ‘저개발국 지원을 통해 국제적 이미지 및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9%)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는 5%p 상승했으며(전년도 45%), ‘저개발국과의 협력 확대가 우리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는 6.7%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전년도 27.7%). 한편 소속기관 세분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는 국제기구(77.8%)가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저개발국과의 협력 확대가 우리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는 민간기관(35.7%)이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종사 기간별로 살펴보면, ‘저개발국과의 협력 확대가 우리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는 15년 미만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 집단(36%)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으며, ‘저개발국 지원을 통해 국제적 이미지 및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는 5년 미만 종사 전문가 집단(17.1%)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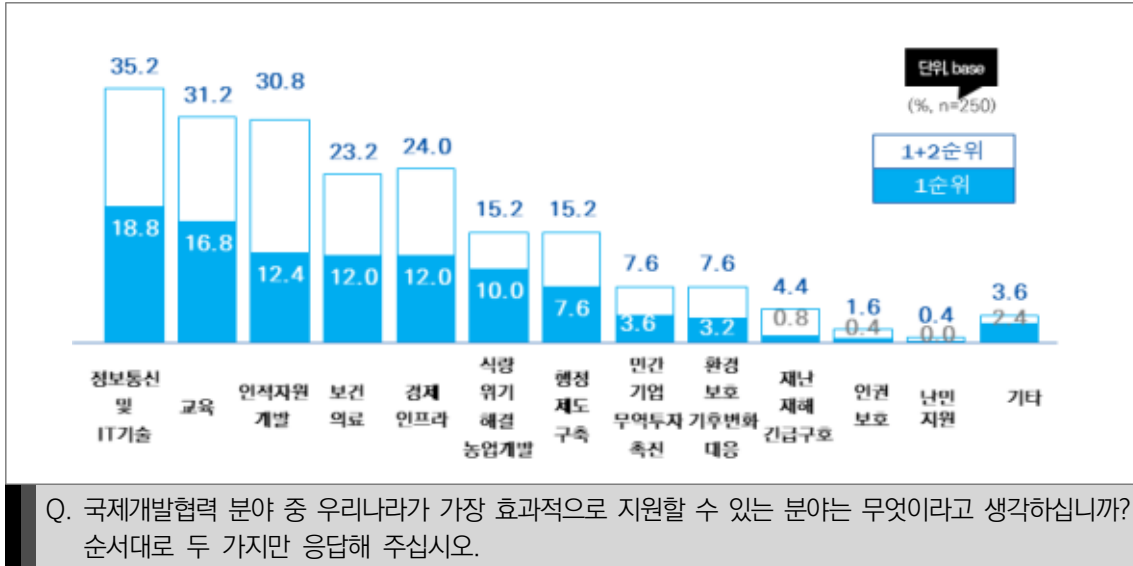
| 표 3-39 | 응답자 특성별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명)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해야하기 때문에	저개발국과의 협력 확대가 우리 경제에 더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 경제규모 대비 원조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개발국 지원을 통해 국제적 이미지 및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타
2017		231	45.0	27.7	18.2	8.2	0.9
2018		210	50.0	21.0	18.6	9.0	1.4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92	52.2	18.5	18.5	9.8	1.1
	공공부문	81	49.4	23.5	17.3	9.9	0.0
	민간부문	34	47.1	20.6	23.5	2.9	5.9
	기타	3	33.3	33.3	0.0	33.3	0.0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52	53.8	15.4	21.2	9.6	0.0
	국책연구원	40	50.0	22.5	15.0	10.0	2.5
	정부부처	35	54.3	17.1	20.0	8.6	0.0
	공공기관	37	37.8	32.4	18.9	10.8	0.0
	국제기구	9	77.8	11.1	0.0	11.1	0.0
	시민단체	20	55.0	10.0	25.0	0.0	10.0
	민간기관	14	35.7	35.7	21.4	7.1	0.0
	기타	3	33.3	33.3	0.0	33.3	0.0
종사 분야	교육	28	67.9	10.7	14.3	3.6	3.6
	보건의료	18	66.7	0.0	27.8	5.6	0.0
	공공행정·거버넌스	38	44.7	13.2	23.7	18.4	0.0
	농촌개발	19	31.6	52.6	10.5	5.3	0.0
	교통인프라	6	33.3	66.7	0.0	0.0	0.0
	정보통신·IT기술	11	18.2	36.4	27.3	9.1	9.1
	과학기술	7	57.1	28.6	14.3	0.0	0.0
	환경·기후변화	15	40.0	26.7	26.7	6.7	0.0
	성평등·취약·인권보호	9	66.7	0.0	11.1	11.1	11.1
	난민지원·긴급구호	1	100.0	0.0	0.0	0.0	0.0
	개발협력사업 일반	49	53.1	22.4	16.3	8.2	0.0
	기타	9	44.4	11.1	22.2	22.2	0.0
종사 기간	3년 미만	40	57.5	15.0	17.5	10.0	0.0
	5년 미만	35	51.4	17.1	14.3	17.1	0.0
	10년 미만	65	46.2	21.5	27.7	4.6	0.0
	15년 미만	25	32.0	36.0	16.0	8.0	8.0
	20년 미만	15	73.3	20.0	6.7	0.0	0.0
	20년 이상	30	50.0	20.0	13.3	13.3	3.3
성별	남성	139	45.3	21.6	18.7	12.9	1.4
	여성	71	59.2	19.7	18.3	1.4	1.4
최종 학력	대졸 이하	33	51.5	15.2	24.2	9.1	0.0
	석사 졸업	75	50.7	20.0	18.7	9.3	1.3
	박사 졸업	102	49.0	23.5	16.7	8.8	2.0

4) 공적개발원조의 최적 분야

| 그림 3-34 | 공적개발원조의 최적 분야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우리나라가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질문한 결과 1+2순위로 가장 많이 뽑힌 응답은 ‘정보통신 및 IT기술’(35.2%)이었으며, ‘교육’(31.2%), ‘인적자원 개발’(30.8%), ‘경제인프라’(24%)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 응답 기준으로만 보면 위 3가지 분야는 동일했으며(정보통신 및 IT기술 18.8%, 교육 16.8%, 인적자원 개발 12.4%), 보건의료와 경제인프라가 모두 12%로 조사되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정보통신 및 IT기술’은 4.8%p, ‘인적자원 개발’은 2.5%p 하락하였으나, ‘교육’은 4.2%p, ‘경제인프라’는 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분야 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속한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라고 응답한 경향성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교육’ 분야 종사자들은 ‘교육’을 66.7%,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들은 ‘보건의료’를 80%, ‘환경·기후변화’ 분야 종사자들은 ‘환경·기후변화’를 58.8%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사기간 별로 살펴보면, 각기 다른 종사기간을 가진 전문가 집단은 대체적으로 다양한 선호를 표출하였는데 3년 미만 종사 전문가들은 ‘정보통신 및 IT기술’(51.9%), 5년 이상 10년 미만 종사 전문가들은 ‘교육’(40.3%), 15년 이상 20년 미만 종사 전문가들은 ‘경제인프라’(35.3%)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응답하였다.

| 표 3-40 | 응답자 특성별 공적개발원조의 최적 분야 [복수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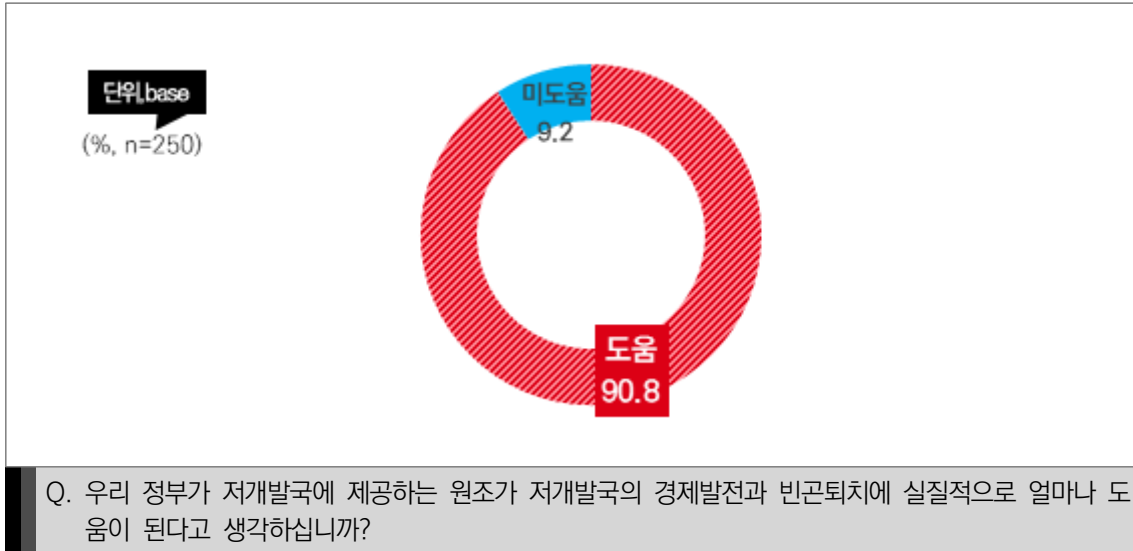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명)	정보 통신 IT 기술	교육	인적 자원 개발	경제 인프라	보건 의료	식량 위기 해결및 농업 개발	행정 제도 구축	민간 기업 발전 투자 촉진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대응	재난 재해 긴급 구호	인권 보호	난민 지원	기타
2017		270	40.0	27.0	33.3	20.0	26.7	15.6	13.3	6.7	6.3	4.4	0.0	0.0	6.7
2018		250	35.2	31.2	30.8	24.0	23.2	15.2	15.2	7.6	7.6	4.4	1.6	0.4	3.6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31.5	31.5	39.8	25.9	19.4	10.2	19.4	10.2	1.9	5.6	0.0	0.0	4.6
	공공부문	97	42.3	23.7	25.8	26.8	23.7	17.5	13.4	6.2	13.4	4.1	1.0	1.0	1.0
	민간부문	40	30.0	45.0	17.5	12.5	35.0	20.0	10.0	5.0	7.5	2.5	7.5	0.0	7.5
	기타	5	20.0	60.0	40.0	20.0	0.0	40.0	0.0	0.0	20.0	0.0	0.0	0.0	0.0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26.2	39.3	34.4	23.0	23.0	13.1	14.8	14.8	3.3	6.6	0.0	0.0	1.6
	국책연구원	47	38.3	21.3	46.8	29.8	14.9	6.4	25.5	4.3	0.0	4.3	0.0	0.0	8.5
	정부부처	45	40.0	26.7	24.4	24.4	20.0	22.2	11.1	8.9	13.3	4.4	0.0	2.2	2.2
	공공기관	43	46.5	18.6	25.6	30.2	27.9	14.0	14.0	4.7	14.0	2.3	2.3	0.0	0.0
	국제기구	9	33.3	33.3	33.3	22.2	22.2	11.1	22.2	0.0	11.1	11.1	0.0	0.0	0.0
	시민단체	22	27.3	31.8	13.6	18.2	36.4	18.2	9.1	0.0	13.6	4.5	13.6	0.0	13.6
	민간기관	18	33.3	61.1	22.2	5.6	33.3	22.2	11.1	11.1	0.0	0.0	0.0	0.0	0.0
	기타	5	20.0	60.0	40.0	20.0	0.0	40.0	0.0	0.0	20.0	0.0	0.0	0.0	0.0
종사 분야	교육	33	27.3	66.7	36.4	9.1	24.2	9.1	12.1	9.1	0.0	6.1	0.0	0.0	0.0
	보건의료	20	25.0	25.0	20.0	20.0	80.0	0.0	20.0	0.0	5.0	5.0	0.0	0.0	0.0
	공공행정·거버넌스	50	52.0	22.0	36.0	18.0	22.0	8.0	28.0	6.0	2.0	4.0	0.0	0.0	2.0
	농촌개발	21	4.8	19.0	42.9	14.3	14.3	85.7	0.0	0.0	9.5	4.8	0.0	0.0	4.8
	교통인프라	6	33.3	16.7	33.3	83.3	16.7	0.0	0.0	16.7	0.0	0.0	0.0	0.0	0.0
	정보통신·IT기술	14	85.7	28.6	35.7	14.3	0.0	7.1	21.4	7.1	0.0	0.0	0.0	0.0	0.0
	과학기술	11	27.3	27.3	36.4	18.2	0.0	18.2	18.2	9.1	9.1	0.0	0.0	0.0	36.4
	환경·기후변화	17	35.3	29.4	0.0	29.4	11.8	11.8	5.9	11.8	58.8	0.0	5.9	0.0	0.0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18.2	27.3	0.0	9.1	36.4	27.3	27.3	0.0	18.2	9.1	9.1	9.1	9.1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35.7	28.6	30.4	41.1	21.4	7.1	10.7	14.3	3.6	5.4	1.8	0.0	0.0
	기타	10	20.0	30.0	60.0	30.0	10.0	10.0	10.0	0.0	0.0	0.0	10.0	0.0	20.0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51.9	25.0	26.9	28.8	21.2	11.5	17.3	5.8	7.7	1.9	0.0	0.0	1.9
	5년 미만	41	29.3	34.1	22.0	22.0	31.7	14.6	14.6	2.4	12.2	7.3	2.4	2.4	4.9
	10년 미만	77	39.0	40.3	31.2	16.9	23.4	15.6	18.2	2.6	7.8	2.6	1.3	0.0	1.3
	15년 미만	32	21.9	21.9	40.6	31.3	18.8	21.9	12.5	9.4	6.3	0.0	3.1	0.0	12.5
	20년 미만	17	23.5	17.6	35.3	35.3	23.5	23.5	5.9	11.8	0.0	17.6	0.0	0.0	5.9
	20년 이상	31	25.8	32.3	35.5	22.6	19.4	9.7	12.9	25.8	6.5	6.5	3.2	0.0	0.0
성별	남성	162	32.1	28.4	35.8	23.5	20.4	16.0	15.4	8.6	8.6	4.9	1.2	.6	4.3
	여성	88	40.9	36.4	21.6	25.0	28.4	13.6	14.8	5.7	5.7	3.4	2.3	0.0	2.3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47.7	36.4	15.9	25.0	20.5	18.2	13.6	6.8	6.8	4.5	2.3	0.0	2.3
	석사 졸업	85	41.2	28.2	28.2	25.9	25.9	8.2	12.9	4.7	10.6	4.7	3.5	1.2	4.7
	박사 졸업	121	26.4	31.4	38.0	22.3	22.3	19.0	17.4	9.9	5.8	4.1	0.0	0.0	3.3

5) 공적개발원조의 수원국 도움 정보

가. 공적개발원조의 수원국 실질적 도움 정도

| 그림 3-35 | 공적개발원조의 수원국 실질적 도움 정도



우리 정부가 저개발국에 제공하는 원조가 그들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도움’된다가 90.8%,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9.2%로 나타났고, 이러한 수치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소폭의 변화만 존재하였다(전년도 ‘도움’된다 89.6%, ‘미도움’된다 10.4%).

소속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전문가들 중 99%가 ‘도움’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연구부문과 민간부문은 각각 87%, 80%의 비율로 ‘도움’ 응답이 나타났다. 다만 민간 부문 전문가 집단의 20%가 ‘미도움’된다고 응답하여 다른 부문의 전문가 집단의 ‘미도움’ 응답률과 비교하여 다소 격차가 존재하였다(연구부문 10%, 공공부문 1%).

종사분야 별로 살펴보면, 교통인프라, 환경·기후변화 분야에서 100% ‘도움’ 응답률로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난 반면, 성평등·취약·인권보호 분야의 전문가 집단은 80%가 ‘도움’된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은 수치가 나타났다. ‘매우 도움됨’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정보통신·IT기술(42.9%), 환경·기후변화(41.2%), 공공행정·거버넌스(36%)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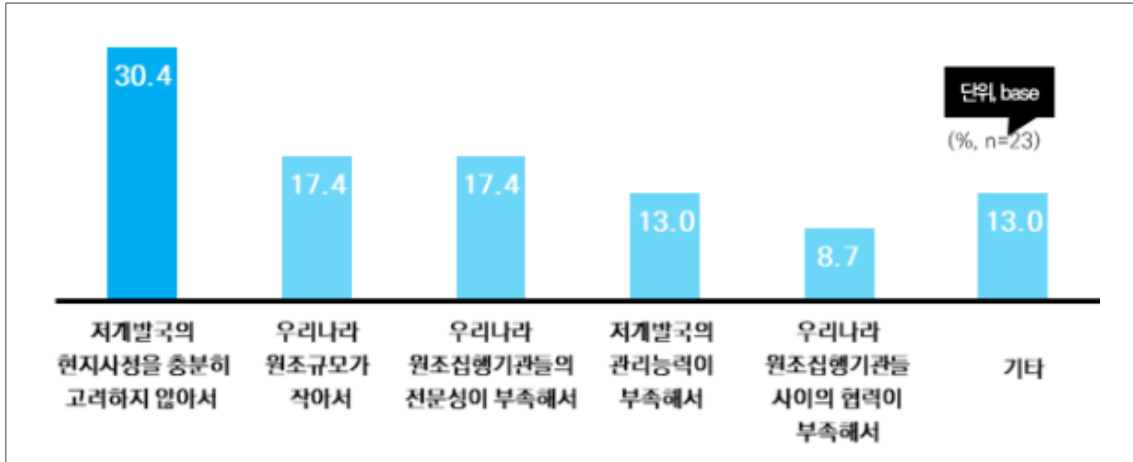
| 표 3-41 | 응답자 특성별 공적개발원조의 수원국 실질적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명)	비율				비율합산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도움	미도움
2017		270	0.4	10.0	61.9	27.8	89.6	10.4
2018		250	1.2	8.0	62.0	28.8	90.8	9.2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2.8	10.2	70.4	16.7	87.0	13.0
	공공부문	97	0.0	1.0	51.5	47.4	99.0	1.0
	민간부문	40	0.0	20.0	62.5	17.5	80.0	20.0
	기타	5	0.0	0.0	80.0	20.0	100.0	0.0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1.6	8.2	70.5	19.7	90.2	9.8
	국책연구원	47	4.3	12.8	70.2	12.8	83.0	17.0
	정부부처	45	0.0	0.0	55.6	44.4	100.0	0.0
	공공기관	43	0.0	2.3	46.5	51.2	97.7	2.3
	국제기구	9	0.0	0.0	55.6	44.4	100.0	0.0
	시민단체	22	0.0	22.7	72.7	4.5	77.3	22.7
	민간기관	18	0.0	16.7	50.0	33.3	83.3	16.7
	기타	5	0.0	0.0	80.0	20.0	100.0	0.0
종사 분야	교육	33	0.0	6.1	60.6	33.3	93.9	6.1
	보건의료	20	0.0	10.0	70.0	20.0	90.0	10.0
	공공행정·거버넌스	50	2.0	4.0	58.0	36.0	94.0	6.0
	농촌개발	21	4.8	9.5	57.1	28.6	85.7	14.3
	교통인프라	6	0.0	0.0	83.3	16.7	100.0	0.0
	정보통신·IT기술	14	0.0	7.1	50.0	42.9	92.9	7.1
	과학기술	11	0.0	9.1	63.6	27.3	90.9	9.1
	환경·기후변화	17	0.0	0.0	58.8	41.2	100.0	0.0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0.0	18.2	81.8	0.0	81.8	18.2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100.0	0.0	100.0	0.0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0.0	8.9	64.3	26.8	91.1	8.9
기타	10	10.0	30.0	50.0	10.0	60.0	40.0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0.0	5.8	61.5	32.7	94.2	5.8
	5년 미만	41	0.0	14.6	61.0	24.4	85.4	14.6
	10년 미만	77	3.9	6.5	61.0	28.6	89.6	10.4
	15년 미만	32	0.0	6.3	59.4	34.4	93.8	6.3
	20년 미만	17	0.0	5.9	70.6	23.5	94.1	5.9
	20년 이상	31	0.0	9.7	64.5	25.8	90.3	9.7
성별	남성	162	1.2	8.6	56.8	33.3	90.1	9.9
	여성	88	1.1	6.8	71.6	20.5	92.0	8.0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0.0	4.5	63.6	31.8	95.5	4.5
	석사 졸업	85	1.2	5.9	58.8	34.1	92.9	7.1
	박사 졸업	121	1.7	10.7	63.6	24.0	87.6	12.4

나. 공적개발원조의 수원국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 그림 3-36 | 공적개발원조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Q.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이 뽑힌 응답은 ‘저개발국의 현지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서’(30.4%)이며, ‘우리나라 원조규모가 작아서’와 ‘우리나라 원조집행기관들의 전문성이 부족해서’가 모두 17.4%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총 인원이 23명이라 통계적 유의미성을 논하기는 무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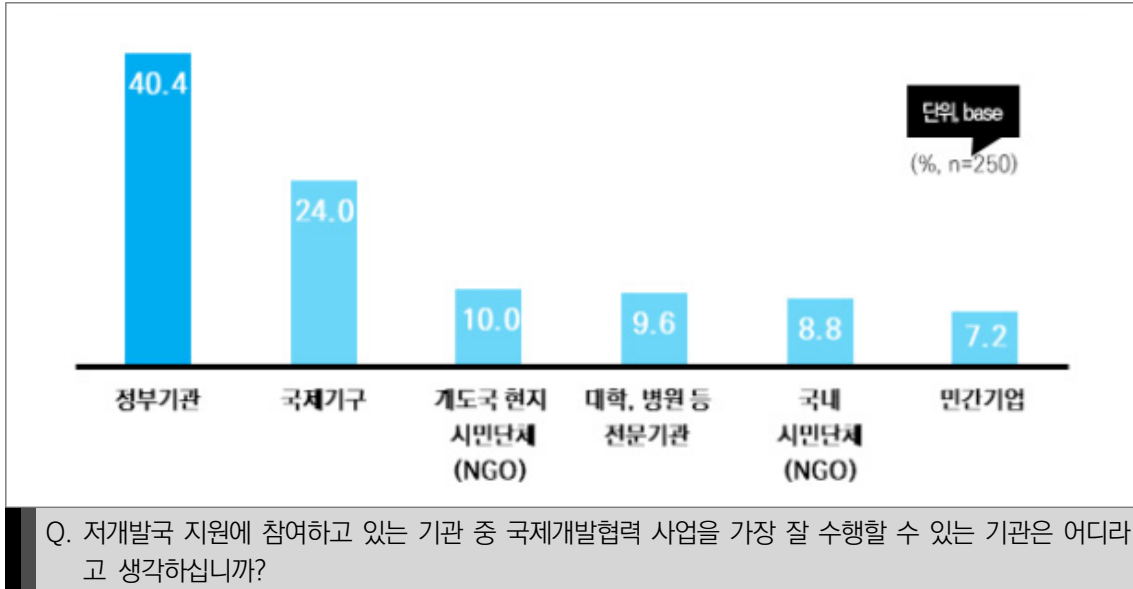
| 표 3-42 | 응답자 특성별 공적개발원조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명)	저개발국의 현지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원조규모가 작아서	우리나라 원조집행기관 전문성이 부족해서	저개발국의 관리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원조집행 기관들 사이의 협력이 부족해서	기타
전체		23	30.4	17.4	17.4	13.0	8.7	13.0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4	28.6	28.6	7.1	14.3	0.0	21.4
	공공부문	1	0.0	0.0	100.0	0.0	0.0	0.0
	민간부문	8	37.5	0.0	25.0	12.5	25.0	0.0
	기타	0	0.0	0.0	0.0	0.0	0.0	0.0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	0.0	50.0	0.0	16.7	0.0	33.3
	국책연구원	8	50.0	12.5	12.5	12.5	0.0	12.5
	정부부처	0	0.0	0.0	0.0	0.0	0.0	0.0
	공공기관	1	0.0	0.0	100.0	0.0	0.0	0.0
	국제기구	0	0.0	0.0	0.0	0.0	0.0	0.0
	시민단체	5	0.0	0.0	40.0	20.0	40.0	0.0
	민간기관	3	100.0	0.0	0.0	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0.0	0.0
종사 분야	교육	2	0.0	0.0	50.0	50.0	0.0	0.0
	보건의료	2	0.0	0.0	50.0	0.0	50.0	0.0
	공공행정·거버넌스	3	100.0	0.0	0.0	0.0	0.0	0.0
	농촌개발	3	33.3	33.3	0.0	0.0	0.0	33.3
	교통인프라	0	0.0	0.0	0.0	0.0	0.0	0.0
	정보통신·IT기술	1	0.0	0.0	100.0	0.0	0.0	0.0
	과학기술	1	0.0	0.0	0.0	100.0	0.0	0.0
	환경·기후변화	0	0.0	0.0	0.0	0.0	0.0	0.0
	성평등·취약·인권보호	2	0.0	0.0	50.0	50.0	0.0	0.0
	난민지원·긴급구호	5	0.0	60.0	0.0	0.0	20.0	20.0
	개발협력사업 일반	4	75.0	0.0	0.0	0.0	0.0	25.0
기타	0	0.0	0.0	0.0	0.0	0.0	0.0	
종사 기간	3년 미만	3	0.0	33.3	33.3	33.3	0.0	0.0
	5년 미만	6	16.7	16.7	16.7	0.0	33.3	16.7
	10년 미만	8	50.0	12.5	0.0	25.0	0.0	12.5
	15년 미만	2	0.0	0.0	50.0	0.0	0.0	50.0
	20년 미만	1	0.0	100.0	0.0	0.0	0.0	0.0
	20년 이상	3	66.7	0.0	33.3	0.0	0.0	0.0
성별	남성	16	18.8	25.0	18.8	18.8	6.3	12.5
	여성	7	57.1	0.0	14.3	0.0	14.3	14.3
최종 학력	대졸 이하	2	0.0	0.0	100.0	0.0	0.0	0.0
	석사 졸업	6	16.7	0.0	16.7	16.7	33.3	16.7
	박사 졸업	15	40.0	26.7	6.7	13.3	0.0	13.3

6)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적 수행기관

| 그림 3-37 |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적 수행기관



저개발국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중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지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뽑힌 응답은 ‘정부기관’(40.4%), ‘국제기구’(24%), ‘개도국 현지 시민단체(NGO)’(10%) 순으로 나타났다. 많이 뽑힌 응답 순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순은 동일하였으나, ‘대학 병원 등 전문기관’(9.6%)이 전년도 대비 4.8%p 하락하여(전년도 14.4%) ‘개도국 현지 시민단체(NGO)’ 다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구부문이 공공부문과 비교하여 ‘국제기구’를 ODA 사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연구부문 31.5%, 공공부문 20.6%). 한편 민간부문 전문가들은 가장 많은 30%가 ‘개도국 현지 시민단체(NGO)’를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정부기관’(22.5%)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사기간 별로 살펴보면, 모든 종사기간의 전문가 집단이 ‘정부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년 이상 종사 전문가 집단이 61.3%로 ‘정부기관’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10년 이상 15년 미만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종사한 전문가 집단이 다양한 기관에 대해 상대적으로 골고루 응답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기관 37.5%, 국제기구 21.9%, 개도국 현지 시민단체 18.8%, 대학, 병원 등 전문기관 15.6%, 국내 시민단체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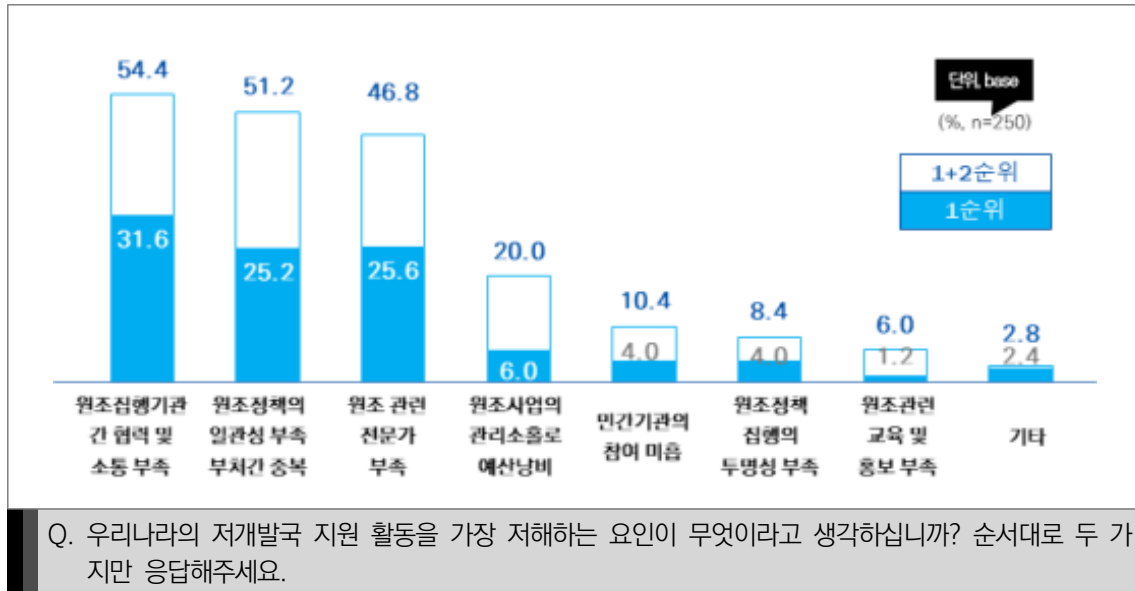
| 표 3-43 | 응답자 특성별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적 수행기관

(단위: 명, %)

구분		(명)	정부기관	국제기구	개도국현지 시민단체 (NGO)	대학, 병원 등 전문기관	국내 시민단체 (NGO)	민간기업
2017		270	37.4	21.1	13.3	14.4	10.4	3.3
2018		250	40.4	24.0	10.0	9.6	8.8	7.2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31.5	31.5	6.5	13.9	9.3	7.4
	공공부문	97	58.8	20.6	6.2	7.2	3.1	4.1
	민간부문	40	22.5	15.0	30.0	5.0	17.5	10.0
	기타	5	20.0	0.0	0.0	0.0	40.0	40.0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32.8	29.5	8.2	14.8	8.2	6.6
	국책연구원	47	29.8	34.0	4.3	12.8	10.6	8.5
	정부부처	45	55.6	17.8	8.9	8.9	4.4	4.4
	공공기관	43	65.1	16.3	4.7	7.0	2.3	4.7
	국제기구	9	44.4	55.6	0.0	0.0	0.0	0.0
	시민단체	22	9.1	13.6	45.5	9.1	22.7	0.0
	민간기관	18	38.9	16.7	11.1	0.0	11.1	22.2
	기타	5	20.0	0.0	0.0	0.0	40.0	40.0
종사 분야	교육	33	27.3	30.3	9.1	18.2	12.1	3.0
	보건의료	20	45.0	10.0	15.0	10.0	15.0	5.0
	공공행정·거버넌스	50	46.0	16.0	8.0	8.0	12.0	10.0
	농촌개발	21	66.7	9.5	4.8	4.8	0.0	14.3
	교통인프라	6	66.7	16.7	0.0	0.0	16.7	0.0
	정보통신·IT기술	14	35.7	21.4	21.4	21.4	0.0	0.0
	과학기술	11	45.5	18.2	9.1	0.0	18.2	9.1
	환경·기후변화	17	35.3	47.1	17.6	0.0	0.0	0.0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18.2	63.6	9.1	9.1	0.0	0.0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0.0	0.0	0.0	100.0	0.0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37.5	26.8	8.9	10.7	7.1	8.9
	기타	10	30.0	20.0	10.0	10.0	10.0	20.0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46.2	25.0	1.9	5.8	13.5	7.7
	5년 미만	41	31.7	19.5	9.8	22.0	9.8	7.3
	10년 미만	77	35.1	29.9	16.9	6.5	6.5	5.2
	15년 미만	32	37.5	21.9	18.8	15.6	6.3	0.0
	20년 미만	17	35.3	29.4	0.0	11.8	5.9	17.6
	20년 이상	31	61.3	12.9	3.2	0.0	9.7	12.9
성별	남성	162	44.4	22.8	8.0	9.9	6.8	8.0
	여성	88	33.0	26.1	13.6	9.1	12.5	5.7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43.2	11.4	18.2	11.4	9.1	6.8
	석사 졸업	85	41.2	23.5	12.9	7.1	9.4	5.9
	박사 졸업	121	38.8	28.9	5.0	10.7	8.3	8.3

7) 공적개발원조 활동 저해 요인

| 그림 3-38 | 공적개발원조 활동 저해 요인



우리나라의 저개발국 지원 활동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1+2 순위로 가장 많이 뽑힌 응답은 ‘원조집행기관 간 협력 및 소통 부족’(54.4%), ‘원조정책의 일관성 부족 및 부처간 중복’(51.2%), ‘원조 관련 전문가 부족’(46.8%), ‘원조사업의 관리소홀로 예산낭비’(20%)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 응답만 기준으로는 ‘원조집행기관 간 협력 및 소통 부족’(31.6%), ‘원조 관련 전문가 부족’(25.6%), ‘원조정책의 일관성 부족 및 부처간 중복’(25.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3가지 저해 요인 중 2가지(‘원조집행기관 간 협력 및 소통 부족’, ‘원조정책의 일관성 부족 및 부처간 중복’)가 개발원조 정책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당사자인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소속기관 세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제기구 전문가들 중 88.9%가 가장 높은 비율로 ‘원조집행기관 간 협력 및 소통 부족’을 지적했으며, 학계는 62.3%가 ‘원조정책의 일관성 부족 및 부처간 중복’을, 민간기관은 50%가 ‘원조 관련 전문가 부족’을 꼽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종사분야별 분석에서 정보통신·IT기술 전문가 집단의 28.6%가 ‘원조정책 집행에서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였고 환경·기후변화 전문가 집단의 29.4%가 ‘원조관련 교육 및 홍보 부족’을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 표 3-44 | 응답자 특성별 공적개발원조 활동 저해 요인 [복수응답 기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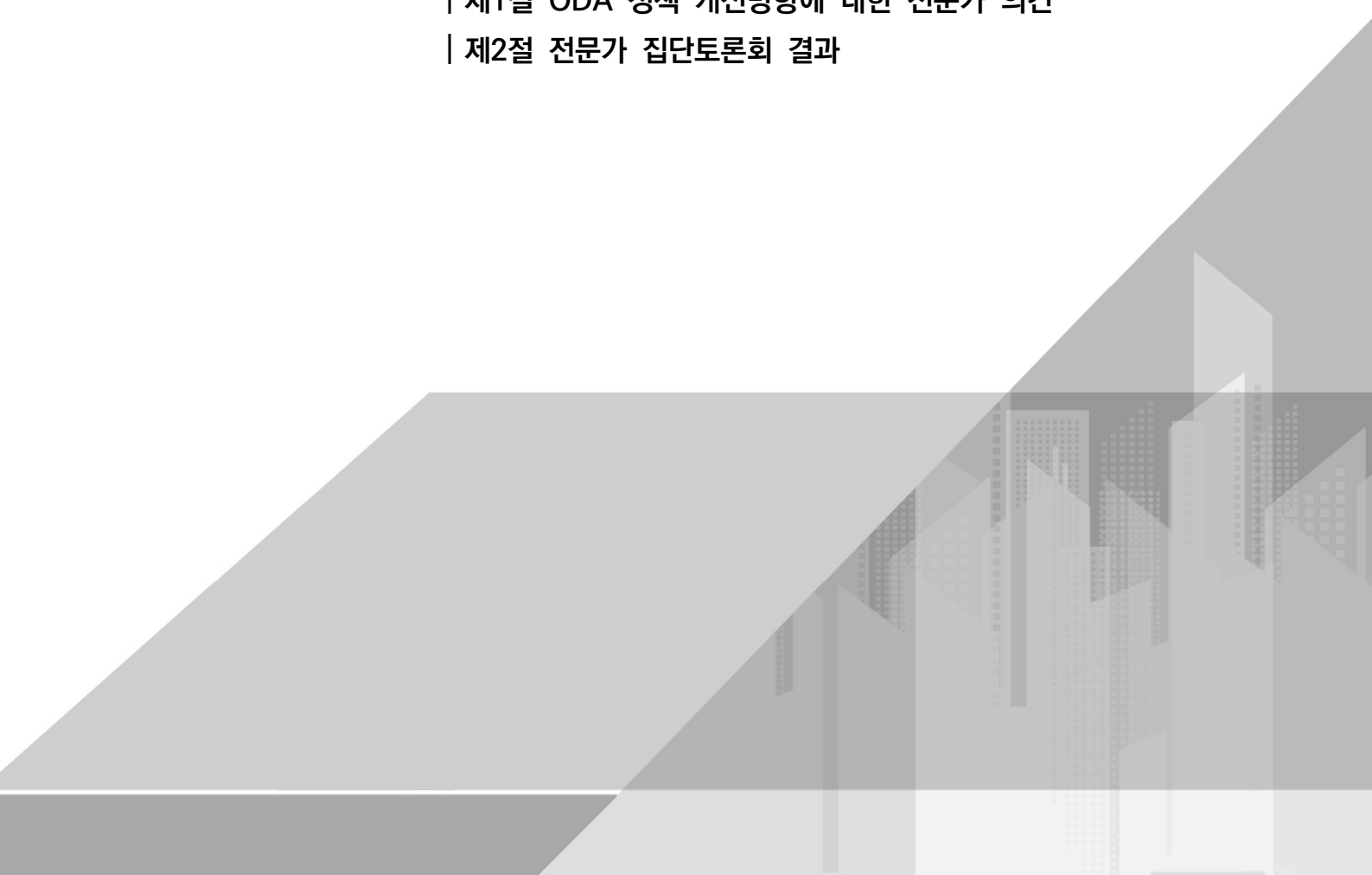
구분		(명)	원조집행 기관간 협력 및 소통부족	원조정책의 일관성 부족 및 부처 간 중복	원조 관련 전문가 부족	원조사업의 관리소홀로 예산 낭비	민간기관의 참여미흡	원조정책 집행에서의 투명성 부족	원조관련 교육 및 홍보 부족	기타
2017		270	47.8	54.1	50.7	21.1	8.5	9.3	5.2	3.3
2018		250	54.4	51.2	46.8	20.0	10.4	8.4	6.0	2.8
소속 기관 유형별	연구부문	108	46.3	61.1	50.9	16.7	8.3	9.3	4.6	2.8
	공공부문	97	62.9	44.3	43.3	19.6	12.4	5.2	9.3	3.1
	민간부문	40	52.5	42.5	42.5	32.5	10.0	15.0	2.5	2.5
	기타	5	80.0	40.0	60.0	0.0	20.0	0.0	0.0	0.0
소속 기관 세분 유형별	학계	61	47.5	62.3	50.8	16.4	8.2	11.5	1.6	1.6
	국책연구원	47	44.7	59.6	51.1	17.0	8.5	6.4	8.5	4.3
	정부부처	45	62.2	40.0	40.0	22.2	11.1	8.9	11.1	4.4
	공공기관	43	58.1	51.2	46.5	18.6	14.0	2.3	7.0	2.3
	국제기구	9	88.9	33.3	44.4	11.1	11.1	0.0	11.1	0.0
	시민단체	22	63.6	45.5	36.4	36.4	0.0	13.6	4.5	0.0
	민간기관	18	38.9	38.9	50.0	27.8	22.2	16.7	0.0	5.6
	기타	5	80.0	40.0	60.0	0.0	20.0	0.0	0.0	0.0
종사 분야	교육	33	51.5	42.4	57.6	21.2	6.1	12.1	6.1	3.0
	보건의료	20	55.0	45.0	65.0	15.0	5.0	5.0	5.0	5.0
	공공행정·거버넌스	50	54.0	52.0	36.0	26.0	12.0	8.0	8.0	4.0
	농촌개발	21	71.4	66.7	47.6	4.8	9.5	0.0	0.0	0.0
	교통인프라	6	100.0	50.0	33.3	0.0	16.7	0.0	0.0	0.0
	정보통신·IT기술	14	50.0	28.6	57.1	14.3	21.4	28.6	0.0	0.0
	과학기술	11	54.5	36.4	72.7	9.1	18.2	0.0	0.0	9.1
	환경·기후변화	17	52.9	35.3	41.2	23.5	11.8	5.9	29.4	0.0
	성평등·취약·인권보호	11	54.5	36.4	27.3	54.5	0.0	18.2	9.1	0.0
	난민지원·긴급구호	1	0.0	100.0	100.0	0.0	0.0	0.0	0.0	0.0
	개발협력사업 일반	56	50.0	66.1	46.4	16.1	10.7	3.6	3.6	3.6
기타	10	40.0	60.0	20.0	40.0	10.0	30.0	0.0	0.0	
종사 기간	3년 미만	52	65.4	48.1	40.4	19.2	11.5	5.8	7.7	1.9
	5년 미만	41	48.8	56.1	39.0	24.4	4.9	9.8	14.6	2.4
	10년 미만	77	44.2	46.8	57.1	23.4	10.4	10.4	5.2	2.6
	15년 미만	32	65.6	56.3	40.6	18.8	6.3	6.3	3.1	3.1
	20년 미만	17	64.7	52.9	52.9	0.0	17.6	5.9	0.0	5.9
	20년 이상	31	51.6	54.8	45.2	19.4	16.1	9.7	0.0	3.2
성별	남성	162	56.8	51.9	46.9	16.0	11.7	7.4	5.6	3.7
	여성	88	50.0	50.0	46.6	27.3	8.0	10.2	6.8	1.1
최종 학력	대졸 이하	44	63.6	43.2	34.1	27.3	6.8	13.6	6.8	4.5
	석사 졸업	85	63.5	50.6	41.2	20.0	9.4	5.9	7.1	2.4
	박사 졸업	121	44.6	54.5	55.4	17.4	12.4	8.3	5.0	2.5

제4장

ODA 정책개선에 대한 시사점

| 제1절 ODA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 제2절 전문가 집단토론회 결과



■ 제4장 ODA 정책개선에 대한 시사점

본 조사는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들이 정부의 ODA 정책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청취하기 위하여 주관식 문항을 조사에 추가적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전문가집단토론회(Focus Group Discussion)를 별도로 개최하여 체계·통합·효율적인 ODA를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먼저 주관식 문항을 통해 수집한 전문가들의 답변을 통해 정부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 그들이 제시한 의견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이어서 전문가집단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주요 쟁점별로 정리하여 제시할 것이다.

제1절 ODA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1. ODA의 가치, 비전, 철학에 대한 의견

2018년을 기점으로 3조원을 상회하는 예산규모가 배정되는 현실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ODA의 목표 및 철학에 대한 성찰과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ODA 정책과 세부 전략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다보니, 향후 심도 깊은 고민과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ODA가 지향해야 할 철학, 정책, 전략의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몇몇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ODA 정책의 확실한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리더십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관련 정부부처 간의 업무 분절이 발생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ODA 정책의 가치 및 목표 설정의 중요성
- 우리나라 ODA 정책의 철학과 비전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수립
- 국가협력전략의 체계적 수립 및 실행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ODA 정책을 이해하고 실행해야 할 필요성
- 설정된 ODA 정책 가치를 꾸준히 추구할 수 있는 리더십의 중요성
- 정치 이념이나 국가정책의 방향에 의해 ODA 정책이 흔들리지 않아야 할 필요성

- 다양한 정책당사자들 간의 조정·소통체계 및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
- ODA와 공공외교 및 제(諸)측면에 대한 고려
- 수원국과 우리나라 모두에 이익이 되도록 ODA 정책을 수립
- 형식적·양적 ODA가 아닌 내실있는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구

2. 참여기관의 역할과 협업에 대한 의견

꾸준히 지적되었듯이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들은 통합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참여기관들의 협업 부재, 업무 분절화, 조정기능의 미비 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ODA를 추진하는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ODA 사업의 심사와 예산이 이원화된 현 ODA 추진 체계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일원화된 추진기관이 부재함으로써 다양한 정부부처들이 ODA 사업에 관여하여 사업 및 기관의 분절화가 발생한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 존재하였다. 몇몇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구하기에 앞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관련기관 간의 지속적인 소통 및 협의, 정보 공유 등을 주문하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체계·통합·효율적인 ODA라는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부처별로 분절화되어 있는 현재의 방식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면서 다양한 문제인식 및 처방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향후 우리나라 ODA를 통합 관리하는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의견,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조정역할 미비 등이 제시되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각 부처의 ODA 총괄을 담당하고 있지만, 통합적 관리를 위한 권한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한편 체계·통합·효율적인 ODA라는 방향성에 지나치게 집중하다보면 각 기관 사업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저해하여 오히려 원조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유사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그 밖에도 유무상 기관의 통합 문제를 두고 찬반 의견도 여럿 제시되었다. ODA 참여기관의 역할과 협업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국무조정실의 실질적인 조정 역할과 권한의 제고
- 국무조정실의 컨트롤타워의 기능 미비로 인한 부처 간 정책과 사업의 분절화가 심화됨
- 국무조정실 중심의 통합체제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알리고, 학계와 시민사회와의 더욱 많은 소통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필요성
- 여러 부처 간에 다원화된 ODA 추진으로 인해 사업의 중복, 사업성과 관리 미비, 소통 미비
- 체계·통합·효율적인 ODA 정책의 중요성
- 유사 사업을 통합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강화
- 부처, 기관 간 정보 공개 및 공유를 통한 소통의 강화
- 우리나라 ODA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
- 체계·통합·효율성의 추구로 인해 자칫 각 부처 및 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배제될 가능성 존재
- 유무상 기관의 통합에 대한 찬반
- 찬성 의견: ODA 시행기관의 분절화 해소 및 통합 조정을 위해 필요, 파트너 국가의 원조행정 피로도 감소와 보다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
- 반대 의견: 각각의 전문 분야와 특수성을 고려한 원조 노력이 필요, 통합적 추진을 강요하여 연계 사업외의 신규사업 예산확보의 어려움, 효율적 추진을 강조하다 자칫 사회적 약자나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은 단체에 대한 관심이 감소할 가능성

3. 시행기관에 대한 의견

ODA의 시행기관들, 특히 KOICA에 대한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전문인력 수의 증가 필요성,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의견이 다수 나왔다. 이로 인해 수원국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실질적인 데이터 수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거나, 현지 파견인력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체계적 관리의 미비 등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업무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이 있다 보니 실질적인 업무보다 행정적인 업무에 매달려있다는 지적도 존재하였다. 이와 더불어 ODA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시행기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ODA 추진체계의 질적 수준 및 추진인력의 전문성 제고
- 사업 대부분을 KOICA나 EDCF 등의 소수의 ODA 전담기관이 수행하여 전문성 미비 및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됨
-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정책동향과 실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인력들을 관리직에 많이 배치
- ODA 규모 급증에 대비한 시행기관들의 기능, 조직, 인력 보강
- KOICA의 인력에 비해 상대적인 업무 과다로 인한 비효과적인 업무관리

- 인력 충원을 통한 전문성 증진
- ODA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 ODA 전문가의 육성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수행
- 실무 직원들의 전문적인 직무수행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과 예산의 투입

4. 사업의 기획 및 발굴 단계

사업의 기획 및 발굴 단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중 수원국의 수요(needs) 파악을 통한 실질적인 수요 조사의 필요성과 다원화된 ODA 사업 추진주체 간 협업을 통한 중복 사업의 지양에 대한 많은 지적이 나타났다. 또한 다원화된 추진주체로 인해 사업 제안자의 과도한 행정피로도, ODA 국제표준을 고려한 사업 기획 및 발굴, 기획 및 발굴단계에 민간부문의 참여 및 역할 제고, 개도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나 예산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 및 국가에 집중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사업 발굴 이전에 엄격한 사전타당성 조사와 심층기획조사 기간의 연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표출되었다. 사업의 기획 및 발굴 단계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수원국의 니즈 파악,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현지 필요에 맞는 ODA 사업의 발굴
- ODA 사업 추진주체의 다원화, 중복화로 인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존재
- 국무조정실, 외교부, 기획재정부까지 여러 단계에 의한 심사절차 및 평가단계의 통합 및 간소화
- 개도국에 대한 선택과 집중,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성
- 전문성을 갖춘 민간부문의 참여와 역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마련
- KOICA의 사업형성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및 심층기획조사 기간이 충분치 않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NIPA의 사업발굴을 위한 사전타당성 지원사업과 연계할 필요성

5. 사업의 집행 및 평가 단계

사업의 집행 및 평가 단계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는데, 주로 집행 및 평가 과정의 체계화, 내실화를 주문하는 요구에 대한 의견이었다. 집행 단계와

관련해서는 사업 자체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체계적인 현장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정부, 민간, NGO 등의 ODA 주체들의 자금 집행에 대한 회계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집행 평가와 관련해서는 사업평가체계를 내실화하여 이후 사업기획으로 피드백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평가 전문 연구기관을 육성하고 관계 부처 및 KOICA의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사업의 집행 및 평가 단계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사업 집행의 체계화 필요
-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단에 의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등이 미흡
-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의 내실화
- ODA 자금 집행에 대한 회계, 관리, 감독체계의 강화
- ODA 예산집행이 실적평가와 연계되어 있고 효과성에 대한 검증의 정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당초 할당된 예산집행에만 집중함으로써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집행 시 관련 민간부문의 역할 및 권한의 확대
- 사업 평가의 체계화 필요
- 사후적 평가 시 사업 시행 이전에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사후적 자료와 비교하여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
- 실질적인 성과 파악을 위해 중장기적인 평가체제도 필요함
- 사업평가를 기관별로 지원하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공통적인 평가 집단을 선정
- 성과환류시스템을 통해 이후 사업기획으로 이어지도록 함
- 평가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

6. 기타 의견

이 밖에도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ODA 정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선 N-2년 제도로 인해 사업의 수요발굴 시점과 사업의 수행 시점 간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수원국의 수요에 적합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ODA에 참여하는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은퇴한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 개별 ODA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기타 의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N-2년 제도에 의해 사업의 수요발굴 시점과 수행 시점 간 장기간이 소요됨
- 가능한 한 은퇴한 공무원, 연구원, 교수 등을 활용하여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
- 민간협력과 파트너십을 형성할 때 일정한 신뢰검증체계를 갖추고, 국내에서 도태되는 기업들이 개도국에 진출하는 기회로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
- 규제기반의 민간단체 협력으로 인해 KOICA와 협력단체의 시간 및 인력 낭비
- 개별 ODA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 지자체의 ODA 사업들이 한국의 개발정책 방향 및 SDGs와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ODA 사업의 추진체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함

제2절 전문가 집단토론회 결과

전문가 집단토론회는 체계·통합·효율성 차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ODA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2018년 12월 5일 진행된 집단토론회에는 연구부문 3명, 공공부문 1명, 민간부문 2명 등 총 6명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1. 최근 정부의 ODA 추진체계 개편에 대한 기대 및 전망

최근 ODA 추진체계 통합을 위한 정부의 대안이 마련되고 이를 법제화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각 부처나 기관마다 분절화되어 있는 ODA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조정 및 관리하려는 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질문하였다. 또한 추진체계 개편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가지는 우려, 제안 사항,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ODA 원조분절화로 인해 발생되어 왔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국무조정실 중심의 추진체계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분절화로 인한 수원국의 행정피로도 증가에 대한 지적이 나왔으며, 기존 각 부처의 ODA 총괄을 담당하고 있었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와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ODA 추진체계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어려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체계·통합·효율적인 ODA 원칙에 매달리다가 자칫 놓칠 수도 있는 전문성 저하에 대한 우려, 그러한 원칙을 얘기하기 이전에 무엇을 위한 원칙인지 심도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이 외에도 ‘통합’이라는 개념에 대해 가져왔던 ‘기관의 통합’보다는 조정 기능의 원활한 작동으로 ‘업무의 통합적 관리’를 지향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ODA 추진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진 후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 업무를 운영해야 하는지 방향성과 전략을 제시하는 의견이 있었다. 국무총리실의 역할을 좀 더 확대시키고 명확한 ODA 사업전략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서 사업을 발굴하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주문하는 의견이다. 이는 기존에 담당해 오던 ‘조정’ 업무를 넘어서서 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 업무도 어느 정도 담당하라는 제안이었다.

2. ODA 관련 DB 통합관리에 대한 기대 및 주의사항

최근 정부가 준비 중인 추진체계 개편안에는 ODA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국무조정실에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ODA 사업의 분절화는 사업이나 인력의 기관 간 분절화뿐만 아니라 통계의 분절화를 초래하므로 그동안 정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각 부처나 기관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를 타 부처 및 기관, ODA 관련 시민단체에게 공개하는 폭과 범위가 좁아서 ODA 사업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업이 현재 중복되거나 과거 진행되었던 것인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전문가들에게 관련 문제점과 통계의 통합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ODA 통계의 통합적 관리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몇몇은 진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 통합관리의 방법론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제시하였다.

몇몇 전문가들은 ODA 통계의 통합관리와 맥을 같이 하면서도 다른 성격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정작 통계의 통합적인 운영을 진행하더라도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어야 다양한 관련 행위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달성된다는 주장, 통계뿐만 아니라 기존 부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차원의 공유까지 이루어져야 더욱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ODA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즉, 이는 공공부문이 제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접근권의 당사자 폭을 비공공부문 행위자까지 넓힐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로 확장되는 것이다.

3.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및 중점분야 선정에 대한 의견 및 개선방안

현재 24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을 통해 개별 수원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지원방향과 지원 분야,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협력전략에 대한 의견과 개선방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24개로 되어있는 중점협력국의 수가 많다는 인식을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었지만 세부 의견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중점협력국 내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 수원국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이외에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여 보자는 의견, 유명무실한 중점협력국의 조정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중점분야의 폭도 기존에 활발히 되고 있는 분야 외에 새로운 분야에서의 ODA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CPS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 방향 중 CPS 대상국가 선정기준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 중점분야를 국가에 맞게 특성 있게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현지 수원국의 ODA 총괄기관과 정책적인 소통을 진행하면서 CPS를 수립하여 현지 니즈와 ODA 사업 간의 내용적 일치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탄력적인 정책대응을 하자는 의견이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 측면에서 제시된 다른 의견은 국가협력전략에 따라 사업들을 추진할 때, ODA 사업이나 전략의 이행 이후 사업담당자 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추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운영, 관리, 평가를 도모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4. 일자리 창출과 국제개발협력 생태계에 대한 의견 및 개선방안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ODA와 일자리 창출의 연계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ODA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전문가들은 ‘연계’라는 표현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제시하였다. ODA 해외봉사단의 현지파견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경력 개발 및 관리, 가능성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존재했다.

ODA 해외봉사단의 파견이 단기 일자리 창출로 변질되었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는데, 해외봉사단 파견이라는 주 목적과 부차적인 목적 간 주객이 전도되어 정책의 내실화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에 최소 1-2년으로 잡혀있던 파견기간이 점차 감소하여 단순히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식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 단축된 파견기간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해외봉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의견 등이 표출되었다.

ODA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연계의 배경에는 ODA 생태계를 개선시켜 진지한 관심을 갖고 종사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진입장벽이 높고 이로 인해 창출될 수 있는 신규 일자리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었다. 이를 위해서 신규 ODA 사업에 젊은 사람들을 많이 배치하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ODA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향후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우선 ODA 생태계 개선과 연계된 의견으로서, 해외봉사단원들이 파견 이후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하여 더욱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였다.

해외봉사단에 파견되는 인력(청년층 및 중장년층)에 대한 사전교육을 내실화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몇몇 제언들이 있었다. 또한 퇴직공무원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역량이 개도국 정부에 파견될 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단순히 일자리를 양적으로 창출하는 것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질적인 측면을 제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파견되는 봉사단이 현지에서 분쟁·소송에 휘말릴 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5장

결론

- | 제1절 요약
-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 제3절 정책제언

■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본 연구는 ODA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책만족도 모형은 전년도에 이어 항목 만족도와 체감 만족도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평가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ODA 분야 전문가 250명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묻고, 체계적, 통합적, 효율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각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묻은 뒤 이를 100점 환산점으로 변환하였다. 나아가 ODA 전문가들이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ODA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식조사를 위한 별도의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먼저 조사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소속기관별로 학계부문(대학 및 연구원)이 108명(43.2%), 공공부문(정부부처, 공공기관, 국제기구)이 97명(38.8%), 민간부문(시민단체, 민간기관)이 40명(16.0%), 기타 5명(2.0%)이었다. 종사 분야로 살펴보면 교육 33명(13.2%), 보건의료 20명(8.0%), 공공행정 및 거버넌스 50명(20.0%), 농촌개발 21명(8.4%), 교통인프라 6명(2.4%), 정보통신 및 IT기술 14명(5.6%), 과학기술 11명(4.4%), 환경 및 기후변화 17명(6.8%), 성평등, 취약계층 및 인권보호 11명(4.4%) 등 각 분야에서 골고루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이 국제개발협력에 종사한 기간으로 그 분포를 살펴보면 3년 미만이 52명(20.8%), 3-4년 41명(16.4%), 5-9년 77명(30.8%), 10-14년 32명(12.8%), 15-19년 17명(6.8%), 20명 이상이 31명(12.4%)이었다.

항목만족도는 ODA 관련 국정목표인 9-4번 국정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체계성, 통합성, 효율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각각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체감만족도는 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모두 묻고, 전년대비 만족도를 물었다. 1차년도인 2017년에는 비교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국정과제 운영에 대한 기대를 체감만족도에 포함시켰으나 2차년도인 점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만족도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그 결과, 항목만족도에서는 체계성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65.5, 통합성은 65.0점, 효율성은 62.2점으로 평점이 산출되면서 각 항목이 전년도 대비 점수가 상승하였다. 체감만

족도는 과정만족도가 61.9점, 결과만족도가 60.2점, 전년대비 만족도가 63.4점으로 산출된 것으로 나타나 각 항목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최종적으로 항목만족도와 체감만족도를 종합하여 총점을 산출한 결과 63점으로 전년대비 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항목만족도에서 특히 체계성(+3.3), 통합성(+3.1), 효율성(+2) 등 각 항목에서 전년에 비해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ODA 분야에서 정부의 국정과제가 잘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본 조사에서는 주관식 문항으로 ODA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첫째, ODA 가치, 비전, 철학 등에 대해 의견이 제시되었다. 2018년을 기점으로 3조원을 상회하지만 여전히 ODA의 목표 및 철학에 대한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향후 심도 깊은 성찰과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ODA가 지향해야 할 철학, 정책, 전략의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참여기관과의 역할과 협업에 대한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다.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들은 통합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참여기관들의 협업 부재, 업무 분절화, 조정기능의 미비 등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우리나라 ODA를 통합 관리하는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총괄조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반면 각 기관 사업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저해하여 오히려 원조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유사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셋째, 시행기관에 대한 의견으로는 주로 전문인력 수의 증가 필요성,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의견이 다수 나왔다. 이로 인해 수원국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현지 파견 인력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ODA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넷째, 사업의 기획과 발굴 단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수원국의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의 기획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엄격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심층기획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ODA 사업 추진주체 간 협업을 통한 중복 사업의 지양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되었다.

다섯째, 사업의 집행 및 평가 단계와 관련하여 집행 및 평가 과정의 체계화, 내실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사업평가체계를 내실화하여 이후 사업기획으로 피드백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평가 전문 연구기관을 육성하고, 관계 부처 및 KOICA의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여섯째, 기타 의견으로는 민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자체 ODA 사업도 국제규범과 맞게 진행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ODA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향후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계 부처와 시행기관들은 이상에서 정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책추진 과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3절 정책제언

전문가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ODA 전문가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평가결과 공유 및 환류체계 내실 운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ODA 정책 만족도와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효율성 항목의 점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체계성 항목만족도 65.5점, 통합성 항목만족도 65.0점인데 비해 효율성 항목 만족도는 62.2점이었다. 또한 ODA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인식을 조사한 문항에서 성과관리와 평가계획이 시행기관들과 잘 공유되는지(긍정 51.6%, 부정 22.4%), 성과점검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는지(긍정 27.2%, 부정 48%), 평가결과가 차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되는지(긍정 35.6%, 부정 36.8%)에 대해서 부정

적 인식이 다른 인식조사 항목에 비해 높았다.

ODA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사업발굴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임기 1년차에 추진체계 통합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성과 평가와 평가결과 환류체계 부분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인식이 높아서 향후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시 이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국정과제의 목표가 체계성, 통합성, 효율성이라면 체계성과 통합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과 만족이 높아지고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보다 많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2018년 6월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미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8). 이에 대해 ODA 분야 전문가들과 관련된 시행기관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2019년에는 인지도를 제고하는 세미나나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통합평가체계 개선안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합평가매뉴얼을 통해 평가계획이나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는 있으나 시행기관에서 직접 사용하기에는 그 구체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서 평가 매뉴얼 개편을 통해서 ODA 시행기관들이 평가를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가결과가 차년도 사업계획, 예산, 차기 국가협력전략 등에 반영되어 교훈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체계를 갖추고 실제 환류가 일어나도록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난제이다. ODA 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평가결과 환류에 대한 DB도 만들어서 평가결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후 몇 년간 추적관리하면서 실제 개선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미 다른 국제기구들은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정보시스템(Management Action Record System)을 운영 중이므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환류가 실제 일어나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2. 국내외 이해관계자 협력과 정책조정을 위한 기능 및 인력 강화

정부부처와 시행기관들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긍정적 인식의 비율이 43.2%(부정적 29.6%), 민간기업과 시민사회와 협력강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 45.2%(부정적 29.6%), 수원국과 책임성을 갖추도록 사업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44%(부정적 26.4%)로 국내 이해관계자와 협력대상국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이 여전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DA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원조집행기관 간에 협력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응답(54.4%), ‘원조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부처간 중복이 있다’(51.2%)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집담회와 주관식 응답 등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은 국내 부처간 정책과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정책조정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궁극적으로는 ODA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을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18년 하반기에 ODA 추진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필요한 법제를 정비하고자 국회에 입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오랜 숙원이었던 추진체계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갖춘 후에 실제로 이를 잘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는 것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추진체계에서 신설되는 기구는 ODA에 대한 국정철학과 국정과제의 지향점에 맞게 국가협력전략을 잘 수립하는 기능, 전력에 맞게 사업을 기획하고 발굴하는 기능, 전략과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기능 등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구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인력도 신설 기구 내에 보강해야 할 것이다.

3. 정책목표, 중점분야, 적정규모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 반영

ODA 정책과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한 결과, 우선해야 하는 목표로서 전년도에 이어 공공외교와 관련된 목표를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국가이미지 및 신뢰도 상승(54.8%), 국제경제협력 강화(45.2%), 국제외교관계 강화(42%) 등의 순으로 ODA를 통해서 글로벌 수준에서 외교,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ODA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글로벌 인재양성 목표는 전년 대비 7.8% 감소하여 24.8%, 민간기업 해외진출지원은 19.6%, 민간일자리 창출 6.4%,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기여 5.2%로 전년에 비해 ODA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 자체는 줄어들었다.

또한 우리나라 ODA 최적의 분야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년도와 유사하게 정보통신 및 IT 기술과 관련한 분야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 정규교육과정 및 직업교육과 같은 교육분야, 공무원 연수나 전문가 교육과 같은 인적자원개발 모두 높은 우선순위를 보였다.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기초인력과 전문인력 양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적정 원조규모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인식을 물었다. 응답자 75.2%, 즉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와 같이 2020년까지 GNI 대비 0.2%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2017년 현재 수준은 GNI 대비 ODA가 0.14%로 국민 1인당 연간 약 5만원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다. OECD 29개국 중 15위 규모로 GNI 대비 원조비율로 중위값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을 0.2%까지 증가시키기로 국제사회와 약속하였다. 이를 환산하면 국민 1인당 약 6만 2,500원 수준이다.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1인당 지원액으로 적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다. 주관식 응답 결과, 약 87,173원이 적정 금액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원조 적정규모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정부의 정책 목표인 GNI 대비 0.2% 수준을 넘어서 더 높은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정책의 우선목표, 한국이 지향해야 할 중점분야, 예산의 적정 규모 등을 참고하여 향후 ODA 예산 배정과 전략 수립 시에 참고한다면 ODA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ODA를 통한 청년, 중장년, 퇴직자 경력개발 기회 제공

2017년 국정과제 목표 설정 당시에 ODA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다. 본 조사에서는 전문가 집담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한 소회를 듣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KOICA가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의 봉사단을 통합하여 해외봉사단 World Friends Korea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청년 봉사단원과 은퇴 후 시니어 자문관 등이 파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늘리고 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하다보니 현장에서 부정적인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2년 단위 시니어 자문관 파견제도를 1년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실제 파견 준비 및 적응기간을 제외

하면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청년들이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기간에서 일하도록 하는 인턴제도의 경우 1년 미만 단기직으로 일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민간기업에서 1년 이상을 경력직으로 인정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경력으로 인정되기도 어려운 짧은 기간이라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필요한 인력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 또한 일자리 창출 목표가 신설된 일자리 수로 평가되기 때문에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양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문가 집담회 결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어보다는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경험을 쌓고 ‘경력을 개발’한다는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경력개발이라고 얘기할 때 ‘청년, 중장년, 퇴직자’를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청년의 경우에는 대학생과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포함하여 ODA 사업 참여나 봉사단 활동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와 생활방식 등에 개방적으로 태도가 변화하게 되어 경험을 쌓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일자리도 창출되겠지만, 만일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중장년층에 대한 경력개발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주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ODA 사업과 해외 비즈니스 연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전략이 수립되어 국내 기업들이나 중장년층의 경제활동과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공사례가 있다면 연례포럼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 홍보하고 그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다른 나라의 공여기관들이 민간부문개발전략(Private Sector Development Plan)을 수립하고 개발도상국과 공여국의 민간부문을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퇴직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쌓여진 경력을 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ODA와 연계될 수 있다. 퇴직 후 시니어 자문관 제도를 통해 개발도상국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민간인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외국에서의 분쟁, 사건 및 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문제가 있을 경우 국가에서는 어떻게 대응

할 건지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5. 전문가 만족도 조사 향후 개선사항

본 조사는 2017년 국정과제 시행 1년차에 이어 2018년에도 ODA 전문가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국정과제 성과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끝으로 향후 만족도 조사를 연례적으로 실시할 경우 고려할 필요가 있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조사는 2017년 설계되어 2018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2019년 조사까지 3개년 연속으로 실시하여 전년대비 추이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DA 과제에 대한 인식도와 관련해 본 만족도 조사의 시작 단계에서는 특정항목에 가중치(중요도)를 더 부여하는 차별적인 부여방식을 채택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제한이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일한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물론 이는 만족도 조사 초기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안정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2019년 조사 이후에는 3년이 경과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시 항목만족도와 체감만족도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만일 조사를 새롭게 설계할 경우에는 내년도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평가 분야나 ODA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먼저 조사를 실시하여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때 항목만족도에 대한 가중치의 경우는 전년도 원자료를 활용해서 회귀분석 등을 통해 가중치를 계산하여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즉 전반적인 체감만족도와 항목만족도(조사항목)들을 상관분석 또는 회귀분석 등을 구하여 가중평균을 하는 방식 등을 의미한다.

또한 체계성, 통합성, 효율성으로 국정과제의 목표에 따라 항목만족도를 조사하고 각 항목별로 세부 질문을 3 내지 4개씩 구성하여 평점으로 항목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다. 2019년 이후에는 임기 중반을 경과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정과제 추진 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를 반영하여 설문조사 항목도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다. 국정과제의 추진 내용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면 가급적이면 각 항목들이 상호간에 배타성이 확보되고 관련 핵심내용이 반영되도록 설문문항을 설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추진체계 개편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통합평가체계가 변경된다면 국정과제 성과

평가에 대한 평가지표나 평가틀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 예를 들어, ODA 과제(사업)에 대해 크게 전문가 등이 포함된 정성위주의 평가(예: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와 그 사업의 체감만족도 등을 포함해 인식도를 평가(조사)하는 만족도 평가로 평가체계를 종합하여 고도화(高度化)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방식으로 종합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ODA 국정과제 평가방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평가방식을 변화시키면 국정과제 평가를 전년과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8). ODA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국무조정실 (2018). ODA 추진체계 개편방향, 2018년 하반기 「ODA 합동 워크숍」 발표자료
- 국무조정실·한국행정연구원(2017).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연구
- 이광희. (2016). 「정부업무평가 국민만족도 활용제고 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이석환. (2011). 시민주도형 정부성과관리 모형에 대한 경험적 연구: 공무원의 성과난이도 인식과 시민들의 성과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1): 1-22.
- 박중훈. (2010). 정책만족도 조사의 메타평가 및 제도개선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이유재. (2000). 고객만족 연구에 관한 종합적 고찰. 「한국소비자학회」 11(2): 139-166
- 윤수재 외. (2011). 중앙정부 정책만족도 개선방안에 대한 내부고객과 외부전문가의 인식분석: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3): 133-161.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연구 (2차)

